

2004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 우리와 다음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참여

---

2004. 2. 12(목) 충청하나은행 대강당



(301-825)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번지 1층

전화 331-0092, 팩스 252-6976,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ham.or.kr>

## 제9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목차

1. 식 순 .....	3
2. 공동의장 인사말 .....	4
3. 제8차 총회 회의록 보고 .....	6
4. 제9차 정기총회 경과보고 .....	8
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규약 .....	9
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16
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3년도 감사보고 .....	44
8. 임원투표 결과 승인의 건 .....	46
9. 기타임원 선임의 건 .....	47
10. 집행위원 선임의 건 .....	49
11. 2004년 사업기조와 과제 심의의 건 .....	50
12. 2004년 예산안 심의의 건 .....	59
13. 규약 개정의 건 .....	61
14. 회원투표 및 임원선정 규정 제정의 건 .....	64
15. 참여자치시민상, 모범회원상, 올해의 깨끗한 정치인상 등 .....	67
1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및 활동자료 .....	70
17. 복지포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정책위원회 활동보고 .....	133
18. 낙천낙선운동이란? .....	140

## 제9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식순

☐ 제1부 만찬

- ☐ 간단한 저녁식사

☐ 제2부 개회식

- ☐ 개 회  
☐ 국민의례  
☐ 회원생활문화규범 낭독  
☐ 총회경과보고(p8)  
☐ 상임의장 인사  
☐ 참여자치시민상, 모범회원상, 올해의 정치인, 감사패 시상(p67)  
☐ 광 고

☐ 제3부 총 회

- ☐ 개 회  
☐ 성원보고  
☐ 총회서기선출  
☐ 회순채택(p3)  
☐ 전회의록 보고(p6)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3년 사업 및 결산보고(p16)  
☐ 감사보고(p44, 및 별지)  
☐ 안건심의  
① 임원선거 결과 승인의 건(p46)  
② 기타임원 선임의 건(p47)  
③ 집행위원 선임의 건(p49)  
④ 2004년 사업기조와 과제 심의의 건(p50)  
⑤ 2004년 예산안 심의의 건(p59)  
⑥ 규약 개정의 건(p61)  
⑦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정 제정의 건(p64)  
⑥ 기 타  
☐ 회의록채택  
☐ 폐 회

## □ 의장단 인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2004년은 여러모로 기대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개혁의 분수령이 될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 10주년을 1년여 앞둔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선화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선화동 시대를 새롭게 여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부터 지역시민운동 단체로는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온라인투표로 치루었습니다. 매달 회비를 내는 회원만 7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 한분한분이 정기총회에 직접참석 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시도한 첫 온라인 투표는 35%의 회원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과 직접투표를 통해 조직민주주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과 같은 중요한 안건에 있어서는 투표를 통해서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총회장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하는 회원들의 요구가 큰바, 올해부터는 회원이 참여하는 온라인투표의 경우 제9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이끌어갈 주요임원에 대해 전 회원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렇게 회원들이 함께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총회가 조금은 딱딱한 내용으로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원여러분께서 직접 꼼꼼히 따져보고 참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2004년 우리는 내외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슬기롭게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400여만명에 육박하면서 최근 경기의 양극화와 신빈곤층의 양산과 구조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또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타결될 것으로 보이기는 어려운 가운데 교착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가운데 수구언론을 비롯한 냉전보수 집단의 흔들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의원선거와 구청장 보궐선거 또한 정치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은 물론, 지

역정치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입법의 제정은 중앙집권제로의 탈출과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모색하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중앙권력의 저항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은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지방분권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8년간 축적해온 시민운동의 질적양적 경험과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부정의, 불합리, 부패로 점철된 한국사회와 지역사회를 개혁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새로운 세대를 발굴하고 더 많은 회원들을 조직해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하여 회원의 직접참여를 독려해내고, 밖으로는 연대와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의 개혁은 물론, 지역사회를 개혁해내는 중심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및 대전시민이 보내주신 시민운동에 대한 성원과 지지, 참여에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희망을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2월 12일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 □ 제8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온라인총회 및 회원대회 보고

- 때 : 2003년 2월 20일 오후 7시~9시
- 곳 : 대전광역시 3층 대강당

### 1). 온라인총회 투표 결과

- ▷ 선거인 명단                      총 643명(안건설명 및 투표용지 우편발송)
- ▷ 투표참여 회원                      총 222명(투표율 34.5%)
  - 방문 및 우편 참여      55명
  - 인터넷 투표참여      152명
  - 현장 투표참여      15명
- ▷ 선거 결과
 

- 안건1/ 감사보고 승인의 건	찬성 221표	반대 1표
- 안건2/ 2003활동기조와 과제, 예산안 승인의 건	찬성 221표	반대 1표
- 안건3-1/ 공동의장단 승인의 건	찬성 212표	반대 9표
- 안건3-2/ 감사 승인의 건	찬성 218표	반대 4표
- 안건3-3/ 집행위원장 승인의 건	찬성 216표	반대 5표
- 안건3-4/ 집행위원 승인의 건	찬성 209표	반대 12표
- ▷ 인터넷 투표참여 회원 가운데 별도 의견 개진 : 19건
  - 온라인 총회를 계기로 보다 발전하는 시민단체가 되기를 격려하는 의견
  - 2003년도 예산안 가운데 이월금이 전년도 결산보고의 잔액과 다른 점 지적
  - 어려운 농촌문제에 대한 관심과 친 정권주의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
  - 실무자의 안정적인 생활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의견
  - 회원배가운동 전개, 후원회원 조직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화를 바란다는 의견
  - 다양한 회원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자와 회원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는 의견
  - 사이버 상에서의 토론 및 월1회 정도의 정례회를 추진하자는 의견
  - 적극적 참여회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이름만 올려져있는 임원은 배제하자는 의견
  - 60세 이상의 노인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의견
  - 복지, 인권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
  - 주말 가족과 함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
  - 자비를 모아 의미있는 탐방이나 외국방문을 활성화하자는 의견
  - 일요일 축구모임을 좀 더 쾌적한 장소로 이전하자는 의견 등 제기

### 2). 회원대회 행사 내용

- ▷ 일시 및 장소 : 2003. 2. 20(목) 저녁 7시~9시
- ▷ 들어가는 마당
  - 놀이방 운영, 법률상담(송동호), 의료상담(신현정), 치과용품 전시회, 현장투표, 회원사진 촬영
  - 참여광장 서명, 간단한 식사
- ▷ 어울림 마당
  - 반전과 평화를 향한 입장(프리젠테이션)

- : 화재위험과 대구참사 추모로 촛불 대신에 국화꽃 들고 입장 - 한반도 모형에 국화꽃 꽂음.
- 회원생활규범 낭독(프리젠테이션)
- 환영의 인사(동영상): 10~60대 세대별 회원 대표(한두류, 강민아, 고제열, 김용분, 이돈수, 오용균)
- 들어가는 공연 : 소리마당 풍물놀이 '설장고'
- 수상자 시상(프리젠테이션) : 공동의장 3인 시상  
: 한발레츠(참여자치상), 유덕준(참여시민상), 윤선희(정치인상), 한발넷(감사패) -소감 발표
- 축하공연 : 토마토밴드(신찬호 외), 판토마임 '풍선껌'(장수찬 회원가족)

#### ▷ 다짐의 마당

- 활동보고 1(프리젠테이션) : 2002활동일지
- 활동보고 2(동영상) : 참여자치연대 활동 동영상
- 온라인 총회 결과 발표(송인준 / 프리젠테이션)
- 신임 임원 인사 : 신임의장단, 집행위원장
- 다짐의 공연 : 느티나무
- 소망과 다짐을 담은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 불신의 벽 넘어 하나로 : 불신의 풍선 터트리기

#### ▷ 기타

- 기념품 전달

#### ▷ 총회 참석자 수

- 회원가족 및 자원활동가 모두 포함하여 200여명 (대강당 170여명 참석)

### 3). 온라인총회 및 회원대회 평가

회원참석 독려 연락과정에서 연락처 및 주소록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됨을 절실히 느꼈다. 아울러, 행사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회원들이 한자리에 함께하였다는 점과 가족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에 비해 내용을 채우는데는 부족함이 많은 회원대회였으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향하고자하는 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그러나 조직민주주의를 위한 회원들간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행사진행 총괄기획 능력이 부족했다. 많은 회원들이 행사에 편하게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요안건이나 임원선출의 경우 회원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갖고 의제에 대한 공유하는 기회도 갖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정기총회 및 회원대회에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기 위한 개최시기 및 일정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사준비에 치중하면서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건인하기 위한 노력은 좀 부족했으며, 앞으로 조직민주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아울러, 회원자격 및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선을 할것인지 아니면 현구조로 그냥 갈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 총회준비위원회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9차 정기총회 경과보고

10월 14일 제4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9기 정기총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이현주 집행위원장과 협동처장단 등으로 구성되는 총회준비 소위원회를 구성기로 결의하다.

11월 9일 1차 총회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회개최 방법 및 일정계획의 검토와 참여자치시민상 및 모범회원상 등의 심사계획에 대해 논의하다. 특히,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규약에 의거하여 정권조치하되, 총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기로 약속한 회원은 그러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다.

11월 11일 제4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3년 한해를 평가하는 송년워크숍(12월 26일(금) 오후 7시) 개최와 더불어 참여자치시민상, 참여시민상, 올해의 정치인상을 선정하여 시상기로 결의하다.

1월 9일 협동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총회준비 일정 및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임원선출과 총회를 분리개최기로 했으며, 규정개정, 임원임기 연장 등의 규약개정안에 대해 검토하다.

1월 13일 6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04년 정기총회 추진일정 점검 및 규약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주요임역원 추천에 대해 깊이있는 검토를 하다.

1월 14일 복지포럼 총회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 5일 오후 7시, 참여광장에서 2004년도 복지포럼 정기총회를 개최기로 의결하고, 주요임역원 및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하다.

1월 14일 참여자치시민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하다.

1월 15일 정책위원회 정기총회를 참여마당에서 개최하고, 정책위원장 등 주요임역원에 대한 선임과 1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 2004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논의하다.

1월 19일 2004년 제9차 정기총회를 인터넷과 월간지 『참여와 자치』를 통해 공고하였으며, 19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동의장단, 집행위원장, 감사에 대한 선거를 방문, 우편, 인터넷투표를 개시하다.

1월 27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정기총회를 참여마당에서 개최하고, 주요임역원 및 2004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심의의결 하다.

1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김제선 사무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정사모, 윤종삼 감사의 2003년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다.

2월 3일 참여광장에서 집행위원회 및 2004년 사업기조와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기총회 안건으로 제출할 2004년 사업기조와 과제안, 예산안, 규약개정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참여자치시민상 등의 수상자를 선정하다.

2월 5일 복지포럼 정기총회를 참여광장에서 개최하고, 주요임역원 및 200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의결하다.

2월 12일 오늘 제9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에 이른다.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규약

1995년 4월 28일 창립 총회 제정

1997년 2월 14일 2 차 총회 개정

1998년 2월 26일 3 차 총회 개정

1999년 2월 26일 4 차 총회 개정

2000년 1월 25일 5 차 총회 개정

2001년 1월 16일 6 차 총회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우리 모임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라 부른다.(1998.2.26 3차총회개정)(2001.1.16 6차총회 약칭 삭제)

제2조(목적) 우리 모임은 지역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우리 모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벌인다.

1.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인권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사업
2. 정직과 양심이 우선되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사업
3. 모든 시민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여러 사업
4.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
5.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타 여러 사업

제4조(소재) 우리 모임의 주된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안에 둔다.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우리 모임의 목적과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과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은 규약에 따라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으로 사업과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나 정기적인 사업과 활동에 직접 참여치 못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우리 모임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단체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회원이 되고자하는 사람과 단체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1.1.16 6차 총회 개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우리모임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보고받을 권리와 우리 모임의 회의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된다.

2. 회원은 규약과 우리모임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우리모임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장 조 직

#### 제1절 총 회

제8조(성격과 구성) 우리모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1997.2.14 2차 총회 전문삭제)

2. 총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단체회원이 선임하여 파송하는 총회 회원으로 구성하되 단체회원의 총회 회원의 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기준으로하여 집행위원회에서 배정한다.(2001.1.16 6차총회개정)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9조(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4 이상이 연서명으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의장단, 감사, 집행위원장 등 임원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001.1.16 6차총회 개정)

4. 주요사업 방향 수립과 사업보고, 승인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의1. 우리모임의 해산과 다른 조직과의 통합에 관한 사항

5. 우리모임 운영에 관한 기타 중대한 사항

#### 제2절 운영위원회

제11조(성격과 구성) 전체 임원회의인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요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년2회 이상 모인다.(2001.1.16 6차 총회 전문개정)

제12조(소집) (1997.2.14 2차 총회 전문삭제 )

제13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2001.1.16 6차총회 전문삭제)

제 3절 의장단

제14조(의장단) 우리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단체를 대표하는 약간명의 공동의 장단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의장을 선임한다.

제4절 운영기관

제14조의 1(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우리 모임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기관이며, 그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2001.1.16 6차총회 전문개정)

1. 집행위원회는 의장단,집행위원장,사무처장,협동사무처장과 부설기관, 회원단체, 회원조직, 사업단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 집행책임자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는 일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총괄하며 2개월 마다 1회의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수시로 모인다.

3. 집행위원회는 운영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운영내규는 총회에 보고 승인 받아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의장단,집행위원장,사무처장과 협동사무처장,회원단체와 회원조직의 대표자와 집행 책임자, 각 위원회와 사업단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14조의 2(회원사업위원회) 우리 모임의 회원사업 및 재정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사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001.1.16 6차총회개정)

제 14조의 3(정보공개사업단) 우리모임의 권력 감시 사업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정보공개사업단을 구성할 있다.(2001.1.16 6차총회개정)

제 14조의 4(시민사업위원회) (1999년 2월 26일 제 4차 총회 전문삭제 )

제 14조의 5(지역운동위원회) 우리모임의 지역운동 사업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지역운동위원회를 구성할 있다.(2001.1.16 6차총회개정)

제 14조의 6(여성위원회) 우리모임의 여성사업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할 있다.(2001.1.16 6차총회개정)

제 14조의 7(연대기획위원회) 우리모임의 연대사업과 각종사업의 정책의 연구 및 기획사업을 위

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연대기획위원회를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2001.1.16 6차총회개정)

제 14조의 8(재정위원회)우리모임의 재정사업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재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01.1.16 6차총회개정)

제 14조의 9(정책위원회) 우리모임의 정책사업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001.1.16 6차총회개정)

제 14조의 10(회보편집위원회) 우리모임의 회보편집과 각종 홍보사업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회보편집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2001.1.16 6차총회개정)

제15조(사무처) 우리 모임의 실무집행기관인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1997.2.14 2차 총회삭제)
2. 사무처는 제반 일상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3. 사무처는 처장과 협동처장 시민감시국, 회원사업국, 시민사업국, 연대기획국 등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1999. 2.26 개정)
4. 사무처장은 여러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해당 기관의 실무를 총괄하여 지원한다.

#### 제4절의 1 회원조직 과 특별위원회

제16조(회원조직) 회원은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다음과 같은 회원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각 기관들은 회원조직의 활동을 지원 협력한다.

1. 회원포럼은 관심 분야의 동일성이나 직업계층의 동일성에 기반하여 공동의 활동을벌이는 회원모임
2. 지역조직은 지역별 생활근거지의 동일성에 기초하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회원모임.

제16조의1(특별위원회) 특별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5절 고문·자문위원·전문위원 및 부설기관

제17조(고문·자문위원 등)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한 지도·자문을 위해 고문과 지도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의장단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2001.1.16 6차총회개정)

제17조의 1(대변인)(1998.2.26 3차총회 전문삭제)

제17조의2 (부설기관) 우리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의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올바른 시민 대표의 선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사업을 추진하는 참여자치운동본부
2.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을 위한 민간 지도력의 개발과 훈련을 위한 여러사업을 추진하는 시민교육센터
3.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여러사업을 추진하는 공정선거운동본부
4.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의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는 여러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정책센터
5. 우리모임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타 부설기관

제 17조의 3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시민의 공공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해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내규로 정한다.(1999년2월 26일 4차 총회 신설)

#### 제6절 임원의 임기와 의결정족수

제18조(의결정족수) 우리 모임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임원의 불신임과 회원의 징계와 복권
3. 우리모임의 해산과 다른 단체와의 조직 통폐합

제19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장 상 별

제19조의1 (회원의 표창) 모범적인 활동을 벌인 회원을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한 회원에 대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정권,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000년 5차 총회 개정)

1. 우리 모임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 우리 모임의 규약과 주요결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3.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을 경우
4. 시민운동단체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21조(복권) 징계된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21조의1 (참여자치시민상) 참된 주민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와 단체, 기업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참여자치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장 재 정

제22조(재정) 우리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3조(회계년도) 우리모임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000년 5차정기총회 개정)

## 제6장 감 사

제24조(감사) 총회는 약간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는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부 칙

제1조(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되고 총회에서 개정한다.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 이규약은 총회에서 통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1995년 4월 28일 창립총회 제정

## 부 칙(1997년 2월 14일 2차 총회 개정)

제1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일반관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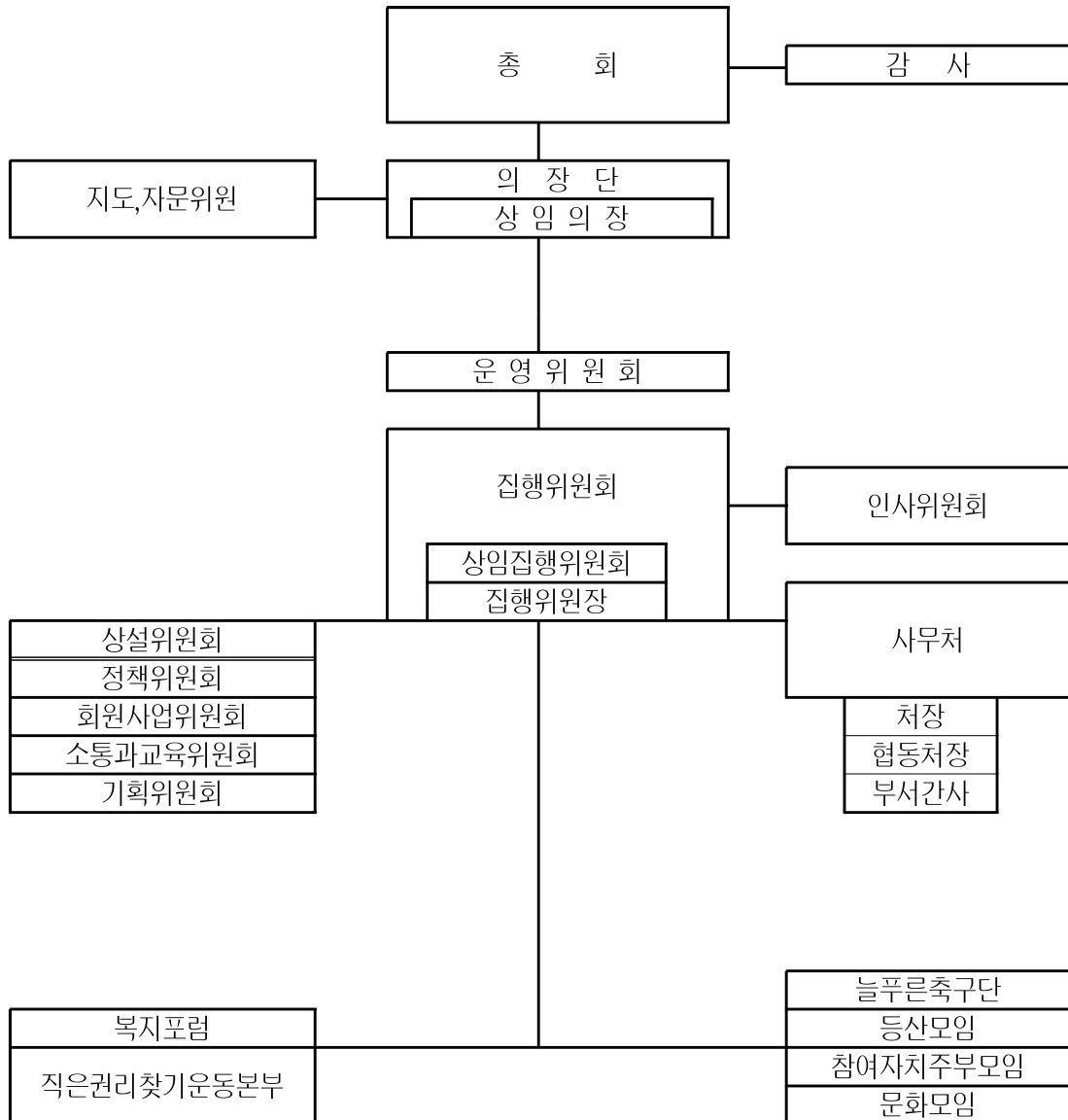
제2조(시행) 이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이 규약 발효이전에 회원(단체)으로 가입한 회원은 이 규약이 정한 정회원으로 본다. 단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회원(단체)은 준회원으로 본다.

## 부 칙(2001.1.16 6차총회 개정)

제1조 이 규약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되고 총회에서 개정한다.

◀ 대전참여자치연대 조직표 ▶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보고자 : 총회준비위원회

### 1. 조직 개요

- 1/3 사무식
  - 7 제3차 총회준비위원회
  - 8 산내학살대책회의
    -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운영협의회(~1/9)
  - 9 연봉 입주자 신년교례회
    - 복지포럼 회장단 모임
  - 13 여중생범대위+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 반전평화선언 내외신 기자회견
    - 대전연대회의 신년워크샵
    - 총준위 행사준비소위
  - 15 교통규제심의위 경찰청장 간담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세미나
  - 16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 17 대전시티즌발전시민협의회 총회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캠페인 전국MBC 동시중계
    -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대전,충남,충북 공동입장 발표
    - 제3회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및 신년다짐대회
  - 20 대전매일, 지방분권 좌담회(김제선 사무처장)
    - 대전광역시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위촉식
  - 21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조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정책협의회
    - 대전충남분권연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내부세미나
  - 22 축구모임(늘푸른축구단) 총회
    - 시내버스개혁모임 신년하례회
  - 23 문화모임 총회준비모임
    - 고속철도 지상화 반대 논평
  - 24~25 전국연대회의 제5차 비전워크샵(송실대)
    - 대전연대회의 운영위(총회준비위)
    - 복지포럼 총준위
  - 25 참여자치운동지역연대 집행위
  - 26 등산모임 정기산행



- 축구모임
- 27 총준위 2차 행사준비소위
  - 정책위원회
- 28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총준위
- 29 대전참여자치연대-환경운동연합 신년연찬회
  - 시내버스 관련모임
- 2/4 대전연대 총회준비위원회(환경연합)
  - 5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원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 분권연대 집행위원장회의(대구)
  - 6 협동처장단회의
    - 주부모임
    - 민주화운동사료전시회 실무자모임
  - 7 충청남도 분권토론회 참석(박상우 국장)
    - 한겨레신문 토론회 참석(김제선 사무처장)
    - 사회포럼 '연대와 성찰'
    - 2003년 사업실천을 위한 민간인진상규명시민단체협의회 워크샵
    - 전국분권연대 정책협의 워크샵
  - 8 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 9 늘푸른축구단 정기모임
  - 10 기록문화포럼 운영위원회
    - 민주화운동사료전시 실무자모임
  - 11 집행위원회
    - 대전연대 총회준비위원회
  - 12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총회준비위원회
  - 13 대전복지포럼 정기총회
    - 대전충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전시 추진위 정기총회
  - 14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정기총회
    - 교통규제심의위원회
  - 16 늘푸른 축구단 정기모임
  - 17 경륜장 공청회, 민주화운동사료전시 준비모임
  - 18 정기총회 총괄회의
  - 2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3년 정기총회 및 회원대회
  - 21~2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표자회의
  - 27 회보편집위원회, 대전MBC 경륜장 토론회 녹화
  - 28 정책위원회 정기총회

- 충남대학교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
- 대전연대 운영위원회
- 전국연대 정기총회(서울)
- 3/1 등산모임 정기모임
- 3 기록문화포럼 운영위원회
- 4 대전연대 운영위원회
- 총회 행사준비 소위 평가
- 민주화사료전시 운영위원회
- 6 대전연대 2003년 정기총회
- 7 복지포럼 정책협의회
- 8 산내학살 대책회의 유족회의, 대전시 공무원 특강(금홍섭 국장)
- 충남대 자원봉사학생 오리엔테이션
- 10 민주화운동 사료전시회 실무자모임
- 11 정치개혁구민협의회 워크샵(서울)
- 대전연대운영위원장단회의
- 한국전쟁전후 양민학살특별법 제정 촉구 인권위 농성장 방문(산내 대책위)
- 12 정무부시장 간담회
- 분권연대 운영위원회
- 대전시 택시공급계획 용역 보고회 참석(금홍섭 국장)
- 13 민연련 워크샵
- 14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건립반대 1인시위(김제선 사무처장)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회(서울)
- 15 기록문화포럼 월례발표회
- 충남대민주동문회 총회
- 17 분권운동대전본부 결성 준비회의
- 서구포럼 결성준비위원회 총회
- 18 민주화운동역사전시회 추진위 집행위원회
- 대전연대회의의 운영위원회
- 작은권리 집행위 겸 최저임금법 워크샵
- 19 전국 지방분권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20 대전mbc 시내버스 개혁 토론회(금홍섭 국장)
- 21 새로운 정치개혁사회운동체 모색과 전망 토론회
- 고속철도 대전통과 구간 시민공청회(금홍섭 국장)
- 전쟁반대, 파병반대 육군본부 앞 시위
- 지방분권 충남본부 창립대회 침 지방분권충청지역협의회 결성 준비회의(아산)

- 22 자치현장 2주년 기념 지방분권토론회(서울,김제선 사무처장)  
전쟁반대 시민대회(대전역)
- 24 대전매일 지방언론 활성화 대책 간담회(김제선 사무처장)  
복지포럼 집행위 워크숍-참여정부 복지정책
- 26 지방분권 국민운동 기초단체협 분권특위 간담회(전주)  
중구자활후견기관 자문위원회(김제선 사무처장)  
오마이대전문화모임-명칭 개칭 참여자치연대 문화모임
- 27 분권운동대전본부 결성준비회의  
중구자활후견기관 개소식  
대전의제 21 상임위원회  
파병지지 국회의원 지구당 점거농성
- 28 민주화운동역사전시회 기자간담회  
정책위원회
- 29 여성환경포럼 회원대회
- 31 경륜장 관련 전의수 대전시 문화체육국장 면담
- 4/1 대전매일 정치부장 면담-지방신문살리기 운동 협조 요청  
교육개혁연대 결성 기자회견  
충남대 사회학과 학생 방문 교육(박재묵교수 수강생)
- 2 민주화운동역사전시회 추진위 운영위
- 4 분권운동 충청협의회 결성 기자회견  
소통과 교육위원회 1차 회의  
처장단회의
- 5 등산모임
- 7 이시철 교통국장 간담회
- 8 산내대책회의, 주부모임
- 9 민주화운동역사전시회 개막리셉션  
 시내버스 모임 운영위원회  
분권운동 대전본부 대표자회의
- 10 염홍철 시장 면담-경륜장 및 분권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용역보고회  
지방분권운영위원회  
지방분권과 기록자치를 위한 심포지움 추진위원회 모임  
자원봉사 담당자 교육  
여성환경포럼
- 11 상임집행위원회

- 전국지방분권 운영협의회
- 회계 실무자 교육
- 경륜장 득실분석 기자회견
- 12 역사전시 글짓기 대회(시청)
- 반전평화집회(대전역)
- 13 축구모임
- 14 공익소송 실무자 모임
- 15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회
- 목원대 행정학과 학생교육
- 천안YMCA 특강(김제선 사무처장)
- 16 의제21운영위원회
- 민주노총경륜장반대 특강
- 복지포럼 사업모임
- 17 모두사랑이사회 후원회(엑스포아트홀)
- 18 서구포럼 창립대회
- 19 국가인권위 간담회(홍인호텔)
- 디트뉴스, 오마이뉴스, 환경연합, 참여자치연대 친선운동회
- 반전평화 결의대회
- 2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환경연합 회원운동회(충남여중),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21 염홍철 시장 면담, 유성미 국장 생일
- 22 대전경륜장 준비회의
- 서구관변단체 지원 관련 성명
- 23 국세청 세정혁신방안 간담회
- 정치개혁연대 5차 운영위원회
- 역사전시 평가회
- 24 균형발전 세미나(엑스포 국제회의장)
-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 창립기자회견
- 2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
- 신행정수도건설 토론회(충남대)
- 교통규제심의위원회
- 27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28 시의회 토론회(박상우 국장)
- 협동처장단회의
- 복지포럼 집행위원회
- 29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김제선 사무처장)

- 자치행정과 간담회(박상우 국장)
- 3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 합동 실무워크숍(회원사업)
  - 의제21추진협의회 공모사업 심사
- 5/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동회(갑천)
  - 역사전시회 2차 평가모임
- 2 정책위원회 '도시안전 정책토론회(시청3층 세미나실)
- 4 등산모임 정례등반, 축구모임
- 7 지방분권모임(대구)
  -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 창립구성회의(서울)
- 9 집행위원회
  - 지방분권 운영위원회(울산)
  - 신행정수도방향과제 토론회(박상우 국장)
  - 보성초등 관련 기자회견
  - 산내대책회의
  - 경륜장집행위원회
  - 불안전노동철폐 연대회의(민주노총)
- 10 창원경륜장 현장방문 동행
- 11 늘푸른축구모임
- 12 문화모임
  - 정진항 시의회의원 사무처 간담회
  - 사법모니터 위촉식(법원, 유성미 국장)
- 13 공직협 간담회 - 내부고발운동 협력 합의
  - 민언련 운영위원회
  - 디트뉴스 초청 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 시민의신문 좌담회(김제선 사무처장)
  - 경륜장정보 비공개 이의신청
- 14 전국연대회의 운영위원회
  - 경륜장관련 염시장 질의문 발송
  - 목원대 부총장 면담 / 시민단체와의 협력논의
- 15 자치학회 토론회 참석(서울, 김제선)
  - 대전연대운영위원장회의
  - 경륜장 여론조사 결과 기자회견(시청)
- 16 민주평통자문위 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대전)
  - 경륜장건립저지 범시도민 서명운동 발대식(시청)
- 17 민노당 지방의원 총회 지방분권 발제(김제선 사무처장, 광주)

- 18 늘푸른축구모임
- 19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노조 간담회
  - 외국인노동자센터 창립총회
  - 정보공개위원회 심의 - 기각
- 20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준비회의
  - 기록자치 세미나
  - 민언련 창립3주년 세미나
- 21 주부모임
  -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간담회
  - 신입간사 면접
- 22 경륜장 토론회(여성환경포럼주최, 금홍섭 국장)
  - 침례신학대 학생 사무실 방문
  - 동구포럼 - 대청호 관광활성화 토론(김제선 사무처장)
- 2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서울)
  - 김영완 회원 수양부모협회,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 불안전노동철폐 기획단 회의
  - 행정자치부장관 주재 지역한안 토론회 참석(공동의장)
  - 정치개혁시민운동체 구성 관련 토론회
- 25 늘푸른축구모임
- 26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복지포럼 집행위원회
  - 불안정노동 기획회의
- 27 인권위원장 간담회
  - 불안전연대 모임
  - 대전분권 대표자회의 및 집담회
- 28 경제특구 저지 집회
  - 행정동우회 조례반대 성명
- 29 대전연대 운영위원회
- 30 모두사랑 이사회
  - 분권충청협 정기모임
- 31 차별철폐 100일걷기대회
  - 교통방송 버스중앙차로제 토론참석(금홍섭 국장)
  - 지방분권 전략팀 토론회(대구)
- 6/2 협동처장단 회의
  - 문화모임

- NEIS 도입반대 기자회견 및 논평발표
- 복지포럼 사회복지학교 안내포스터 제작
- 3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준비회의(서울)
  - 김두관 장관 행정정보공개법 면담(서울)
  - 차별철폐 100일 걷기 문화제(대전역)
- 4 시민정치 네트워크(대구)
- 5 불안전노동철폐 집행위
- 7 지방분권 전략회의(대전)
- 8 늘푸른축구모임
- 9 행정수도 워크샵
  - 한일시민단체 일본 유사범 관련 규탄 공동성명 발표
- 10 민주화사료전시 준비회의
  - 환경연합, 참여자치 공동워크샵
  - 시정참여단
  - 불안전노동철폐 집행위원회
  - 정치개혁시민운동체모임
- 11 대전엠비시 준공기념식 참석
  - 경륜장반대 거리서명운동
  - 금강보존네트워크 회의
  - 대전대 사회자본 토론회 참석(박상우 국장)
- 12 경륜반대 거리서명
- 13 집행위원회
  - 지방분권국민협 운영협의회
  - 효순미선 1주년 집회
  - 산내학살지 현장보존관련 동구청장 면담
- 15 사무처 실무자 단합대회(~16일까지, 지리산)
  -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16 경제특구대책회의
- 17 작은권리집행위
  - 복지포럼 겸 집행위원 단합대회(월평복지관)
  - 경륜장반대 거리서명
- 18 청주도시개혁사례 발표(금홍섭 국장)
  - 주부모임
  - 주부교실 토론회 참석(김제선 사무처장)
  - 연대회의 운영위원회

- 19 균형발전위 주최 토론회 참석(김제선 사무처장)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상황 설명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정치개혁을 위한 간담회  
경제특구 교육
- 20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
- 24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간담회크 대표자회의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지방분권 전략팀 회의(부산)  
정치개혁 준비모임
- 21 비정규직 교육(민주노총)
- 22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23 금강보존네트워크 토론회  
경제특구 토론회  
사회복지학교 개강
- 25 집행위 행정수도이전 워크숍  
여성환경포럼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관련 mbc 초대석 출연(금홍섭 국장)
- 26 시민정치네트워크 워크숍  
대전연대 운영위  
사회복지학교 2강
- 2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  
청와대인사보좌관실 주최 인사혁신 토론회(2시, 김제선 사무처장 주제발제)  
공무원직장협의회 특강(김제선 사무처장)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준비회의
- 29 늘푸른축구단
- 30 이원범 첫 공판(박상우국장 참석)  
대전의제21 운영위원회  
이시철 교통국장 면담
- 7/1 분권충청권협의회  
사회복지학교 3강
- 2 정치개혁시민운동체 준비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여성정책위 주관 토론회(이은구 교수 외 참석)
- 3 사회복지학교 4강
- 4 사이버소식지(63호) 발송



- 교통규제심의위원회(금홍섭 국장 참석)
- 6 늘푸른축구단
- 8 산내학살 네 번째 위령제
  - 21세기 정책대안포럼 준비위원회
  - 사회복지학교 5강
- 9 전주 화상경마장 관련 토론회 주제발제(금홍섭 국장)
  - 지방분권국민운동 양대법안 최종확정모임(전주)
  - 문화모임
- 10 지방분권 대전협의회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학교 종강식
- 11 7월 집행위원회
  - 지방분권협의회 대표자회의
- 1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운동본부 3자간 간담회(서울)
  - 도시가스 관련 간담회
- 15 작은권리
- 16 주부모임교통관련모임
  - 시내버스 관련 대책모임(의제21)
  - 활동가협의회
  - 경부고속철 통과방안 토론회
  - 문화모임
  - 구마모토 현민의회 방문단 방문
- 18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회
- 20 축구모임
- 21 사무처 회의
- 22 시민운동활성화 방안 토론회
  - 충청남도 공무원 특강(김제선 사무처장)
- 23 배재대 총장 면담(김제선 사무처장)
- 24 분권운동전략회의
- 28 사무처회의
  - 의제21 상임위원회
- 30 지방분권국민운동 양대법안 논의모임(속리산)
  - 분권관련 대전방송(TJB) 녹화(박상우 국장)
- 31 정개런 준비위
  - 대전연대 운영위원회
- 8/6 문화모임

- 7 전국분권운영협의회(안동, 김제선 사무처장, 박상우 국장)
- 8 집행위원회
  - 산내대책회의 정례모임
  - 시민정치네트워크 수련회(동학사)
- 9 대전충남 8.15통일축전(서대전시민광장)
- 10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11 주간회의
- 12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회(여운철 변호사 사무실)
  - 통합연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
- 13 지방분권대전본부 7차 운영위원회
  - 신행정수도 관련 기관단체 비공개회의
  - 지방분권특별법 인터넷 토론회
- 14 여성환경포럼 운영위원회
  - 지방분권관련 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서울)
- 17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18 주간회의
  - 사무처 건강검진
  - 문화모임
- 19 민주당도박장기획단회의 참석(도박장반대전국네트워크, 서울)
  - 배제대 총장 초청 지방분권대전본부 대표자 간담회
- 20 BRT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론회(시청, 버스사랑시민모임)
- 21~23 지역운동연대 하계수련회(대둔산)
- 24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25 주간회의
  - 보행환경회의 참석(금홍섭 국장, 시청)
  - 균형발전 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시청)
  - 용두동 철거민 기자회견(박상우 국장, 중구청)
  - 홍명사가 철거 관련 질의(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이원범 선거법위반 3차 심리(박상우 국장, 법원)
  - 법원친절도 모니터 결과 발송(유성미 국장)
  - 집행위원회 공지(유성미 국장)
- 26 창원 시내버스 활성화 및 BRT시스템 도입 토론회(금홍섭 국장 주재발제, 창원)
  - 분권전략회의(특별법 제정 추진결의, 대전)
  - 활동가협의회 2차교육 준비모임
- 27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토론회(서울)

- 신원식 대전MBC 노조위원장 간담회
- 28 대전시 2004년 예산편성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시청)  
대전연대 운영위원회(김제선 사무처장)  
문화모임(사무실)
- 29 전국연대회의 총선대응 워크샵(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김제선 주제발표  
지방분권국민운동 전략회의(서울) -김제선 사무처장  
여성환경포럼, 충청지역 연찬회(유성 유스호스텔) -유성미 국장 참석  
소식지 '참여와자치' 발송
- 30 주부모임  
문화모임 금산인삼축제 모니터(문화모임)
- 9/1 주간회의  
4차 집행위원회  
버스사랑시민모임 실무자 모임
- 9/2 정치개혁연대 총선워크샵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의원회관)  
서구의회 분권특위 학습모임 특강(김제선 사무처장)  
3대전정치개혁연대, 대전연대 공동주최 총선워크샵  
행정자치부자문위원회 참석(김제선 사무처장)  
대전의제21 상임운영위원회 참석  
지방분권 국회의원연구모임, 분권자치포럼21과의 토론회(서울)
- 4 MBC시사레이더 녹화(자치단체장 총선출마 이대로 좋나) - 박상우  
교통규제심의위원회(금홍섭 국장)
- 5 지방분권협의회 9차운영협의회(공주)  
복지포럼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집행위원회
- 6 충남대 사회봉사자 오리엔테이션(사무실)
- 15 지방화대전선언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이은구 정책위원장)
- 16 한남대 행정대학원 출강시작(김제선 사무처장)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  
작은권리 집행위원회
- 17 (전국)정치개혁연대 운영위원회(김제선 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회참석(서울)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운영위원회  
 시내버스민관공동대위  
지방분권대전본부 운영위원회

- 국민연금 제도개선 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
- 대전KBS 라디오 인터뷰(이은구 정책위원장)
- 18 참여연대 후원의 밤(서울)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 활동가협의회 정기모임
  - 문화모임
  - 정치자금실사 입력작업
- 19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총선워크샵 주제발표(김제선 사무처장)
  - TJB대전방송 BRT시스템 도입 토론회 참석(금홍섭 국장)
  - 시의회 시민단체 초청간담회 참석(김선건의장, 의회)
  - 주부모임
  - 지방분권전국 전략회의(대구, 박상우 국장참석)
- 22 보육조례 준비모임
  - 개혁입법 실무회의
  - 반전평화일 준비모임
- 23 대전 시내버스노조 간담회
- 24 문화모임 주최 강연회(세부계획 미정)
  - 전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련회(~25일, 목포)
  - 리더쉽교육(~26일까지, 유성미 국장참석, 서울)
- 25 대전연대회의 운영위원장단회의
  - 문화모임 특강(충남대)
- 26 처장단회의
  - 대전MBC 창립기념 감사패 수여(김제선 사무처장)
- 27 9.27반전평화국제행동의날 집회 개최
- 29 사무처회의 및 회보기획회의
  - 경륜장반대 시사회 개최
  - 개혁입법 실무회의(사무실)
- 30 대전시 국정감사 방청
  - 대전정치개혁연대 준비위 회의
  - 국감대비 경륜장반대 항의집회
- 10/1 전국분권 전국대행진 실무준비회의
  - 전국분권운동 대표자회의
  - 전국분권위 균형발전 간담회
- 2 어린이도서관지원운영가 교육
  - 여성환경포럼

- 늘푸른축구모임 임원모임
- 이라크파병반대 결성회의
- 3 등산모임 정례등반 및 회원의 날(지리산)
- 문화모임 한밭축제 모니터
- 4 신행정수도특별법제정 범충청권협의회 실무협의회
- 5 소통과 교육위원회
- 7 신행정수도 특별법제정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발족(청주)
- 이라크파병반대 기자회견
- 밑빠진독상 기자회견
-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실사(동구, 유병구 작은권리집행위원장)
- 8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실사(중구, 유병구 작은권리집행위원장)
- 대전시 올바른 예산편성토론회(한남대, 정책위 주관)
- 9 정치개혁시민연대 창립총회
- 탄방동주민자치위원회 교육(김제선 사무처장)
- 서구 모범아파트 선정 평가(유병구 작은권리 집행위원장)
- 10 복지포럼 수련회 준비회의
- 복지활동가대회 2차 준비모임
- 11 참여-환경연합 실무자 공동워크샵
- 범 충청권 실무협의회(청주)
- 책나라 큰잔치(계룡문고)
- 이라크파병반대 거리캠페인
- 12 문화모임
- 개혁입법실무대책위
- 활동가협 집행위
- 13 집행위원회
- 15 분권대전본부 운영위원회 및 연찬회
- 16 어린이도서관자원운영가 교육(모퉁이어린이 도서관)
- 18-19 복지포럼 임원수련회
- 20 보육조례법안 2차모임
- 21 작은권리찾기집행위
- 소통과 교육위
- 23-24 대전시의회 의정캠프(만인산, 김선건 공동의장 토론)
- 대안포럼 정치개혁 토론회
- 어린이도서관자원운영가 교육(모퉁이어린이 도서관)
- 24 충청남도 공무원연수원 강의(김제선 사무처장)

- 서구포럼 토론회
- 지방화대전선언 관련 논평 발표
- 26 산중음악회
  - 국제반전행동의 날 집회
- 27 지방분권국민운동 전략회의(대구)
  - 대덕구모범아파트 선정 평가(금홍섭 국장)
- 28 보육조례법안 2차 모임(작은권리)
  -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언론분야 성명
- 29 스쿨존 토론회 참석(금홍섭 국장)
- 30 늘푸른축구모임 의장배초청축구대회 준비모임
- 3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
  - 활동가협의회 워크샵(삼성화재 연수원)
- 11/3 외노센터 창립1주년 토론회
  - 4 대전일보 편집국장 간담(김제선 사무처장)
    - 정치개혁축구 시국선언(검찰청 앞)
  - 5 이원범 마지막 선고 재판 방청(박상우 국장)
    - 모범아파트 평가위원모임
    - 보육조례소위
    - 지방분권서울사무소 개소 기자회견
- 6 부패방지위 교육
  - 어린이도서관자원운영가 교육
- 7 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 3차 준비모임(청주)
  -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세미나(시청)
  - 정책위원회
  - 1차 총회준비위원회
    - 정치부패척결 및 정치개혁 축구 246인 시국 선언 기자회견(국회)
- 8 모범아파트 평가 서류심사(금홍섭 국장, 시청)
  - 분권운영협의회(부산, 박상우 국장)
- 10 분권운영위원회
- 11 집행위원회
  - 법원모니터 간담회
  - 퍼블릭엑세스 교육
  - 건설노조 공대위 대표자회의
- 12 모범아파트 평가(금홍섭 국장, 시청)
  - 정치개혁을 위한 빨간장미 물결운동

- 전국분권국민운동본부 등 4개단체 합동기자회견 및 연석회의(서울)
- 13 녹색연합 후원회
    - 어린이도서관 자원운영가 교육
    - 모범아파트 평가(시청, 금홍섭 국장)
    - 교통규제심의위원회(금홍섭 국장, 경찰청)
  - 14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금홍섭 국장)
    - 보육조례 3차 모임
  - 16 늘푸른축구팀 초청 친선축구대회(갑천)
  - 17 정개런운영위원회
    -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 18 작은권리 집행위원회
    - 지방살리기 3대입법 재정 촉구 국민대회(여의도)
  - 19 BRT포럼(김제선 사무처장, 시청)
  - 20 사회복지사무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세미나(충남대, 복지포럼)
    - 어린이도서관 자원운영가 교육(모퉁이 어린이 도서관)
    - 전국동시다발 정치개혁 캠페인(대전역)
    - 동구포럼 토론회(김제선, 동구청)
  - 21 보육조례 모임
  - 23 늘푸른축구모임(갑천)
  - 24 분권긴급회의
  - 25 활동가협의회
    - 행정수도관련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한나라당사 등 3당 항의방문
  - 26 리더쉽교육
    -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27 인천연대 특강(김제선 사무처장)
    - 어린이도서관 자원운영가 교육(모퉁이 어린이 도서관)
  - 29 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회(부산)
  - 30 늘푸른축구단 축구모임(갑천)
  - 12/1 중도일보 칼럼(김제선 사무처장)
    - 분권긴급전략회의(박상우 국장, 동대구)
  - 2 충남 NGO 대회(김제선 사무처장, 대전)
    - 대전의제 지역사회와 과학기술의 역할 토론회
  - 3 목원대 특강(금홍섭 국장)
    - 대전시민언론이사회(김제선, 사무처장)
  - 4 의제21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김제선 사무처장)

- 어린이도서관 자원운영가 교육(모퉁이 어린이 도서관)
- 3대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서울)
- 5 활동가협의회 정기총회
  - 지방살리기보도태도 감시 토론회
  - 연대회의 총준비(서울)
- 6 이라크희생자 추모모임(평화원)
- 7 등산모임 정기산행(숫용추)
  - 이라크희생자 추모촛불집회(으능정이)
- 8 이라크희생자 추모모임
- 9 집행위원회
  - 분권특별법 관련 국회방청투쟁
  - 세계인권의 날 기념 인권만찬
- 11 대전연대-대전시장 정책 간담회
  - 어린이도서관 자원운영가 교육(모퉁이 어린이 도서관)
- 12 복지포럼 집행위원회
- 13 늘푸른 축구모임
  - 양심수 후원회 “선택” 영화상영회 후원
- 15 대전시 도시철도 용역중간보고회
- 16 작은권리집행위
  - 정치개혁연대,국회의원 정치개혁 평점 기자회견
- 17 대전방송 지역현안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 한일민간단체공동성명-한일양국의 이라크 파병 반대 공동성명
- 18 보육조례지원조례 제정실무회의
- 19 정책위원회
  - 상근자 활동평가 워크샵
  - 교통규제심의위원회
  - 대전참여자치연대 선정 대전지역 10대뉴스 발표
- 22 이전 사무실 수리
- 23 주부모임
  - 국회 예산계수소위 지방살리기 예산삭감 규탄성명
- 24 민주당은 지방죽이기 당인가 규탄 논평
- 26 송년워크샵
  - 대전시 교통카드 추진위원회
  - 지방살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7 사무실 이사



- 28 등산모임 송년산행-지리산 어름터  
 늘푸른 축구모임
- 29 대전연대회의 운영위  
 대전의제21 총회준비위원회 참석(김제선 사무처장)  
 지방살리기 3대입법 국회 통과 환영성명
- 30 김주현 회원 시민사회연구소개소식

## 2 조직 개요

### 1) 사무실의 소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2003년 12월 27일 이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1층  
 대표전화 042-331-0092(공공권리), 전송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E-mail [webmaster@cham.or.kr](mailto:webmaster@cham.or.kr)

### 2) 임직원 현황

공 동 의 장 / 김선진, 민명수

감 사 / 윤종삼, 정사모

집 행 위 원 장 / 이현주

사 무 처 장 / 김제선

협동 사무처장 / 신명식, 노현승, 최정우, 류진석

정 책 위 원 장 / 이은구 부위원장 / 장수찬 곽현근 총무 / 최정우

회원사업위원장 / 송인준 부위원장 / 박경란

소통과교육위원회 / 장수찬

선임직집행위원 /

집행위원 / 가명현(교사), 강민구(시네마떼끄), 강영희(범골어린이도서관), 고갑준(사업), 고제열(보험업), 김봉구(외노센터소장), 김영숙(교사), 김용세(대전대교수), 김주연(의사), 김창태(교사), 박영기(사업), 박종만(문화비전), 복진국(충남의제21), 손나연(주부), 심현우(기술사), 오광영(유학원), 오옥희(프리랜서 교육), 유덕준(사업), 이광기, 이기동, 이영남(공무원), 이재화(자유업), 장은령(주부), 장재완(기자), 전수경(주부), 정관성(사업), 정선기(연구원), 조병렬(유성구문화원), 조병제(사업), 최영규(mbcpd), 정완숙(주부), 하상욱(중의사), 박경혜(주부), 장팔수(식당), 정덕재(작가), 이재영(근영나염), 김준언(개인택시)

정책위원회(담당간사 금홍섭, 담당처장 최정우)

위원장 / 이은구 부위원장 / 곽현근, 김양주, 장수찬 총무 / 최정우

복지담당 / 류진석

문화담당 / 김양주

지역경제 / 조복현

회원사업위원회 / (담당간사 유성미, 담당처장 노현승)  
 위원장 / 송인준 부위원장 / 박경란  
 기획위원회 / 위원장 신명식  
 복지포럼 / (담당간사 금홍섭, 담당처장 류진석)  
 회장 / 김종생 부회장 / 권중돈, 김형돈 집행위원장 / 이문희  
 의료분과장 / 김해룡  
 장애인분과장 / 정진일  
 행정분과장 / 정기룡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담당간사 유성미)  
 본부장 / 송동호 집행위원장 / 유병구  
 공익소송팀장 / 여운철 아파트팀장 / 김주현 (위원명단 생략)  
 대전문화 / (담당간사 박상우)  
 회장 / 염완석  
 주부모임 / (담당간사 유성미)  
 회장 / 신선화  
 등산모임 / (담당처장 김제선)  
 회장 / 이재화  
 늘푸른축구단 회장 / 김주현 총무 / 장재완, 복진국

#### 4) 가입 연대조직

##### · 주요 상설 연대 조직

-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 대전분권운동본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 · 전국적 연대조직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지방분권국민운동
- 정치개혁시민연대
- 시민정치네트워크
- 도박장반대 네트워크
- 보행권네트워크
- 한국전쟁전후 양민학살진상규명위원회

· 지역연대조직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지방분권운동 충청권협의회
- 이라크파병반대 대전시민행동
-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민주교육개혁 대전시민연대
- 대전버스사랑시민모임
- 대전철거민공대위
- 대전경륜장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
-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 대전지역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연대회의
- 대전오마이뉴스
- 21세기 대안정책포럼

5) 자매결연단체

- (일본)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현민의 회

6) 각종 공공 기관 참여 현황

- 대전광역시 ITS자문위원 금홍섭
- 대전광역시 건축심의위원 김종남
- 대전광역시 경제대책위원회 위원 민명수
- 대전광역시 교통카드 위원 금홍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위원 금홍섭
- 대전광역시 보행환경개선협의회 위원으로 김제선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종생
- 대전광역시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위원 금홍섭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유병구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분권연구특위 심사보조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개선민관공동대책위원회 실무위원 금홍섭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개선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시보명예기자 금홍섭
-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 위원 송인준
- 대전광역시 정기간행물폐간심의위원 김제선
- 대전광역시 중구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위원 유병구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유병구
- 대전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민명수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현주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준공검사단 위원 유병구
- 대전국세청 국정과세심의위원 김용분
- 대전국세청 법령해석자문위원 김주현
- 대전국세청 자산재평가위원 최승룡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 김제선
- 대중교통포럼 위원 김제선
- 법원 사법모니터 요원 유성미
- 병무행정 국민참여위원 신현정
- 성애노인요양원 감사 김주현 운영이사 윤종삼
- 철도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강영희
- 충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유병구
- 충남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 금홍섭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정성진

## 7) 주요 보도자료 및 논평·성명

- 1/13 여중생범대위+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 반전평화선언 내외신 기자회견
- 16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 17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대전,충남,충북 공동입장 발표
- 23 고속철도 지상화 반대 논평
- 28 대전경륜장반대 공대위구성 논평
  - 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통령 인수위 제안
- 2/ 1 보건소 노인진료자 약제비 지원정책에 대한 논평
  - 12 올해의 복지인상 선정 발표
  - 14 경륜장 설문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 국세지방세 이양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논평
- 3/ 4 조선일보기고와 인터뷰거부 범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차 선언기자회견
  - 7 김진표부총리의 국세지방세이양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논평
  - 17 시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논평
  - 19 UN동의없는 부시의 야만적인 전쟁반대 논평
  - 20 지역운동연대 파병반대 논평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파병반대 논평
  - 22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대전연대 논평
- 4/ 1 교육개혁연대 결성 기자회견
  - 유성장외경정장 기습개장 규탄 논평

- 3 반전평화비상 시국회의 개최 보도자료
- 4 분권운동 충청협의회 결성 기자회견
- 11 경륜장 득실분석 기자회견
- 14 4개시도단체 대전경륜장 건설 반대 논평
  - 정부혁신, 지방분권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논평
- 15 대전경륜장 반대 성명
- 19 반전평화 결의대회 보도자료
- 22 서구관변단체 지원 관련 성명
- 24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 창립기자회견
- 25 서구청 관변단체 지원예산 부활에 즈음한 13개단체 공동논평
- 30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고소고발창구 개설 보도자료
- 5/ 8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논평
  - 9 보성초등 관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14 경륜장관련 염시장 질의문 발송 보도자료
- 15 경륜장 여론조사 결과 기자회견
  -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관한 개정 제안서 발송 보도자료
- 16 경륜장건립저지 범시도민 서명운동 발대식
- 17 대전경륜장 관련 시의회 규탄논평
- 23 진장관의 전자통신연구소 방문에 즈음한 논평
- 28 경제특구 저지 집회 보도자료
- 6/ 2 NEIS 도입반대 기자회견
  - 9 한일시민단체 일본 유사범 관련 규탄 공동성명
- 13 최저임금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 20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22 염홍철대전시장 1년을 되돌아보며 성명 발표
- 23 법조비리파헤친 기자에 대한 실형선고 반대 논평
- 25 용두동 철거민 기자회견
- 7/ 2 수도권신도시 건설 반대 기자회견
  - 15 삼성전자 기흥공장 신설허용계획 철회요구 논평
- 8/11 대법관 헌법재판관 시민추천 보도자료
  - 14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설치 촉구 논평
  - 22 대기업 신증설제한제도 폐지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논평
- 9/ 1 용두동공대위 기자회견
  - 16 전투병파병반대 공동기자회견
  - 27 9.27반전평화국제행동의날 집회 개최 보도자료
- 10/6 이라크 파병반대 기자회견
  - 7 신행정수도 특별법제정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발족 기자회견

- 이라크파병반대 기자회견
- 밀빠진독상 기자회견
- 15 전국적인 정치개혁맨투맨 운동 돌입 보도자료
- 18 파병반대 논평
- 22 맨투맨 밀착감시 선언 기자회견
- 24 지방화대전선언 관련 논평
- 28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언론분야 관련 성명 발표
- 29 대선자금 규탄 한나라당 항의방문 보도자료
- 11/3 정치개혁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
  - 5 지방분권서울사무소 개소 기자회견
  - 7 정치부패척결 및 정치개혁 촉구 246인 시국 선언 기자회견(국회)
  - 12 전국분권국민운동본부 등 4개단체 합동기자회견 및 연석회의(서울)
  - 17 경륜장 건립계획 포기 촉구 성명
  - 18 지방살리기 3대입법 재정 촉구 국민대회 보도자료(여의도)
  - 21 신행정수도 건설특위 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
  - 22 한나라당 시도지부항의방문 보도자료
  - 25 행정수도관련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한나라당사 등 3당 항의방문 보도자료  
행법련 지역감정 조장발언에 대한 논평
  - 26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본부 공동성명
- 12/4 3대특별법 재정 기자회견(서울)
  - 7 대전충남 기초자치단체장 사퇴선언에 즈음한 논평
  - 9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설에 대한 논평  
지방분권 3대특별법 상임위통과 성명
  - 16 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법개정 관련 기자회견
  - 17 이라크파병 관련 한일민간단체 공동 성명
  - 19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대전지역 10대뉴스 발표
  - 23 국회예산계수소위 지방살리기 예산삭감 규탄성명
  - 24 민주당은 지방죽이기 당인가? 논평
  - 26 지방살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9 지방살리기 3대입법 국회 통과 환영성명

#### 4. 활동개요

- 1) 전년대비 2003년도 활동량 분석(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 목	2001	2002	전년대비증감(%)	2003	전년대비증감
등록 회원	980	796	△ 184 ( - 18.8)	888	11.6%
정기회비납부회원(납부율)	154(15.7%)	619(77.8%)	465 ( 302.0)	645	4.2%
회 의	135	67	△ 68 ( - 50.4)	82	22.4%
회원시민프로그램	51	80	29 ( 56.9)	74	-7.5%
정보공개청구	23	33	10 ( 43.8)	22	-33.3%
시위·캠페인	17	30	13 ( 76.0)	31	3.3%
소 송	6	0	△ 6 ( - 100.0)	6	600%
토 론 회	16	13	△ 3 ( - 18.8)	5	-61.5%
외부토론·강연	40	40	0 ( - 0.0)	67	67.5%
상 담· 제 보	159	30	△129 ( - 81.1)	120	300%
공공 기관참여	48	51	3 ( 6.3)	55	7.8%
성명·논평발표	46	21	△ 25 ( - 54.4)	39	85.7%
연대참여 및 사업	115	138	23 ( 20.0)	145	5.1%
교 육 사 업	25	11	△ 14 ( - 56.0)	40	263.6%
조 사 사 업	12	11	△ 1 ( - 8.3)	4	-63.6%
회보·사이버소식	48	33	△ 15 ( - 31.3)	22	-33.3%
국 제 교 류	8	3	△ 5 ( - 62.5)	4	33.3%
행 사	16	12	△ 4 ( - 25.0)	9	-2.5%
기 타	75	55	△ 20 ( - 26.7)	67	21.8%
합 계	840	628	△ 212( - 25.2)	792	26.1%

## 2) 2003년도 회원구성 및 회비납부율 현황

구 분	등록 총회원 / 성별분석	
	2002년	2003년
남	501	521
여	160	167

구 분	회원 연령별 분석	
	2002년	2003년
20대	9%	56(8%)
30대	46%	283(43%)
40대	38%	261(40%)
50대 이상	5%	61(9%)

구 분	회비 납부율 분석	
	2002년	2003년
1회 ~ 2회	8.3%	110(7%)
3회 ~ 4회	10.9%	40(6%)
5회 ~ 6회	5.4%	38(6%)
7회 ~ 8회	4.9%	29(4%)
9회 ~ 10회	8.4%	48(7%)
11회	5.2%	45(7%)
12회	37%	351(53%)
기타	19.9%	

## 4. 활동평가

### 1) 2003년 활동의 기초 및 사업과제

#### <활동기조>

- ① 종합적 개혁운동
- ② 독립적 시민운동 민주화
- ③ 복지·인권영역의 구축
- ④ 지방정치 개혁

#### <사업과제>

- ① 한차원 높은 시민운동의 실현-독립적 시민운동의 완성과 민주주의 증진
- ② 종합적 개혁운동의 전개
- ③ 복지·인권 운동영역의 개척
- ④ 폭넓은 연대와 새로운 대안의 형성

### 2) 2003년 활동기조에 근거한 평가

#### - 종합적 개혁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비판적 평가 교차

- 긍정적 / 종합적권력감시운동에서 지역사회 개혁운동을 위한 첫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
- 부정적 / 운동방향의 전환에 맞춘, 변화가 있었는가의 문제  
역량의 부족, 주체적 준비 및 실천력 부재, 방법부재 등

#### - 자립자족의 시민운동과 조직민주주의를 위한 몇가지 노력 시도한 반면 참여부재 여전

- 긍정적 / 100인릴레이 회원확대운동, 회원모임(등산,축구,주부,문화), 홈페이지, 인트라넷 등
- 부정적 / 조직정체성 드러내는 지역사회개혁 부분에대한 회원참여 부재와 자립자족운동을 위한 과제달성 실패, 조직민주주의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실패 등의 조직역량의 한계 드러냄.

#### - 실무역량 및 인식의 부재로 복지, 인권영역의 구축을 위한 총체적 준비부족 드러냄.

- 긍정적 / 두 번째 사회복지학교 실시와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등의 가시적 성과.
- 부정적 / 용두동 철거민 문제, 최저임금 문제, 파병반대운동 등에서처럼, 새로운 운동영역의 개척을 위한 기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연대사업에 묻혀감.

#### -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연합세력 구축 및 지방정치 개혁에 주도적 참여

- ▶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각계각층의 연합세력 구축의 노력이 부재하였으며, 정치개혁 및 지방분권 등의 전국적인 연대활동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기획력 및 추진력 부재 드러냄.



## <사업과제>

### ① 한차원 높은 시민운동의 실현 / 독립적 시민운동의 완성과 민주주의 증진

- ▶ 주요 일부임원에 대한 온라인 인터넷 투표를 35%의 회원참여로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시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조직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도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
- ▶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산모임 등 회원모임, 확대재편된 집행위원회 등의 개방적 운용을 통해 조직민주주의 신장 및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나, 실무역량 및 조직역량의 부족으로 한차원 높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는 한계.
- ▶ 1천인 CMS 회원 확보는 실패했으나, CMS자동이체 추세에 맞게 “100인100일잔치”와 같은 새로운 방법의 회원배가운동을 추진하여 회원배가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냄.
- ▶ 새로운 임원을 영입하고, 등산모임 등 회원모임 구성을 통한 회원참여 확대 가능성은 확인하였으나, 회원 및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부재와 실무 역량부족으로 체계적인 회원 및 시민참여는 이끌어내지 못함.
- ▶ 특히,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던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회원 및 시민교육은 준비부족 및 역량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으나, 여성회원가운데 집행위원으로 소폭 끌어들이므로써 여성 참여 확대라는 미시적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
-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사이버 시민운동을 준비하는 수준에는 이르렀으나, 실무역량의 부족과 아이템 부재로 사이버 시민운동의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음.
- ▶ 자치시대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답보상태.

### ② 종합적 개혁운동의 전개

- ▶ 연대활동 중심의 종합적인 지역사회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전문화와 대중화, 실무능력부재로 말미암아 체계성있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한계있는 것으로 평가됨.
- ▶ 민선3기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50대 시정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경륜장반대운동, 대중교통 등 일부분야에 조직역량이 집중되었으며, 사업개발과 기획, 조직과 실천이라는 질적 측면에서의 발전은 이루지 못함.
- ▶ 지방분권운동과 행정수도이전 관련 운동은 전국적 연대에 기반한 주도적인 운동을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조직역량 및 실무력의 한계는 주민참여 제도의 부재 등 지역사회 개혁이라는 내실있는 사업으로 성과를 내오지 못함.
- ▶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이 부재했으며, 정치개혁, 경제개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활동도 일회성에 그치고, 능동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함.

### ③ 복지·인권 운동영역의 개척

- ▶ 주요사업 과제로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협력의 획기적 강화를 내세웠으나, 실

무역량 부재 및 인적인프라 구축미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도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함.

④ 폭넓은 연대와 새로운 대안의 형성

## ■ 결산보고서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3년 감사보고

제 회원 귀중

우리는 2003 회계연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건전한 관습에 기초하여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업무

2002년 이후 2003년을 거치면서, 회비내는 회원의 비약적인 증가로 단체 자립성을 높인 것은 물론, 사업운영의 건강성을 현저히 높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큰 지역사회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지방분권운동과 경륜장반대운동, 정치개혁운동, 파병반대 운동 등 지역사회 대표적 시민사회 단체로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사료된다.

정기총회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한 인터넷 회원투표를 35%의 회원참여로 이끌어냈으며, 등산모임, 축구모임, 주부모임, 문화모임 등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회원모임 구성과 더불어 인터넷 등의 활성화를 통해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심사업으로 계획했던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과 지방분권운동 등 연대에 기반한 사무처 중심의 활동은 50대시정개혁 과제 실현 등의 종합적인 지역사회 개혁운동으로 승화하지 못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복지 인권 운동영역의 개척을 중심과제로 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은 2003년 활동을 반성하고, 2004년을 고민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인식된다.

### 회계

2003 회계연도 중에 부정과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회계처리와 결산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03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산서와 자산부채 계산서는 단체의 수입지출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4. 1. 28

감사(업무) 윤종삼

감사(회계) 정사모

☐ <안건1> 임원투표 결과 승인의 건

■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임원투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공동의장

감 사

집행위원장

## □ <안건2> 기타임원 선임의 건

### ■ 주문사항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아래와 같은 임원에 대해 선임하여 주십시오.

### 정책위원회

- ▶ 정책위원장 이은구(한남대 행정학과)
- 부위원장 문화 / 김양주(배재대 일본학과) 경제 / 조복현(한밭대 경제과)
- 정치행정 / 장수찬(목원대행정과) 복지 / 심재호(목원대 사회복지)
- 기획·도시 / 최정우(목원대 도시공학)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송동호(변호사)
- 집행위원장 유병구(건축사)
- 공익소송분과장 여운철(변호사) 사회인권분과장 장동환(변호사)
- 아파트분과장 유병구 집행위원장 겸임

### 복지포럼

- ▶ 복지포럼 회장 김종생(월평복지관장)
- 부회장 김형돈(치과의사) 이문희(의사)
- 집행위원장 심재호(목원대 사회복지과)
- 장애인분과장 / 정진일(기자)·보건의료분과장 / 미정
- 복지행정분과장 / 정기룡(전담공무원)

### 회원모임

- ▶ 등산모임 / 회장(이재화, ITC대표)
- 총무(정관성 대미농수산 대표)
- 협동총무 (이정규, 건설업), (양동철, 부동산중개업), (허남주, TRS대전지사장)
- ▶ 문화모임 / 회장(염완석, 자유업)
- ▶ 주부모임 / 회장(신선화, 주부)
- ▶ 축구모임 / 회장(김주현, 변호사)

부회장(이광기), 장팔수(헬스클럽)

총 무(장재완), 부총무(금홍섭, 복진국 충남의제21차장)

### **사무처장단**

▶ 사무처장 / 김제선

▶ 협동처장 / (회원) 노현승 (복지) 심재호 (작은권리) 여운철 (정책) 최정우

\* 추후 추가선임 집행위원회 위임



## □ <안건3> 집행위원 선임의 건

### ■ 주문사항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아래와 같은 당연직(1) 및 선임직(2-3) 집행위원을 선임해 주십시오.

#### 1. 당연직 집행위원

(의장단)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집행위원장) 이현주  
(사무처장단) 김제선 노현승 여운철 최정우  
(정책위원회) 이은구 김양주 조복현 장수찬 최정우  
(복지포럼) 김종생 김형돈 이문희 심재호  
(작은권리) 송동호 유병구 여운철 장동환  
(회원모임) 등산모임 1인, 문화모임 회장, 주부모임 회장, 축구모임 1인  
(여성위원회 준비위) 김영숙,

#### 2. 선임직 집행위원

=> 아래의 사람을 본인이 수락하는 조건으로 집행위원으로 선임

강민구, 강영희, 강현수, 고갑준, 고미자, 고제열, 권선희, 김봉구, 김수현, 김양기, 김영숙  
김용분, 김용세, 김정옥, 김진화, 김학일, 나준식, 류진석, 박경란, 박경혜, 박노동, 박성경  
박용운, 박종만, 복진국, 손나연, 신현정, 심현우, 안정선, 양동철, 염완석, 오광영, 우희창,  
유달상, 이기동, 이영남, 이외원, 이재영, 이종석, 이종운, 장은령, 장팔수, 전수경, 정관성,  
정덕재, 정선기, 정완숙, 정진일, 조병렬, 조병제, 최영규, 하상욱,한진걸, 허남주

#### 3. 추가 집행위원회 선임

=> 필요한 인사 약간명을 집행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위임.

## □ <안건4> 2004년 사업기조와 과제 심의의 건

### ■ 주문사항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아래와 같이 사업기조와 과제(안)를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 I. 기조 : 전문화에 기초한 급진화, 조직민주주의 확장에 기반한 지역화

#### 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운동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권익옹호 사업, 사회적 인권 운동 영역의 개척

#### ② 대안으로 참여하는 운동

운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로서 지역사회연구소 설립의 추진

기존 운동의 전문가 참여의 확충과 회원의 전문성 제고 추진

#### ③ '모든 시민이 시민운동가로!' 만드는 운동

지역주민, 조직된 시민들과의 공동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의 확충

사업의 표준 매뉴얼의 제적을 통해 평범한 시민이 시민운동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 ⑤ 즐겁게 참여하는 시민운동

기존 회원 모임의 안정화와 실천과제 개발

의사결정에서 일반회원참여의 확대

신규 계층, 지역, 과제별 회원모임의 확충

즐겁고 재미있는 참여문화와 프로그램의 정착

#### ⑥ 새로운 10년을 위한 준비

창립10주년 맞이하며 단계 높아진 참여자치연대 운동의 준비로서 내실 있는 기념사업준비

### II. 분야별 과제

#### ① 정치개혁 및 지역사회 개혁운동에 주체적 참여(지역사회 개혁운동)

#### ② 자립적 시민운동의 완성 및 시민운동의 민주화(조직민주주의와 독립적 시민운동)

#### ③ 인권, 복지 등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강화(복지·인권영역의 강화)

#### ④ 폭넓고 유연한 개혁세력 연합 구축 및 지방정치 개혁의 주도적 참여(지방정치 개혁)

### III. 사업별 과제

#### 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시민운동

- 운동의 기본관점을 약자의 인권보호와 소수자의 권리회복으로 함.
- 사회인권분야 전문사업단 구성,
- 장애인, 여성, 빈민 등 연대 강화
- 중하계층 등 정상적 시민의 빈곤화 억제 : 카드채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 ② 풀뿌리 지역주민운동

- 회원 중심의 지역통화운동(렛츠) 참여, 어린이도서관 설립 등 지역주민과의 연계 강화
- 조직화된 주민모임을 통해 구단위 -> 동단위의 운동의제 발굴
-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운동 진영의 새로운 개혁역량 결집으로 개혁연대전선 구축

## ③ 지역권력감시운동의 대중화 : 실천하는 시민운동

- 정치개혁운동 : 2004총선시민연대
- 의정감시 및 시정감시운동 본격적인 전개 : 정기회 모니터링
- 도시개혁운동 지속적인 전개 : 교통문제 집중
- 방어적 위기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수구언론 개혁운동
- 지역권력감시운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관 단체와의 공동사업, 주민조직과의 공동사업, 회원참여 사업의 확대 및 매뉴얼 제작

## ④ 회원참여 및 소통구조 등 내부 민주주의 실현 : 즐거운 시민운동

- 사업결정에 있어서의 회원참여 창구 확대 및 민주적 운영
- 회원관리의 시스템화 : 회원관리 DB화와 회원조직 내실화 및 회원참여 자발성 유도
- 일상적 회원 증모운동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한 자립토대 구축
- 대학생 모임 등 다양한 회원모임 구성과 자원봉사단 운영에 있어서의 체계화
- 온라인 장터 활성화를 매개로한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추진
- 회원 만남의 날 정례화 : 신입회원별, 자치구별, 동별, 연령별 등등
- 회원 참여프로그램의 다양화
- 새임원 영입에 대한 노력: 회원 내부로부터 임원진 발굴 병행
- 참여와 자치 월간지 회원소통구조 확대 및 사이버소식지 정례 발송
- 사이버 시민운동 : 일방적 홍보에서 쌍방향 커뮤니티로 전환 모색

## ⑤ 10주년 기념사업

- 10년사 편찬, 발간, 200회원 증모, 지역사회연구소 설립 추진,
- 기념행사 준비 및 생협운동 또는 어린이도서관 사업 추진 검토

⑥ 내실있는 연대사업

- 지역운동판에 새로운 개혁연대전선 구축 준비의 해
- 한반도 평화구축 문제, 평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대응

⑦ 실무역량의 강화

- 시민모두가 운동가 프로그램 개발, 활동가 육성 체계 구축
- 실무자 전문교육 실시(사이버, 회계, 회원서비스, 분야별 과제)

#### IV. 월별 사업 일정

2월 총회

연대조직 정비  
낙천낙선운동  
주요 임역원 선임, 단위사업 안정화

3월 복지만두레 비판적 평가 토론회(복지포럼)

후보자 이념적 정향성 분석 토론회(정책위)  
여성위원회, 회보편집위원회 구성

4월 총선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발족(연구소설립 준비위, 10년사 편찬준비위,  
기념 행사 준비위, 200회인 증모운동추진)  
대전시 경전철 건설 방침 대책활동  
시민교양1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발족

5월 어린이날 행사(춘계 회원대회)

임시국회 주민참정제도 제정 대책활동  
보육조례 대책활동  
사회적인권(시민권)워크샵

6월 구청장 보궐선거 대책활동-구청장선거비용청구소송

어린이도서관건립추진위 결성  
정책위 정례 토론회  
상근자2인 추가 채용

## 시민교양2

7월 산내학살 위령제

염시장 2주년 시정평가 토론회

홈페이지전면개수

8월 일본구마모토와의 교류

모두가시민운동가프로그램 1차 실시

9월 회원성향 설문조사(장수찬교수-사회자본 연구2년차)

시민교양3

10월 정책위 정례토론회

모두가 시민운동가 프로그램 2차 실시

사회적인권(시민권)워크샵2

신행정수도후보지 선정

11월 추계회원대회

정기국회 대책활동

시민교양4

12월 총회준비-활동평가워크샵 및 송년회

시의회 정기회 대책

예비 사회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1월 총회개최

## <참조1> 2004년의 사회적 여건과 주체적 조건

### 1. 2004년 사회적 여건

#### - 경기의 양극화와 신빈곤층의 양산과 구조화

최근 경제의 흐름은 주식, 경기, 소득 분배 모든 측면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정부의 잘못된 내수 진작책으로 부추겨진 신용카드 남발이 카드채 문제등의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370만을 넘어서고 2004년내에 4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됨. 여기에 비정규직의 일반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차 상위계층 인구인 350만을 고려하면 급속한 중산층의 붕괴와 하향계층 분화가 심각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음.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사회적 결과로서 사회적 양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반면에 이를 완충하고 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하며 인간이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지안전망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빈곤과 학력이 세습되는 신빈곤의 구조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경제의 개혁은 DDA, FTA, 경제특구로 대표되는 한국시장의 세계시장의 완전편입과 이에 기초한 세계시장진출의 확대를 통한 신성장주의, 신근대화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가 국민의식의 내면까지를 장악하는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음. 경제 개혁도 국민경제의 건실한 통합성과 발전의 지향 보다는 세계시장 적응에 바람직한 범주내의 변화에 그치기 때문에 왜곡과 신재벌, 금융중심주의로 편향될 가능성이 높음.

#### -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미 부시행정부의 예방전쟁론으로 인해 강화된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어려운 가운데 교착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직접대화가 중요하나 이 가운데 한국의 자주적 역할이 증대되도록 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은 매우 긴요한 사회적 과제임. 이와 관련 유의할 것은 미군기지 이전 등의 문제에서 냉전보수언론·정치집단의 흔들기로 인해 한국정부의 대미 협상력이 교란·후퇴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수구언론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 국회의원 선거와 정치개혁

유권자의 다수가 대표되지 못하는 대표성 없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국민의 열망은 뜨거운 반면에 기존 정당의 수구적 행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국민 참여에 의거한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관철되는 정치제도와 부패, 수구, 지역주의 정치인의 퇴출 운동이 강력히 요청되는 상황임.

대전의 경우 신지역할거주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총선에 이은 구청장 보궐선거(6월)

대책도 필요한 상황임. 중장기적으로 주민공동체운동에 기반 한 유권자의 대리인(대표)이 직접 정치에 참여, 정치를 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임,

#### -. 지방 살리기 3대 입법과 신지방화

분권법, 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제정과 빈사상태의 지방사정은 중앙일극집중체제의 다핵다극중심체제로의 전환을 사회적 쟁점으로 계속 만들어갈 것임.

문제는 3대 입법의 제정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중앙 정치, 경제, 언론, 관료들의 저항과 왜곡에 맞설 힘을 참여정부가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임. 중앙관료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수도권 집중의 강화를 방치하였으며 지방살리기를 빙자한 부처 이권 챙기기가 극심했음. 아울러 2만달러 시대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신성장주의의 하부구조화됨으로서 시장의 공공적 개입의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분권을 악용하여 권한을 주지만 재정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지방분권이 출현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하고 있음. 또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서 지역민의 직접참여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지역 토호들의 잔치로 전락하여 지역사회 민주화에 역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음.

향후 지방분권 추진의 신자유주의적 왜곡을 저지하면서 주민참정제도의 확보 등 참된 지역혁신, 민주화를 위한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신행정수도 건설은 실현은 결국 중장기적 과제인데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충권내 소지역이기주의를 빌미로 한 정치적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이 대전권 지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임.

## 2 대전시정의 향배 : 새 시장중심 시정운영체제 구축과 신성장주의 구체화 가능성

대전시정은 자민련 일당지배 속에서 굳어진 지역사회 운영체제를 새 시장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일이 추진되어 염시장중심의 시정운영시스템의 사회적적 구축이 일차적 완성을 이룬 것으로 보임. 한나라당 중심 시의회 원구성, 지역언론사의 재편성, 지역대학 지원체제 구축, 관변 단체의 전임시장 잔재의 일소와 인사 개편, 대규모 인사혁신 방식이 아닌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발탁인사를 통한 관료재편성의 과정이 이를 보여줌. 여기에 최근 복지만두레를 제창하며 동 단위까지 새로운 지역사회 주도력 구축 작업이 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지금까지 염시장호의 대전시의 시정이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탈권주의주의, 새진용갓추기에 시정의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라할 수 있음. 특히 구체적 시정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시장이 실무를 직접 챙기고 변화를 강제해 내야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임.

아울러 최근 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지원제도가 사업별 지원에서 포괄적 지원으로 전

환하고, 지원 사업비의 집행 우선순위 결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심의할 지역혁신협의체가 시장에 의해 위촉 구성되게 되었음. 이로써 지역사회의 시장중심 후견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임. 언론사도 대학도 기업인도 시장의 정책결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본질적 비판과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 자치단체장의 독점적 주도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임.

문제는 이른바 지역사회의 권력이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고, 자치단체장이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최고의 후원자로 군림하며 지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수직적 피라미드형 지역 권력 구조의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여줄 염시장의 지역사회 지도력의 질과 내용임.

강화된 권능과 안정된 시장운영체제를 통해 대전시가 이제야말로 행정혁신과 주민 삶의 질 제고 중심 시정을 펼칠 것인지,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여 개발과 성장위주의 시정에 빠질 것인지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 시정이 행정혁신과 주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면 시민사회를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대전시티즌살리기 결정, 경륜장 유치결정 등의 과정에서 보인 포퓰리즘과 신성장주의가 대전시정의 일반적 경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아울러 시민사회운동은 대전시가 성장연합의 대변자로 행정의 계층 중립성을 상실한다 해도 그 방식이 과거와 같이 개발지상주의에 입각한 밀어붙이기 방식을 사용치는 않을 것임을 유의해야함. 지역시민사회의 요구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면서 개발지상주의의 외관을 포장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수단을 강구할 것임. 개발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관계도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무조건적 개발을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대리전을 부추기면서 시민사회를 분할 포섭하여 강성세력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지향을 달성하는 수단을 원용할 가능성이 높음. 예를들어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하상도로·중앙데파트 철거 계획은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더 많은 환경과파와 개발을 추진하는 수단이될 가능성이 있음. 하상도로와 중앙데파트 등의 철거는 언론에서 생태 하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시가 이를 받아서 중장기적으로 철거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철거의 대안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신규도로건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럴 경우 환경단체는 하상도로 철거라는 선물과 무분별한 도로건설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되면서 이에 대해 효과적 대처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음.

참여자치연대는 2004년 시정은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전철로의 강행, 각종 대규모 개발의 가시화와 과학기술특구의 지정, 경륜장허가 획득과 착공 등으로 개발 열풍 속에서 정주민의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소수 토건업자에게 귀결되는 또 다른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시정 참여운동을 벌여야할 것임.

아울러 총선과 구청장보궐선거 과정에서 시정의 정치적 안정성 확보 노력은 여전이 기울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임. 그러나 총선결과 대전시장의 차상위의 정치적 후견자인 중앙 한나라당의 약



화가 나타날 경우 자체의 지지기반과 통제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모색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의 결과물로 시정의 신성장주의로의 편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함. 우리는 신시정체제 구축의 완성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신성장정책편향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참여제도의 확충과 주민참여역량의 강화에 노력하면서 시민사회 요구의 형식적 수용과 내용적 배반을 억지하도록 노력함이 필요할 것임.

### 3. 2004시민사회운동의 주체적 여건

#### -. 참여정부의 출범과 사회운동

참여정부의 출범은 사회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과도적인 혼란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2기 민주정부로서 참여정부는 한편으로 '민주화되었지만 무능한 정부'의 양상을 보이면서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시민사회의 상당한 부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대미관계의 측면이나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미국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요하는 측면이 더욱 크게 보임.

문제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권력감시형시민운동의 사회적 기반의 축소 또는 변화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임.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부-시장, 정부-시민사회, 시장-시민사회의 상호관계의 변화가능성을 분석하여 능동적 대처 방안을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동안 시민사회운동내에서는 몇가지 대안이 제출되었음. ①상대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운동의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급진화론 ②운동의 참여의 폭을 확대해 민주화를 굳혀야 한다는 대중화론 ③권력감시형 운동의 영역의 축소에 대비하여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추자는 전문화론 ④광역대도시 중심의 운동 중심을 풀뿌리 지역으로 내리는 지역화론 ⑤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자연스런 운동의 분화를 통한 정치(세력)화론이 그것임.

10주년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참여자치연대는 전문화에 기초한 급진화, 조직민주주의 확장에 기반 한 지역화로 방향을 견지함은 변화가 없어야할 것임.

#### -. 지역운동 : 개별단체의 안정화와 민중진영의 불균형 및 개혁연합의 미구축

개별 시민사회단체는 안정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혁정치행정세력-개혁적 지식인-개혁언론인-시민사회운동의 연대의 상과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속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의제를 주도하는 강력한 대안 세력으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민주노총 이외의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민중부문은 급속히 취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급진세력으로 매도당하는 한편으로 이익집단이라는 사회적 폄하 속에서 대중적 동력을 확실히 형성하기 전에는 당장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민중부문의 재편성의 지체가 사회적 약자의 양산의 현실이 개선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영역에 대한 시민운동진영의 참여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임.

이런 속에서 지역시민사회의 부분적 다원화현상 속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경우는 지역사회질서의 편입(자발적 관변화) 또는 포섭이 일반화되면서 나아가 자주적 시민운동 형태를 띠는 개발지향의 시민단체의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

개혁적 단체의 경우 내핍에 기초한 재정자립에 겨우 도달한 형편으로 실무력의 취약, 활동가 양성 구조의 부재, 주민운동역량의 미흡, 현장운동을 지원하는 II부문운동 구축의 지체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이 요구되는 개혁연대의 구축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개혁 핵심 역량의 구축과 상호 연계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 참여자치연대의 2003년 활동의 성과와 반성**

조직의 안정화-사업단의 안정, 회원모임의 정착

재정의 안정화-내핍에 기초한 재정자립의 달성

연대를 통한 사업의 빈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역량의 재투입 빈약

회원참여의 모색 추진과 이의 확대를 위한 제도, 훈련, 실천의 미흡

제한된 실무역량에 과대한 업무의 집중으로 인한 끝까지 책임지는 운동, 폭넓은 참여 부족

☐ <안건5> 2004년 예산안 심의의 건

■ 주문사항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아래와 같이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 □ <안건6> 규약 개정의 건

### ■ 주문사항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아래와 같이 규약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 1) 개정취지

- 의장단, 감사는 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 총회 안건에서 제외
- 단 보궐선거의 경우는 회원투표의 실시가 어려움으로 총회에서 행하도록 규정
- 운영위원회는 실제 구성, 개최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이를 폐지
- 우리모임의 해산과 다른조직과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회원투표로 결정토록 규정

#### 2) 개정사유

- 회원의 직접 의사 결정 방식으로 회원 투표를 명문화하고,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토록 함

현 행 규 약	개 정 안
제2절 운영위원회	전문삭제

**【개정사유】** 년 2회 전체 임원 회의로 구성되도록 한 운영위원회가 실제 구성, 개최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 전문을 삭제

현 행 규 약	개 정 안
제14조 (의장단)우리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단체를 대표하는 약간명의 공동의장단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의장을 선임한다.	제14조(의장단)우리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단체를 대표하는 약간명의 공동의장단을 회원직선으로 선출하며, 공동의장단 중 상임의장을 호선한다. 회원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사유】** 의장단의 회원직선을 명문화하여 회원에 의한 조직 운영을 추진한다.

현 행 규 약	개 정 안
<p>제14조의1(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우리모임의 일상적 의사결정기관이며, 그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p> <p>1. 집행위원회는 의장단,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과 부설기관, 회원단체, 회원조직, 사업단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 집행책임자로 구성한다.</p> <p>2. 집행위원회는 일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총괄하며 2개월 마다 1회의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수시로 모인다.</p> <p>3. 집행위원회는 운영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운영내규는 총회에 보고, 승인 받아야 한다.</p> <p>4. 집행위원회는 의장단, 집행위원장, 사무처장과 협동 사무처장, 회원단체와 회원조직의 대표자와 집행 책임자, 각위원회와 사업단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p>	<p>1. 집행위원회는 의장단, 집행위원장, 사무처장단, 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설기관, 회원단체, 회원조직, 사업단의 책임자, 부책임자 및 집행책임자, 각위원회의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선임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p> <p>4. 집행위원회는 인원규제 없이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과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개정사유】** 집행위원회 구성을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분류하고 상임집행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명문화함.

현 행 규 약	개 정 안
<p>제14조의 2(회원사업위원회)</p> <p>제14조의 3(정보공개사업단)</p> <p>제14조의 4(시민사업위원회)</p> <p>제14조의 5(지역운동위원회)</p> <p>제14조의 6(여성위원회)</p> <p>제14조의 7(연대기획위원회)</p> <p>제14조의 8(재정위원회)</p> <p>제14조의 9(정책위원회)</p> <p>제14조의 10(회보편집위원회)</p>	<p>개정안 14조의 2 (정책위원회) 우리 모임의 정책사업 및 운동 정책을 연구, 주관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p> <p>제14조의 3 (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우리 모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14조의 4~14조의10 전문삭제</p>

**【개정사유】** 정책위원회를 제외한 사업별 상설위원회가 실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구성토록함.

현 행 규 약	개 정 안
제16조(회원조직) 1. 회원포럼 관심분야의 동일성이나 직업계층의 동일성에 기반하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회원 조직 2. 지역조직 지역별 생활 근거지의 동일성에 기초하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회원모임	1. 회원모임 ..... 회원조직  2. 지역조직 ..... 회원조직

【개정사유】 회원포럼을 회원모임이라는 우리말로 바꾸고 용어를 통일함.

현 행 규 약	개 정 안
(없음)	16조의2 우리 모임의 산하 회원조직과 사업단,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임원은 각 조직별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사유】 회원조직 및 산하기관의 임원 선출이 사실상 회원모임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단위별로 선출하고 집행위와 총회에 보고, 승인 받도록 규정

현 행 규 약	개 정 안
제18조(의결정족수) 3. 우리 모임의 해산과 다른 단체와의 조직 통합	3. 회원투표의 발의

【개정사유】 우리 모임의 해산과 다른 단체와의 조직 통합은 회원투표의 사항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고 회원투표의 발의는 2/3로 신규 규정

현 행 규 약	개 정 안
제19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사유】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조직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 <안건7> 회원투표 및 임원선정 규정 제정의 건

### ■ 주문사항

제안자 : 총회준비위원회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 및 임원선정 규정(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 10조의 1에 의거하여 회원투표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모임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원투표라 함은 참여자치연대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 결정 방법을 말한다.

제3조(회원투표의 종류) 회원투표는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 모임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결하는 의결투표로 나뉜다.

제4조(회원투표의 방법) 회원은 투표소 방문, 우편, 인터넷의 투표 방법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자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방식을 정하여야 한다.

### 제2장 의결투표

제5조(의결투표의 발의) 의결투표의 발의는 집행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의장단이 발의한다.

제6조(의결투표의 관리) 의결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5인 이내의 회원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라 부른다)를 구성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의안에 대해 찬반운동을 벌일 수 없으며, 사무처는 필요 실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투표의 공고) 의결투표는 투표일 20일전에 참여자치연대 회보, 홈페이지 및 우편 또



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의안과 투표 절차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명부의 작성) 의결투표가 공고되면 사무처는 즉시 회원명부를 작성 투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회원이 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재심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투표 운동)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 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의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종족수) 의결투표는 재적 회원1/4이상의 참여와 투표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의 효력) 회원투표를 통한 의결 사항은 우리 모임의 최고 의사결정으로 효력을 가지며 같은 회기 안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2회 이상 회원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 제3장 선거투표

제12조(의장단·감사의 정수) 집행위원회는 임원이 임기 만료 50일전에 의장단과 감사의 정수를 정하고 7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의 자격) 회원은 회원생활 문화 규범과 임원규정 등 우리 모임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은 의장단과 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입후보의 등록) 의장단·감사가 되고자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1. 사진이 첨부된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을 포함한 자기 소개서
2. 우리 모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3. 사업단,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 의결서 또는 회원 10이상의 추천서

제15조(후보자자격심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1. 의장단·감사후보 자격 심사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한다.

2. 후보자격심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 후보등록서류의 신뢰성
  - 회원 생활문화규범 및 임원규정 등 우리 모임 제반 규정 준수 의지와 능력 소지 여부
  - 기타 우리 모임의 임원으로서 결격 사항 여부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심사의견을 받은 사람에 대해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4.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당선자의 결정) 투표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투표 방법 등은 의결투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집행위원장 등의 선임)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사무처장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는 회원생활문화규범과 임원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의장단과 감사로 구성된 집행위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의장단 선거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처장은 상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장 회원의견조사

제20조 집행위원회는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회원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전화ARS또는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의견 조사의 효력) 집행위원회는 회원 의견 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의사 결정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 □ 참여자치 시민상 수상자 공고

참여자치시민상-015호

### 참여자치시민상

한화교(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새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국세청 내부의 세무비리와 감사권 유린을 묵인하지 않았고 은폐와 징계에 내부고발의 용기로 맞섰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사회정의와 맑은 공직사회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귀히 여기는 회원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04. 2. 1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전 민명수

참여자치시민상-016호

### 참여자치시민상

책 읽어주는 엄마모임(대표 하은숙)

당신이 보여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새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였고 도서관 책 읽어주기와 시각장애인 학교를 열어 대전의 문화를 살찌우게 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함께 나누는 삶을 귀히 여기는 회원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04. 2. 1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전 민명수

참여 시민상-009호

## 참여시민상

장 재 완 회원

참된 나눔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마음입니다. 참여자치 축구단의 창립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축구단 성원 모두가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범을 통해 풀뿌리시민운동 조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04. 2. 1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참여 시민상-0010호

## 참여시민상

정 찬 명 회원

참된 나눔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단체 홈페이지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과의 만남이 원활해 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범을 통해 만남이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04. 2. 1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올해의 깨끗한 정치인-004호

## 올해의 깨끗한 정치인

정진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당신은 지방의원의 본연의 역할로 자치위원의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자치실현에 충실했고 남다른 윤리 의식을 보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풀뿌리 지방자치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귀히 여기는 회원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04년 2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아름다운 사람-001호

## 아름다운 사람상

강도묵 (주)경동기술공사 대표이사

참된 나눔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시민사회에 대한 꾸준한 기부는 나누는 삶이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참여하는 모범을 통해 만남이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04년 2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전 민명수

감사패-05호

## 감 사 패

(주)참디자인(대표 정인욱)

참된 나눔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단체 소식지가 중단 없이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기에 알찬 새 소식으로 시민과의 만남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범을 통해 만남이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를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04년 2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전 민명수

## □ 각종 보도자료

### ■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입장 -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 협력키로-

충청지역의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이전 추진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서'에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확산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을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속에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포함시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것에 대해 다시한번 환영한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충청지역에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하여 소지역주의적 유치경쟁, 부동산 투기의 과열 조짐, 정치적 이용 등 우려할만한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충청권 3개 지역 지방분권국민운동 조직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행정수도가 지방으로 이전될때까지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적극 노력키로 결의하였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충청권 지역사회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하여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아갈 몇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이며, 오는 17일 대전·충남·충북 시도지사 행정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발전적인 성과로 나오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첫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위한 공동기획단을 충청권 3개 지자체·지방의회·지방분권국민운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3개 지역사회가 경쟁적으로 행정수도 유치경쟁에 나서기 보다는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행정수도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합심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치경쟁보다도 행정수도의 이전에 관한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다. 특히 행정수도의 이전은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다른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관행에 젖어 왔고, 앞으로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이익을 누려온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합의하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과 논리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충청권 3개 시도가 주도하여 행정수도 이전의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이를 계기로 충청권뿐만 아니라, 지방이 고루 잘 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행정수도의 이전은 국민 모두의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충청권 3개 지역사회는 수도권규제완화반대에 적극 공조하여 지역균형발전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되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반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조흥은행 본점 중부권 이전 등의 각종 현안문제를 놓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으나 안타깝게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한다. 이를 교훈삼아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둘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부동산투기의 과열억제를 위해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응하고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

일부 언론이나 몇몇 단체에서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전 대상지를 점치고 조감도를 그리는 등 성급한 대응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이 자칫 부동산 투기로 연결될 때, 지역민 보다는 돈 있는 수도권 투기가들의 배를 불리고 충청권의 서민들은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 이런 점에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충청지역 6개시 및 5개군에 대한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 지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은 철저히 공영개발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일부 언론이나 몇몇 단체들의 성급한 대응 역시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그리고 충청권 3개 지역은 행

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투기와 연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셋째, 충청권 지자체별로 지방분권·분산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지방분권과 분산에 대한 국정과제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제안한다.

충청권 지자체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관심이 쏠려 신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한 10대 국정과제에 대하여 소홀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수도이전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적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 또한 소홀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지방분권·지방분산은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지자체의 능동적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분권·지방분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은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은 지방분권·지방분산을 부작용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지방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연구·분석을 통해 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와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새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전문가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또한 참고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대장정에 충청권 지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주역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청된다.

지역민들께도 호소드린다. 행정수도 이전은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하지만 국가의 대사로써 전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며,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것에 앞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준비도 없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회를 남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지역민의 힘과 의지를 결집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히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 조성에 보다 노력하는 자세를 갖기를 권고한다. 충남도청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선분은 추진이 수도권과 타지역민을 자극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이 우리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도 정주지역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민 스스로 노력해야 함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최근 염려되는 부동산투기 역시 지역민들이 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 운동의 결과는 바로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다시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03년 1월 17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 지역연대(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운동연대)

## ■ 고속철도 대전구간-합의된 정책 변경을 반대한다!

건설교통부가 경부선 고속철도 대전구간 지상화 방침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접하여, 일방적인 정책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대전시와 대구시 구간에 대한 지상화 및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시민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지상화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정당한 여론수렴절차를 무시한 독단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건교부가 지상화로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약 6천억원의 비용 절감액을 도로, 보행시설, 소음 완충을 위한 녹공간조성 등 철로변 지역생활기반 시설확충에 집중투자할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채, 일방적인 정책변경을 밝혔다는 점에서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조사와 지역민의 다양한 의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교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 철회되고 대전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진, 민명수, 최교진

■ **산내민간인 학살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대통령인수위에 제안**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100만여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전국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관련 28개 및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는 2003년 1월 20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100만여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범국민위원회는 이날 정책제안서를 통해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범국민위원회는 또 중대한 인권침해인 민간인 학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일반인들의 '진실을 알 권리'와 '국가와 사회가 진실을 기억할 의무'가 유엔등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의 모든 진실을 완전하게 조사하여 드러낼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와 기능 및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에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범국민위원회는 지난 4.19 국회의 특위가 조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100만여명의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올바른 과거 청산을 통한 사회발전을 촉구했다.

산내학살대책회의

■ **교통영향 평가는 '요식행위' 대전시내 11곳 대형매장 입점, 교통체증 심각**

대전지역에서 지난해 개장된 대형할인 매장이 교통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개장한 것으로 드러나자, 교통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전 대형매장 11곳, 교통체증 심각

대전시 인구규모에 대비해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이 많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있었던 것은 아닌데 현재 대전시내에는 까르푸 2곳, 롯데마트 2곳 등 모두 11곳에 백화점 등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해서 영업중이다. 뿐만 아니라 유성 까르푸점과 삼성홈플러스가 둔산에 오는 6월 입점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후에도 유성구 송강동과 가오택지개발지구, 송촌지구 등 34곳에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대형할인매장이나 백화점의 경우, 엄청난 교통량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건축허가 보다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심의과정에서 입점을 규제하는 심의나 결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이렇게 난립되면 그만큼 도시교통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고, 사회적 물류비용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모두 통과하는 지금의 현실은 극심한 교통혼잡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건축주가 책임져야 될 "특단의 교통대책 마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교통영향평가 '요식행위' 일뿐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는 대부분 1, 2등급 지역판정을 받았다. 1,2등급이라면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데 현재 영업중인 각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앞의 경우 대부분 심각한 교통문제 유발지역으로 지목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구 둔산동의 갤러리아백화점이나 탄방동 롯데백화점 앞을 들 수 있으며 까르푸 문화점과 세이백화점 앞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한 월평동 월마트 앞도 만만치 않다. 특히 퇴근시간에는 퇴근차량과 쇼핑객이 겹치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쇼핑객의 홍수로 인근의 도로는 마비가 되기 일쑤다. 기존의 대형할인 매장이나 백화점 앞길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대형할인 매장까지도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까르푸 유성점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관련 평가위원들이 충남대 앞 유턴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주차에 걸쳐 특단의 교통대책 수립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제시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전시 채비지를 매각하면서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기도 하다.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교통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대형할인매장이나 백화점을 무분별하게 허가하고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그나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많은 제도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주 본인이 교통영향평가를 발주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될 평가업체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게되고, 사업주 요구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게되어 결국, 부실심의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부실심의회 심의위원들이 고발당해 결국 뇌물 수뢰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는 특이한 예를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 하나는 공공성이나 경제성이 철저히 배제되고, 그 지역전체에 대한 교통영향을 측량하는 총량평가가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단순평가라는 점에서 내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사후에 문제가 발생시 공사중지 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먼저 객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주를 배제해야 한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조례를 제정해서 범상 평가대상 이외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과정과 회의록, 그 결과를 서울시처럼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교통영향평가가 단순히 대상사업의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도시전체에 대한 총량평가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또 사후문제 발생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법 제개정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통영향평가의 기준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확립된 평가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화된 새로운 기준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을 비롯해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 보건소 노인진료자 약제비 지원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가 제 3기 지역보건의료사업 계획의 하나로 보건소 방문 노인진료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정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우선 시에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보건복지사업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이는 보건복지분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으며, 특히 빈곤 소외계층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보건복지정책이야말로 직접적이고 안정된 의료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임을 생각할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금번에 발표된 보건소 노인진료자 약제비 지원정책은 그 시혜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방향성과 실효성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지난 2월 3일 대전시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인환자들에게 기존의 진료비감면에 추가하여 환자가 약국에 지불하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기본금액인 1,200원을 지원해주고, 이를 위해 9,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재 구단위로 설립되어있는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인근주민들에 비하여 적지않은 시간과 교통비를 들일 수 밖에 없는 원거리 거주민들에게 특정기관을 방문할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중심의 시혜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두고 보건소까지 내원하여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어느 분야에서나 '지원'정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접근성은 연령보다는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지원정책이 그 대상을 65세 이상이라는 생물학적 나이에 의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의료보호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경제력이 취약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한다거나,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차원의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바람직한 선결과제일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이 경로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 예산으로 의료인력을 확충

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방문진료 사업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의료의 영역은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임상의학 이외에도 예방사업 및 재활훈련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진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임상의학보다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이나 예방사업 등에 대한 역할을 요구받는 이유는 그것이 공익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민간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인력 및 재정 수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보건소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보다는 접근하기 손쉬운 진료위주의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인접한 민간의료기관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금번의 약제비 지원 정책 또한 앞서 언급한 의료의 다양한 영역중 임상의료 영역에 국한된 정책이다. 이는 결국 보건소의 진료업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공익적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는 더욱 멀어져 가는 정책일 뿐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대전시의 사업계획이 늘어나고 있음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금번의 약제비 지원정책에서와 같이 단기적인 선심행정으로 왜곡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건복지분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란다. 또한 일반 주민들 뿐만 아니라 노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시빈민층,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도 무시되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포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러한 우리의 비판과 문제제기에 대하여 보다 열린 자세로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한다.

2003. 2. 1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올해의 복지인상'에 노인들의 父母 '유성 사랑의 집' 정은조 원장 선정

"전 재산 노인에게, 육신마저 사회기증 약속"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이하 대전복지포럼, 회장 윤종삼, 49세)이 매년 선정발표하고 있는 '올해의 복지인상'에는 노인들의 부모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유성 사랑의 집 원장 정은조(66세)씨가 선정되었다.

'올해의 복지인상'은 대전복지포럼이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복지분야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꾸준히 실천하는 시민이나 단체를 찾아 매년 수상하고 있다.

2002년도 '올해의 복지인상'으로 선정된 정씨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994년 전 재산을 털어 유성에 노인들의 보금자리인 '사랑의 집'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타적인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유언에 따라 모친의 시신을 기증한 것은 물론, 부인과 함께 자신의 시신도 의학발전을 위해 기증기로 서약하는 등 이 세상 가진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는 아름다운 기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전복지포럼은 '올해의 복지인상' 시상식을 2월 13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개최되는 대전복지포럼 정기총회에서 갖게된다.

<수상자 공적 소개>

- 이 름 / 정은조(66세)
- 직 업 / 사랑의 집 원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196번지 사랑의 집

2002년 올해의 복지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은조씨가 45명의 무의탁 노인들과 함께살고 있는 곳은 이름도 생소한 유성구 송정동 삼면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마을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송정동 196번지 산기슭에 별장과 같은 현대식 건물로 자리잡은 '사랑의 집'(대지 9천평, 건평 140평, 건축비 총 2억 8천만원)은 정은조원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 지은 노인들의 보금자리이며 안식처이다. 사랑의 집은 정씨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7남매가 모두 출가한 후 죽으면 가져 갈 수도 없는 모든 것을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함께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1994년부터 집을 짓고 의탁할 수 없는 노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4년에 17명의 노인들과 함께 시작한 '사랑의 집' 생활은 경제적 이유로 순탄치만은 않았다. 가족들(형제)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후원, 그리고 정씨가 직접 도시락공장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남은 음식물들을 갖고와 노인들과 같이 생활했다. 2001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정씨는 직접 노동을 해가면서 친부모처럼 노인들을 돌보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난 2002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일부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다만, 법인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정씨는 '이후에 자식들이 재산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사랑의 집에는 45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는 35명의 노인들의 생활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10명의 노인들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사랑의 집' 인근에 개인주택을 얻어 정씨가 직접 돌보고 있어 의탁할때가 없는 노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부모와 자식 역할을 스스로 감당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씨의 모친인 (고)김순녀여사는 생전에 본인이 죽으면 해부학으로 쓰도록 7남매에게 유언을 남겨, 지난해 11월 18일 사망하자 7남매는 부모의 유언에 따라 건양대 의대에 모친 시신을 기증했다. 또한 정씨 부부도 지난 94년에 본인들이 죽으면 시신을 의학도들을 위해 해부학 연구용으로 쓰도록 시신기증을 약속한 상태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1월 25일에 정씨 부인인 김선환 여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대수술을 받고 3일만에 깨어나 현재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도 정씨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부인 병문안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2002년도 대전복지포럼이 선정하는 올해의 복지인 수상자로는 장애아동을 입양해 키우며, 장애아 유치원 통합교육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세진이 엄마' 양정숙(35세)씨가 수상하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 ■ 경륜장 찬반 의식조사 결과 - 반대 76.6%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 촉구

대전시의 경륜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10명가운데 8명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륜도박장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4.2%에 그친 반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76.6%로 나타난 것은 대전시가 그동안 다수 시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응답자가운데 경륜도박장 찬성이유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므로'가 26.7%로 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19.9%), '레저스포츠인 경륜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음으로'(19.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규모 도박장으로 사행심 조장 - 서민가정의 파탄(각종 유흥업소의 입주난립)'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교육환경과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기 때문'(30.8%), '경륜도박장은 건전한 관람스포츠가 아니라 도박산업이므로'(2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시의 경륜장 추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륜장 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은 물론 대전시민들과의 어떠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점과, 이번 설문조사결과가 그동안 대전시가 주장했던 다수시민이 찬성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난점 등은 경륜장 건설에 대한 시민여론의 왜곡은 물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의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더 뒷받침하고 있다.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한나라당과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우리의 견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의 실천의지를 다행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금 지방분권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제개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최근 소속의원의 국회발언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반대하는 등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선거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선거가 끝나면 무시하고 외면했던 과거의 정치행태를 답습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다라도 국민과의 협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바라며 동시에 야당으로서 강력한 집권적 대통령제의 폐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전윤철 부총리의 답변에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새 정부의 국정과

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강화와 계층간 형평성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분권적 개혁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자주재정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중앙정부에 빼앗긴 껍데기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주민참여와 자기책임성을 확보하는 요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집권적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간 불균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이양할 수 있는 세원과 구체적 이양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결과들을 수렴하여 자주재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우리는 정중히 권고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제 지방순회를 마감한 현 시점에서 남은 기간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명에 그치지 말고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대국민협약을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과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2월 1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 ■ '한국민주화운동사료 대전전시 추진위원회' 결성 선언문

우리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기차게 전개된 민주화운동이라는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는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민주화운동의 값진 성과였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연히 항거했던 자랑스런 자주독립운동의 전통은 해방 정국에서 미처 피어나지 못하고, '전쟁과 분단'이라는 민족의 상흔을 간직하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암흑의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670년대 암흑기를 거치면서 독재에 신음하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간절하게 염원하였고, 마침내 80년대에 이르면서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우리 지역에서 전국적인 불을 지폈던 87년 6월 민주항쟁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군부정권의 퇴진을 명령하고 이후 한국사회를 민주주의사회를 향한 대장정에 오르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87년 6월 항쟁이 증명하듯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전충남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전통을 우리는 언제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우리는 최루가스와 군홃발에 짓밟히면서도 거리와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목놓아 외쳤던 동지들과 시민들을 기억한다. 최루가스에 눈물이 흘러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의 눈에 담배연기를 불어주며 감동을 나누었던 지난 시절은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소중하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전시회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뜻을 성찰하고, 폭압적인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가슴 뜨거운 동지애를 나누었던 동지들과의 유대관계를 복원·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전시회를 계기로 대전충남 지역의 사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우리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위치를 평가하고, 지역의 모든 민주세력과 민주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전충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을 위한 지역 민주화운동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결코 '과거'를 추억하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피와 땀, 눈물과 희생 속에서 피어난 한국민주주의의 전통을 오늘의 현장의 거울로 삼아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민주화운동 만세! 민주주의 만세!

2003년 2월 13일

한국민주화운동사료 대전 전시 추진위원회

#### ■ 지방분권과 지방정치개혁운동, 복지,인권운동 전개 결의, 독립적 시민운동의 완성과 민주화 추진도 다짐

제8차 대전참여자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및 회원대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지 않는 독립적 시민운동을 추진해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8차 정기총회 및 회원대회를 오는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회원대회에서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회원투표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주요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참여자치연대 회원대회는 2002년 한해동안 매달 회비를 내는 796명의 회원과 124명의 자원활동임원들이 628건의 각종 사업을 벌임으로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극복했음을 자축하고,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자립적 시민운동의 기틀을 굳건히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조성된 1억5천3백여만원의 결산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대회는 시민운동의 한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독립적 시민운동의 기틀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는 시민과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활동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임원 경선의 실시, 주요 회무사항에 대한 인터넷 회원투표제를 도입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운동의 초점을 권력감시에서 종합적 개혁운동과 복지와 인권운동으로 확대기로 하고,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 운동, 지방분권운동, 한반도 평화정착운동, 최저임금법 지키기 운동, 비정규직 사회적 인권 옹호 운동을 추진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전의 지역정치가 또다시 일당지배로 회귀되어 시민의 이익을 외면치 못하도록 폭넓고 유연한 개혁세력의 연합을 구축하여 지방정치의 개혁운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회원대회는 아울러 2003년 예산을 1억7천6백여만원으로 책정하고 순수 회원의 회비로 재정의 조달을 결의하여 2002년까지 활동해온 참여자치연대후원회도 해산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회원대회는 200여 회원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딱딱한 회의 방식이 아니라 문화행사로 치뤄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들어가는 마당에서는 참여자 전원이 새해의 소망을 기록하고 회원 전체의 사진 모자이크로 만든 참여의 벽 제작, 어린이 놀이방 운영, 법률,의료 상담 등의 식전 행사를 갖었다.

두 번째 마당인 어울림 마당은 전체 회원가족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꽃을 들고 입장하여 한반도 꽃지도를 만들고, 10대로부터 60대까지의 회원대표 6명의 환영인사, 소리마당의 설장과 공연, 참여자치시민상 시상, 회원의 자녀들로 구성된 어린이 노래공연과 판토마임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마당인 다짐의 마당은 동영상 활동보고, 인터넷 총회 결과보고, 새임원 인사, 느티나무 노래공연, 새해 소망을 실은 종이비행기 날리기로 이루어졌다.

네 번째 나눔의 마당은 불신의 강 건너기로 불신, 전쟁, 차별, 부패, 지역감정, 불의 등을 상징하는 풍선을 터뜨리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애초 계획했던 공동체 놀이와 희망의 불꽃놀이는 대구 지하철 참사로 전연 취소하기도 했다. '시정을 공무원 만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으로 이용해야한다는 생각에서 회원대회장소를 시청으로 잡고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도록 준비 했다'는 박상우 기획국장은 이번 회원대회를 계기로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 <조선일보 반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선언문> 조선일보 반대는 역사적 소명이다

조선일보 창간 83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 115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조선일보 반대 선언에 나섰다. 그동안 조선일보 반대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 사회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조선일보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조선일보가 조장하는 여론 왜곡에 맞서 싸워왔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교정하기는커녕 더욱 교묘한 왜곡보도로 우리 사회 여론의 흐름을 왜곡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더 이상 조선일보를 방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운동가로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조선일보에 반대하는 것이 나이와 성별, 이념과 종교, 소속 단체를 초월한 모든 양심적 사회운동가들의 임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접근은 한반도에 전운을 드리우고 있다. 북핵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음은 물론,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반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조차 조선일보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친미사대주의적 보도 행태로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의 문제인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국제 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민족공조와 한미공조를 지혜롭게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민족공

조'와 '한미공조'를 기계론적 이분법에 따라 대답시키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민족공조'를 앞세워 '한미공조'를 깨는 행위인양 흠집내기식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권력화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의 대북 대외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조선일보는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개혁 대상이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반대하고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현재 사회운동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판단한다.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개혁의 걸림돌이다. 지난 대선 시기 조선일보는 '이회창 대통령만들기'에 앞장섰다. 국민들은 최소한의 형식적 교묘함마저 던져버린 조선일보의 치졸하고 적나라한 '대통령만들기'를 표로써 심판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왜곡 편파 보도로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대선 이후에도 노골적인 개혁 탄압걸기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부터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해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았으며, '객관보도'를 가장해 차별 등 특정 집단을 비호하는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 초기 조선일보가 개혁 정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개혁적 인사들을 악의적 왜곡 보도로 좌천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또 다시 시도되고 있는 조선일보의 '정권 길들이기'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개혁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동안 조선일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우리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나서게 된 것도 이 같은 절박한 이유에서다.

조선일보는 일제 강점기부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단 한번 반성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 친일, 독재 정권 미화, 탈세, 권언유착과 대통령만들기...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사죄는커녕 왜곡된 논리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뿐이다. 심지어 친일 경력은 '민족지'로 둔갑시켰고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의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반성 없는 조선일보의 악습은 이제 신문시장 왜곡의 책임을 다른 신문사에 떠넘기고 언론개혁운동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진정 '언론'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과거 잘못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조선일보가 왜 이토록 거센 반대운동에 직면했는가에 대해 자성해 볼 것을 촉구한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왜곡된 보도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조선일보가 변하지 않는다면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운동은 시민사회에 더욱 확산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조선일보가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과 민족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조선일보가 편파·왜곡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조선일보에 기고와 인터뷰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을 것이며, 주변에 널리 조선일보 절독을 권할 것이다.

2003. 3. 4

조선일보 반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선언 참가자 일동

## ■ 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불가 발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천명하고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를 설정했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듣고 경악과 함께 새 정부의 분권개혁의지가 출범부터 변질되고 있음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째 항목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했고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을 비롯하여 기타 재정분권을 위한 조치를 천명하였음을 기억한다.

이처럼 새 정부가 천명한 국정과제가 재정개혁의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표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전면 거부되고 있음에 새 정부의 조각이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약속하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며 선거에 승리했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며 실천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초부터 지방분권에 저항하는 관료집단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김 부총리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 대 20으로 국세가 많지만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 등이 나가 실제 사용액은 지방이 56%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을 집중돼 있는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방 교부금과 양여금을 주는 시스템은 고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 구체적 내용의 부적절함은 도외시하고라도 전임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는 재정의 중앙집권과 중앙통제의 실체인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일관된 견해로서 지방분권개혁에서 극복되어야 할 가장 핵심대상임을 강조하며 우선 이러한 견해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결정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재정분권의 중요한 걸림돌임을 숙지하고 있고, 이에 여러 지방재정전문가들이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극복하며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첫 내각의 부총리가 긍정적 사고를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재정개혁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발언을 하였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3. 우리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중앙정부에 빼앗긴 껍데기 지방자치가 주민참여와 자기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참여와 책임을 보장하는 자주재정권을 실현하는 요체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견해들의 타협적 산물이 지방소비세의 도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제전문가를 표방하는 김진표 부총리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집권적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 학술적 정책적 연구결과를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간 불균등을 완화시키면서 지방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세원이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끝으로 우리는 참여정부가 스스로 기술하고 있듯이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기존의 집권적 사고에 젖어 있는 중앙관료들의 손으로는 실현될 수 없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아울러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요부서에 분권지향적인 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각료인선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

2003. 3. 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 ■ 대전광역시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안에 접한 우리의 입장

- 공개경쟁의 의미에 정면 대치되는 수의계약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금고 선정을 위해 조신형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금고선정 및 운영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번 대전시금고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대전시의 막대한 예산을 취급하는 시금고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그 주요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수의계약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으로 전면 개정하라.

시금고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간 금고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1월에도 대전시가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하여 단순히 요식행위만 거처려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예산을 맡기는 중대

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함께 시민들과 공동으로 풀어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상기한다면 조례 제정 이전에 주민 공청회 내지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금고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조례안 제정 자체에만 몰두한 경향이 엿보인다. 결국 이번에도 사전준비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금고가 재정부실과 파산 위기 등으로 시 재정관리에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계약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오히려 수익계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채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전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시금고를 선정하려는 것과 조례안 제2조의 수익계약 조항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항이며, 공개경쟁방식의 도입 의미와도 정면으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 2. 단수금고 선정 원칙도 재고되어야 한다.

이번 시금고 조례안의 내용은 단수금고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복수금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금고 유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들의 입찰 참여의지를 저하시킴으로써 공개경쟁방식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음이 명확하다. -행사부 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의견을 낸 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금고는 복수금고제도를 통해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효과, 금고관리의 효율성 제고,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시금고 선정위원회에 구성에 전산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금고선정 기준에서 금고관리 업무능력 항목 가운데 전산시스템 운영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시금고 선정 세부 심의 항목에는 전자금융 납부계획, OCR카드 등 기술적 심사와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심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에 전산분야와 관련된 전문가가 제외되고 있다. 만약 신규 금융기관이 선정될 경우에 각종 전산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인수인계가 가능한 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산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이것 역시 이번 시금고 조례안에 대한 준비 부족에서 이른 문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전산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을 권고한다.

#### 4.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해 둔 조례가 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시금고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한 선정기준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심의결과 공개 예외조항이라든지, 위원장 호선 조항이라든지, 해지조항 등 비민주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관점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재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이 진일보한 자세로 대전시금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2003. 3. 1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최교진

### ■ UN합의없는 부시의 야만적인 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이 UN의 합의과정 없이 이라크 침공을 선포했다. 세계인의 반전목소리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외면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그들의 야만성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또한 걸프전 이후 수십만명이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에 안전과 방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침공하는것은 명분없는 전쟁을 반증하는 것으로,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다.

특히, 한국정부가 미국의 독단적인 북한침공은 막겠다고 하면서도 UN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전쟁에 병력을 파병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에 추종한다면, 한반도에서 UN의 결의없이, 한국의 동의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노무현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이라크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이라크 전 수행을 돕기위해 일본 자위대가 초계기와 함대를 파견한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라크전을 빌미로 일본이 침략전쟁에 대한 직접침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는 북핵위기보다도 더 심대한 동북아 불안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평화헌법준수, 군함의 참전반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세계 평화애호민들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다.

2003. 3. 19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최교진

## ■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에 즈음하여 수많은 양민이 희생될 이 비극적 죄악의 주인공 미국  
의 부시정권을 규탄하며, 비통한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 이라크의 유전을 탐내는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국제법을 위반  
한 채 자신의 계획을 강행하여이라크를 침공을 시작했다. 세계경찰국가임을 자임하는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이라크  
침공에 대한 어떠한 명분도 얻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부당한 계획이 유엔에서 표결되지 못할 것을 판단하고 독단적인  
침략을 도발하였다. 전세계의 반전운동과 평화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시정권은 탐욕스런 석유재벌과 오만한 강경  
파들에 둘러싸여 더 이상 정상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전세계의 평화애호가로부터 외면당한 초췌한 모습의 부시는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패권적 무력주의자들과 한 패가 되어 속보이는 침공을 시작하였으며 평화를 위장한 이 반인륜  
적 침공행위는 인류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동조하거나 함께 참전하거나 지원한 국가들 또  
한 숭고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900여 년 전 세상의 올바른 질서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유럽내의 유대인과 유럽 밖의 모슬렘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십자군 전쟁을 기억한다. 십자군전쟁은 서유럽 식민주의의 문을 열어 줌으로써 역사의 오명을 남  
겼다.

걸프전의 결과인 걸프증후군은 질병은 물론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먼지를 내뿜  
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걸프전에서 영국과 미국은 이라크 전차 1200여 대를 파괴했다. 전미걸프전참전용사센터는  
미군이 걸프전에서 300톤이나 되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 약 43만 6천여 명의 병사가 이에 노출됐다고 주장하고 있  
다. 걸프전의 10배나 되는 무기를 쏟아 냈다고 예측되는 이 참혹한 침략전쟁은 이라크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침공을  
감행한 미국과 영국군에게도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아프간공격에서 수많은 전쟁난민이 발생한 사실을 경험한 바 있다. 부시정권은 전쟁난민의 80%가  
여성과 아동, 힘없는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며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전 세  
계가 분노하고 있음을 자각하길 바란다.

그동안 대량살상무기의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유엔사찰단의 조사가 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왜 침공을 서두르는가? 미국처럼 핵무기와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많이 배치해놓은 나라도 없으며, 미국을 포함  
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빼더라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라크에  
대한 적용기준은 어디에서 온단 말인가?

인류의 역사는 진정한 정의의 기준과 평화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람의 생존권은 그 자체  
로 소중한 권리이다. 오만한 미국은 폭력적 방법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지 말라.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할  
수 없다. 미국인들조차도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2천4백만 이라크 국민 중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절반이  
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을 지금 즉시 중단하라 !

2.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우리정부는 한-미 동맹관계의 불모가 되어 군사적 패권주의 미  
국의 전쟁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석유패권을 장악하려는 이 전쟁계획에 도대체 무슨 명분  
과 근거로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 미군에 의한 노근리 양민학살을 경험했으며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데일리 상병의 고백처럼 전쟁은 총을 쏘아 죽인 자가 이긴 것 같지만 평생을 정신적 고통속으로 몰고 감으로써 전쟁  
상황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함께 죽이는 일이다. 한국정부의 명분없는 이라크파병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가져올 수 있  
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지난해 미군은 미선이와 효순이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갔다. 죽은 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다. 한미동맹관계를 대  
등하게 균형잡아 가겠다고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국익차원의 이라크전쟁 지지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를  
담보로 한 평화는 더 이상 명분없음이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인

류사회의 미래와 함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명분없는 파병지원 결정은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온 국민이 함께 만 들어가는 평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패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이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어떠한 형태로든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권고한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파병을 저지하라.

2003. 3. 2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용우

#### ■ 일본은 이라크침공을 빌미로 한 해외 군사행동-군사대국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해외 군사행동에 즈음한 한-일시민단체 긴급 공동성명

최근 내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편승하여 자위대의 함대와 초계기를 인도양에 파견 미군의 전쟁 수행을 돕기로 했다고 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쟁이다. 91년 이래로 계속된 경제제재로 수십만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어 간 '이라크'라는 나라로부터 미국이 안전을 위협받아 방어 차원의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황청이 이라크 침공이 '평화에 대한 범죄가 될 것' 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군의 전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위대의 군함과 초계기를 인도양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평화헌법의 파기이며, 가장 중대한 동북아 평화의 파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침략전쟁의 수행을 돕기 위해 전수방위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인도양에 파견할 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기를 과장하며 군비의 증강에 혈안이 되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군사대국이 되어버린 일본이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침략전쟁에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북한 문제에 비할 바가 없는 현실적이며 가장 중대한 동북아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당연히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군사행동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단독 군사행동을 반대한다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조 한국군 파병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해외 군사행동도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유엔의 동의 없이도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감행하며 일본이 이에 편승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유엔과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반증으로 믿는다. 전쟁의 피해를 어느 나라 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전쟁의 아픔을 채 극복하지도 못한 지금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남에게 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부도덕한 전쟁에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돕겠다고 참전하려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에도 모두 반대한다.

우리는 한국 일본 정부가 미국이 벌이려 하는 전쟁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의 나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함께 무고한 이라크 국민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세계 평화 애호민과 함께 이라크 침략 전쟁에 편승하여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간교한 책동을 저지할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굳게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히틀러의 예방전쟁에 대해 반대했던 미국은 예방 전쟁을 빙자한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일본은 평화 헌법에 의거하여 침략전쟁의 참여를 중가 중단하고,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한 군사력 증강을 즉각 포기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의 해외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2003. 3. 21

일본 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 현민의 회, 한국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이 일방적인 불법전쟁을 강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계 전역에는 역사상 유래없는 반전열기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세계시민들의 강력한 반전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 공격을 곧 감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전쟁임을 밝히고, 정부의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라크전 파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적 전쟁이다. 미국이 시도하는 전쟁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이다. 전쟁은 그 자체로 사라져야 할 것 범죄이지만 이번 이라크 침공계획은 그나마 유엔이 규정한 최소한의 개전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안보리를 구성하는 다수 국가들의 반대 속에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 발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위해 국제법 대신 군사력을 내세우려는 노골적인 야욕만이 확인될 따름이다. 이러한 불법적 전쟁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는 대신 이라크전을 지지, 지원하는 거래를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를 위해 남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만명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는데 동참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국악'을 앞세워 반인륜적 전쟁을 용인하고 나아가 이에 가담한다면 나찌즘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호소한다 한들 그 누가 우리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전투병이 아닌 공병대나 의료지원팀을 보낸다한들 명분 없는 침략행위에 동조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없애거나 감출 수 없다.

군사적 패권주의를 지원한 대가로 평화를 얻겠다는 발상은 망상이다. 부시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이라크 전 파병의 대가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국제여론과 유엔안보리의 결의조차 무시하고 무력사용을 강행하는 부시행정부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보라. '전쟁을 통한 해결'이 힘을 얻으수록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는 오로지 군사적 패권주의라는 악마적 힘의 좌절과 소멸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국인들조차도 이라크전을 반대해 나서고 있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민의 50% 이상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민의 과반수가 부시의 군사적 맹동주의가 좌절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이라크전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여론은 물론, 상당수 미국민으로부터도 환영받기 힘들다. 입지를 잃어가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부시행정부에게 무모한 군사력 행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 이라크전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불평등하게 규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에 따르면이라도 한미 양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UN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UN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듯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이번 파병 지원을 허용치 않는다. 노무현정부가 이번에 파병 지원의 명분으로 삼은 한미동맹관계는 도리어 미국의 전쟁을 막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한미동맹 조약을 위반하는 아이러니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답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첫 외교부터 국민여론을 외면하는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의 움직임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그 정점에서 극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이로써 냉전 이후의 세계사가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극히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악'을 재단하여 '무모한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불법적 전쟁을 옴으로 막겠노라고 이라크로 향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에서의 논의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군대파견까지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전 지지, 지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파병을 저지해야 한다. 올해로 우리는 정전 50주년을 맞는다. 분단과 전쟁으로 점철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해 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라크 침략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발상은 7천만 겨레의 평화 열망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며 반인륜적인 이라크 전쟁지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가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이며, 역사적 책무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국회는 마땅히 파병안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 지원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평화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나아가 전세계 평화애호 세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3. 3. 24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 국회의원들은 위헌적 파병동의안에 부표를 던져라, 표결결과 2004년 총선 중요한 후보평가 근거로 삼을 것...

1.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병부대와 의료부대 파병을 내용으로 하는 국군과전동 의안'이 상정되고 표결에 붙여지게 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전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민의견수렴 없이 파병동의안을 밀어 부치고, 이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원들마저 파병의 의미와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원칙'을 강조하고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가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과 전세계인의 강한 반대 속에 유엔 안보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한 이라크 침공을 지지해 나가고 국군 파병까지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상당수의 나라들조차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불법적 침공에 군대를 파견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어떤 국익과 실리를 가져다 줄 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국민적 논쟁이야말로 한국정부의 외교력과 국익추구를 뒤받침 해주는 힘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밀도 끝도 없는 '국익'과 '실리'를 강변하면서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식의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인 대국민담화로 '토론평화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현실팽크처럼 내팽개쳤다.

3. 이 결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국방위와 여야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병이 합당한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람은 국민들이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도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배제된 만큼, 민의의 대행기구인 국회에서라도 파병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국방위는 이같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한미동맹'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1시간만에 파병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4. 특히 우리는 국방위의 파병안 심의가 매우 중요한 쟁점을 외면했다고 본다. 이 파병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의가 그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불허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파병안의 위헌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했고, 적어도 국방위 의결을 거친 후에도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에서 별도의 축조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본회의 표결 전에 공청회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법사위 심의를 통한 위헌여부에 검증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표결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고, 주요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112조 1항(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규정)에 따라 실명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표결의 익명성 뒤에 숨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에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이번 파병동의안에 부표를 던질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국익과 실리라는 명분으로 불법적 침략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한국이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쓸 수가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2004년 총선에서 중요한 후보평가 근거로 삼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3. 3. 24

참여자치지역운동대

## ■ 대전시민을 우롱한 유성장외경정장 기습개장을 개탄한다!

우리는 경정운영본부가 지난 3월 26일부터 유성구 봉명동 콤플렉스 빌딩(2-7층, 기존 장외경륜장)에 장외지점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대전시가 최근 경륜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무리를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급작스런 유성장외경정장 개장은 대전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도박산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총매출 1천억원대에 이르는 장외경정장 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전여론수렴 절차없이 유성장외경정장이 개장된 것은 실로 개탄스런 일임에 틀림없다. 또한, 주말(금,토,일)에 개장하는 장외경륜장과 장외경마장(월평동)에 이어 이번 장외경정장의 평일개장(수,목)은 지역주민들의 사행심을 더욱 부채질 할 뿐만 아니라, 대단위 교통유발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장외경정장 개장과 관련하여 해당구청인 유성구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평소 장외경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대전시조차도 시민을 대리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민여론 수렴없이 기습 개장한 유성장외경정장은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로서 공기업인 경정운영본부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더불어 시민적 동의를 받을때까지 폐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관할 기관인 대전시와 유성구 역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3. 4.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최교진

## ■ 교육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문

학생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헌법 제10조와 교육기본법 제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대전 시내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0교시 수업, 혹은 자율학습,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하여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을 앗아가고 있을뿐만아니라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으로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는 소위 명문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반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나머지 학생들을 그들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반, 불법찬조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성적과 학력제일주의에 편승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교육관료와 학교 당국, 여기에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무소신을 택한 학부모들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부합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7일, 교육부문 개방계획서(양허안)를 제출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제 논리를 빌어 교육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적 소신과 개혁성을 의심케 하는 일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경제부처 통상관료들은 "현행법상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 번 제출된 양허안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현행 국내법과는 달리 사실상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또, "초·중등 교육을 제외하고 고등교육의 일부만 개방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주된 원인이 대학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번 개방의 테이블에 올려지게 되면 뒤이어 거센 추가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번 결정이 강대국의 개방압력에 굴복한 통상관료들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20일 오전에 감행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참담한 슬픔을 느끼며 그를 규탄합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독단과 오만의 결정판인 침략 이유와 명분 아래 감행되고 있는 전쟁의 광기에 소름이 끼쳐옵니다. 국제 사회의 합의 구조와 다수의 반전 요구를 무시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은 역사적 과오에 따른 엄청난 재앙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재난인 6.25전쟁의 교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아닌 무력에 바

당한 일방적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 한 민주사회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전교육연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청에서는 형식적인 공문과 단속만을 지시하지 말고, 특별반과 불법찬조금 문제가 불법이라면 교육당국이 앞장서 폐지하고 중지하도록 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반해 편법사례를 적발 시 강력한 제재와 꾸준한 단속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각 학교에서는 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특별반 폐지에 대한 확고한 교육적 입장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자율학습 지도에 따른 지도비 명목의 불법찬조금 조성 행위를 근절하고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 반영 노력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1. 학부모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도하고, 내 아이만 좋은 대학가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육과 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정규수업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결정을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는 국가의 교육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1. 교육부와 교육부총리는 이 나라 공교육을 지킨다는 각오로 양허안 제출에 대해 끝까지 소신을 지켜야 한다.

1.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모든시민·사회단체·교육주체에대해, 교육개방 반대운동에 떨쳐나설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1.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명분 없는 반인도적 침략전쟁임을 분명히 밝히며, 전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며, 정부의 파병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3. 4. 1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민주교육개혁 대전시민연대

■ 2006년부터 5년간 지역주민 8,200억 ~ 1조 2,000억원 부담,  
독실분석 결과 같은기간 1,400억 ~3,800억 손실

대전경륜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방세수 확보’와 ‘사행심 조장’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경륜장 개장후 5년동안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최소 1,200억원에서 3,800억원의 손실을 보게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기독교청년회(YMCA)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대전경륜장 건설 경제성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전경륜장 건설을 통해 얻는 지방세수 등의 득보다 도박중독자 양산 등 지역주민이 입는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전경륜장이 개장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지역으로 귀속되는 지방세수는 6,700억~8,200억원인데 반해, 대전충남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8,200억~1조2000억원에 이르러, 결국 1,200억~3,800억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지적하고, 대전시는 경륜장 건설에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손실 근거로는 대전경륜장이 개장되면 향후 5년간 얻어지는 지방세수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체육진흥배분액 등 최소 6,700억~8,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베타손실금액과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비, 도박중독자치료 등 사회적비용 등의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은 8,200억~1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 경륜장 고객가운데 대전충남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잃는 비용만도 최소 5,201억에서 많게는 9,002억원에 이르고, 대전경륜장 건설 감가 상각비 274억을 포함하면 대전시가 얻는 지방세수 비용과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성인인구 9.3%(도박인구 1인당 523,560원) 기준을 대전광역시에 적용하면 93,815명에 이른다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단순계산하면, 5년간 2,72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으며, 기존 3개 장외발매소에 이어 대전경륜장이 개장한다면, 기존 도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박수요를 창출할 수 밖에 없어 대전시 도박중독자만도 10만명은 족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대전경륜장 개장에 따른 지역자금 역외유출 비용도 5년간 1,480억~1,896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이단체는 현재 51개소 이르는 도박장이 앞으로 70개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경륜장 개장은 새로운 도박인구의 신규수요를 가져와 지역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하며, 경륜장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대전시 재정문제의 핵심은 지하철 건설에서 기인한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정책 도입과 더불어 지하철 국가 공사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 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2003. 4. 1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기독교청년회

## <첨부자료 1 / 대전경륜장 건설 경제성 분석>

### 1. 조사개요

#### 1.1. 분석배경 및 목적

대전경륜장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대전경륜장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대전경륜장이 만들어지면 막대한 지방세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서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그러나 대전경륜장 타당성 보고서에는 지역주민의 부담(즉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수진분석에 대한 비교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 확보라는 타당성을 제시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대전경륜장 개장에 따른 이해득실 분석을 위해 i) 도박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ii) 지역민 도박참여자 손실액, iii) 대전시 도박중독자 추산, iv)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산, v) 대전충남 지역주민 부담금, vi) 지역자금 역외유출 비용, vii) 결론 및 대안을 제시하고, 대전충남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역민 매출액 대비 지방세수 확보’ 및 ‘사행성 조장’이라는 이해득실을 비교분석 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분석방법

대전경륜장 이해득실 분석을 위해 대전시에서 용역의뢰한 ‘대전경륜장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였으며, 도박산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기초 자료를 수집 참고 하였다. 아울러, 대전경륜장 이해득실 분석을 위해 지방세수 대비 지역주민 부담금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 2. 도박산업 현황 및 문제점

#### 2.1. 도박산업 실태

- 총매출 / 13조 9,396억원

※ 2001년보다 29.9% 늘어났고 2000년도에 비해서는 두배나 급성장

- 도박 참여인구 / 2,320만8천명(2001년대비 21.4% 성장)

- 총레저산업 대비 도박산업 비율 / 51.4%

※ 같은기준 일본의 26%에 비해 두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 도박산업 참여자 총 손실액 / 4조 717억원(2000년도 보다 두배나 급증)

- 1인당 1일 베팅비용 / 경륜은 55만9천원으로 카지노 다음으로 높음

<참고자료> 국내 도박산업의 부문별 1인당 1일 베팅액 비교

	강원카지노	경 륜	경 마	경 정	복 권
2002년(만원)	224.9	55.9	47.0	27.9	0.41

## 2.2. 도박시설 현황 / 현재 총 51개소

구 분		위 치
경 마 장	경마장(2개소)	경기 과천, 제주
	장외발매소 (28개소)	강남, 광명, 광주, 구리, 논현, <b>대전</b> , 마포, 부천, 부평, 분당, 서초, 선릉, 성동, 수원, 송인, 용산, 안산, 영등포, 의정부, 인천, 일산, 중랑, 창동, 천호, 강북, 부산, 시흥, 대구
경 료 장	경륜장(2개소)	서울, 창원
	장외발매소 (13개소)	수원, 상봉, 일산, 동대문, 인천, 분당, 장안, 산본, 부천, 관악, 당산, 길음, <b>대전유성</b>
경 정 장	경정장(1개소)	서울 미사리
	장외발매소 (3개소)	<b>대전유성</b> , 장안, 상봉
우 권 장		경북 청도
카 지 노		강원 정선

※ 앞으로 부산경륜장, 청도 우권장, 광주경륜장, 각종 발매소 등 70여개로 늘어날것으로 전망.

## 3. 대전경륜장 대전충남 지역민 손실액

### 3.1. 대전광역시 순수재정 수입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레저세	408	523	513	636	649	780	825	965	1,054	1,202	3,449	4,106
지방교육세	245	314	308	382	390	468	495	579	632	721	2,070	2,464
지방체육진흥배분액	70	103	132	213	215	303	326	423	474	580	1,217	1,622
소 계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 대전시 순수재정 수입금 = 레저세 + 지방교육세 + 지방체육진흥 배분액

· 레저세 = 경주권매출액 × 10%

· 지방교육세 = 경주권매출액 × 6%

· 지방체육진흥 배분액 = 수익금(발매수득금(경주권매출액 - 환급금 - 제세) - 운영경비) × 60%

대전경륜장 운영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시가 얻는 순수재정 수입금은 2안일 경우 총 6,736억, 3안일 경우 8,192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전경륜장 타당성 전망 용역 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다.

### 3.2. 대전충남 지역민 도박참여자 순 손실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손실액(70%)	881	1,183	1,098	1,420	1,376	1,718	1,733	2,098	2,194	2,583	7,286	9,002
손실액(50%)	629	845	784	1,014	983	1,227	1,238	1,499	1,567	1,845	5,201	6,430

※ 대전충남 지역민 고객 손실액 = (경륜 총 매출 - 환급금) × 70%

※ 2003년 4월 1일 현재 도박시설은 전국에 총 51개소이나 앞으로 부산 경륜장, 경마장, 청도 우권장 등을 포함해 각종 장외 발매소가 지방도시에 개장하면 총 70여개소는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간, 업종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대전충남 지역민들의 대전경륜장 이용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전경륜장을 이용하는 총 고객가운데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 시점 예측보다는 앞으로 업종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큼으로 인해서 각각 50%,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총 고객 점유율 70%로 적용할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충남 지역만이 입는 총 손실액은 2인일 경우 7,286억원, 3인일 경우 9,0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객 점유율 50%를 적용해도, 2인 5,201억원, 3인 6,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결과를 대전시가 얻는 순수 재정수익금과 비교해보면, 총 고객 점유율 70%를 적용하면 최소 550억원에서 81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총 고객 점유율 50%를 적용할 경우, 1,535억에서 1,762억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비 감가상각비(5년간) 274억원, 역외유출, 도박중독자 치료 등 사회적비용 등을 감안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경륜장의 수익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업종간(경마,경륜,경정,카지노,우권 등) 경쟁과 지역간 경쟁이 본격화 될 경우 수익성이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대전경륜장은 세수확대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호주머니만 축내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마저 있다.

### 3.3. 대전경륜장 건설 감가 상각비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273.5

※ 대전경륜장 타당성 용역보고서 참조

### 3.4. 대전시 도박중독자 추산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한 국	대전시(예측)
도박중독자		2.6%	2.1%	9.3%	93,815명
문제도박자		1.3%	1.1%	5.5%	51,598명
병적도박자	1~1%	1.3%	1.0%	3.8%	43,217명

※ 도박중독자(93,815명) = 2001년 대전광역시 20세이상 인구(1,008,276명) × 9.3%

※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보고서(200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9.3%에 해당되는 약 30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산하고 있음.

현재 도박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기준으로 2006년 대전광역시 도박중독자 인구를 추산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박중독자 인구추계라 판단되며, 최소한 10만명은 족히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특히, 도박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과 대전시민들이 더 많은 돈을 잃게 되고, 또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기존 3곳에 이르는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대전경륜장 개장은 결국 기존 도박수요를 충족시키는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박수요를 창출할 수 밖에 없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대전시는 유념해야 한다.

### 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 대전시 성인인구 × 도박중독율(9.3%) × 1인당 비용(523,560)

※ 도박인구 1인당 사회적 비용 추산 = 10조(2001년 사회적 비용) ÷ 1,910만명(2001년 도박인구)

※ 대전시 인구증가율 1.5% 적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역의뢰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2002)』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범죄 등 국내의 사회적 손실을 연간 10조로 추산하고 있어, 2001년 합법적인 도박산업 매출액 9조원을 웃돌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총 2,72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 4. 대전경륜장 득실 비교분석

##### 4.1. 대전·충남 지역사회 부담금(지역민 고객점유율70%일 경우)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손 실 액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지역주민 베테손실 점유 70%	881	1,183	1,098	1,420	1,376	1,718	1,733	2,098	2,194	2,583	7,282	9,002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273.5	27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소 계	1,464.7	1,766.7	1,689.7	2,011.7	1,975.7	2,317.7	2,340.7	2,705.7	2,809.7	3,198.7	10,280.5	12,000.5
지방세수 수입금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소 계											-3,544.5	-3,808.5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고객 점유율이 70%였을 때, 대전경륜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대전충남 지역사회 총 부담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안은 1조280억원이었으며, 3안은 1조 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경륜장 지방세수 수입금과 비교해보면, 2안일 경우,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3,545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안일 경우 3,809억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2. 대전·충남 지역사회 부담금(지역민 고객점유율 50%일 경우)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손 실 액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지역주민 베테손실 점유 50%	629	845	784	1,014	983	1,227	1,238	1,499	1,567	1,845	5,201	6,430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273.5	27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소 계	1,212.7	1,428.7	1,375.7	1,605.7	1,582.7	1,826.7	1,845.7	2,106.7	2,182.7	2,460.7	8,199.5	9,428.5
지방세수 수입금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소 계											-1,463.5	-1,236.5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고객 점유율이 50%였을 때, 대전경륜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대전충남 지역사회 총 부담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안은 8,199.5억원이었으며, 3안은 9,42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경륜장 지방세수 수입금과 비교해보면, 2안일 경우,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1,464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안일 경우 1,237억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3. 지역자금 역외유출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국민체육진흥기금	12	17	22	34	35	49	52	68	76	93	197	261
청소년육성기금	12	17	22	34	35	49	52	68	76	93	197	261
산업발전기금	20	30	38	60	61	85	92	118	132	162	343	455
문화관광부장관사업	3	4	5	9	9	12	13	17	19	19	49	61
농어촌특별세	84	113	105	135	131	164	165	200	209	246	694	858
소 계	131	181	192	272	271	359	374	471	512	613	1,480	1,896

지역자금 역외유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안일 경우 1,480억원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안일 경우 이보다 많은 1,896억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5. 결론 및 대안제시

“대전시 재정난 대책, 경륜장보다는 지하철 건설·운영의 국가공단화가 시급”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경륜장 건설은 새로운 도박인구의 신규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 구성을 추진중에 있는바, 대전시도, 지역민의 삶의 질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륜장 유치보다는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도박관련 법의 개정을 중앙정부기관에 요구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인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 재정문제의 핵심은 지하철건설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로의 교통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민의 합의를 모아, 지하철 국가공사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전시 지하철은 막대한 건설비 소요는 물론, 개통이후에도 매년 200-300억원의 막대한 순수운영 적자를 가져와 대전시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하철 국가공사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지하철 국가공사화를 위한 정치권, 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첨부자료 2 / 대전경륜장 건설 반대 공동성명>

*10만,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대전경륜장 건설 반대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도박산업 총 매출이 13조를 넘어섰으며, 국민 두명중에 한명꼴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을 경험할 정도로 도박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도시라는 대전시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전시에도 최근들어 대형 도박시설이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마권장외발매소와 장외경륜장에 이어, 장외경정장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등 지방도시가운데는 처음으로 3개 도박시설이 모두 들어와있는 도박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꼴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도박산업에 대한 수요와 적정 공급계획 조차 없이 지방세수 확대라는 명분아래 대전경륜장 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대전시가 경륜장 건설 강행을 위한 왜곡된 여론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붙일 것을 권고한바 있으며,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정확한 도박수요를 조사하고 정적 공급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 한 바도 있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에 과열되고 있는 도박산업유치 경쟁과 도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도박수요를 조장하여 지역주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지방세수를 벌어들여려는 무책임한 행태이자, 스스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않을 수 없다.

특히, 대전시가 과포화 상태에 이른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세수증대와 시민레저 기회제공이라는 명분아래 대규모 경륜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10만 도박중독자(우리나라 도박중독자 성인인구의 9.3%)를 만드는 것을 재촉하는 결과나 다름없다.

상기해보면, 그동안 시민단체의 경륜장 사업 포기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려는 노력 보다는 이곳에 하지않더라도 인근에 위치한 충청북도나 전라북도가 경륜장 건설을 하게된다며, 결국 대전시민들의 손실은 더 커진다는 대전경륜장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리를 끊임없이 유포해왔다.

그러나 과연 대전시가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광역단체와의 공동 협의 한번 하였는지, 또는 도박산업 허가권이 있는 문화관광부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대로 한번 언급한 적 있는지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전시는 지하철 등 굵직굵직한 각종사업과 국세 위주의 중앙집권적 조세체계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대전경륜장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세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잘못된 교통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민의 합의를 모아 지하철 국가공사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이러한 지구노력은 외면한채 대전경륜장 건설만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새로운 도박수요를 유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돈을 잃도록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대전시 스스로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전경륜장 경제성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전경륜장 건설은 지방세수 등 지역사회가 얻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훨씬크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전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경륜장 건설이 새로운 도박수요 창출과 지역주민의 막대한 손실로 귀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대전경륜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대전시의 경륜장건설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울러, 무분별한 도박산업을 규제할 수 없는 기존 제도로는 시민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열된 도박산업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경륜도박장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시민여론 수렴을 절차를 외면하고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대전경륜장 건설을 추진한다면 범시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3. 4. 11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구체적 계획수립을 담당할 두 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 성과가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서 두 위원회의 역할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노무현대통령과 지방분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우리들의 요구사항 속에는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들은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로서 과반수를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방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두 위원회의 구체적 구성을 보면 우리의 두 가지 요구조건인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와 '위원의 과반수를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구성'이 모두 무시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한 민간인 위원들의 구성을 볼 때 분권적 사고를 갖고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의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집권구조를 타파하고 수도권집중현상을 시정하는 매우 어려운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의 요구보다는 중앙의 논리가 관철되지 않을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새로 출범하는 두 위원회의 활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 전

기가 되기를 거듭 희망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은 지방분권국민운동과의 국민협약에 근거하여 지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협의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2003. 4. 13

지방분권국민운동

## ■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경륜장 신설을 중단하라!

우리는 최근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박산업의 유치코자하는 것을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며 지역사회를 폐쇄화할 것이라는 염려를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보아 왔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나친 중앙집권으로 말미암아 자주재정권을 확보치 못한 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어, 돈이 된다면 도박산업이라도 유치해서 재정능력을 키우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역 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확보하지는 것은 아랫 돌 빼서 윗 돌 매우는 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라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에 이미 51개의 도박장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가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300만명에 이르고, 이에 따르는 가정파괴와 범죄, 중독자에 대한 재활을 위한 비용이 도박산업의 총매출액인 9조8천억을 훨씬 넘는 10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이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런 도박산업이 국가기관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사행행위를 단속하고 그 폐해를 막아야 할 정부기관들이 오히려 도박산업의 진흥에 앞장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서울과 창원에 이어 중부권과 남부권에 각 1개의 경륜도박장의 개설을 허가키로 방침이 정해지자 최근 광주시와 나주시에 이어 대전시가 이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대전에 경륜도박장이 건설·운영되면 인근지역인 충청권과 전북권의 지역민들이 엄청난 돈을 도박에 잃고 도박중독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의 건립 추진의 중단을 요구한다.

일부에서는 건전레저문화의 육성차원에서 경륜장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륜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경륜장 이용객 한사람이 하루에 배팅하는 금액이 평균 55만4천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명백히 도박이지 건전한 레저라 할 수 없다.

대전 인근지역민 보다 서울 등 외지인들의 이용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도박중독자가 되어서 안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재의 잠실경륜장이 겨울 휴식기에 창원경륜장의 매출의 50%가 달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 경륜장이 2005년부터 실내경륜장으로 재개장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이용객이 대전과 인근 지역민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충청권 어디나 전북 어디에도 경륜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어느지역에 입지하여도 지역자금 역외유출, 도박중독자 양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폭증, 입지 지역의 생활 환경 악화가 나타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시는 경륜도박장 건립을 추진하며 대전이 추진치 않는다면 청원, 익산 등에 다른 광역시도가 경륜장을 만들게 되어 대전 지역민의 손실이 더 커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런 주장에서 일종의 지역이기주의적, 지역민을 버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극단적 행정편의주의를 확인한다. 지역민에게 해로운 일이라면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고 다른지역의 입지도 되지 않도록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협력을 구할 일이지 이를 핑계로 나쁜일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경륜장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인근지역에 경륜장이 본격 영업을 하게되면, 인근 4개 시도의 경우 수 십만명의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게 되고, 막대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불가피하다. 어느 지역에 경륜도박장이 입지 하더라도 인근 지역민의 피해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륜장의 건립을 공동으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대전시는 경륜도박장 건설 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도박산업 종합 정비계획을 세우고, 모든 신규 도박산업장 개설을 중단하라!
- 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이양, 교부세율의 인상을 즉각 단행하라!

2003. 4. 1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 당진참여자치연대 · 보령참여연대 · 아산시민모임 · 천안시민포럼 · 청양시민연대 · 태안참여자치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 대전시는 경륜장 추진 방침을 철회하라!

오늘 대전시장이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경륜장 추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10만 대전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며, 지역차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진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의 공정한 여론 수렴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방침을 공포한 것으로 밀실행정으로 규정, 엄중 규탄한다.

우리는 그 동안 지방재정의 어려움의 측면에서 대전시가 경륜장 유치여부를 고심한 것을 이해하며, 재정난은 대정부 투쟁을 통한 자주재정권의 확보, 지하철의 국가 공단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해왔다. 나아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찬반이 갈려 있는 사안임으로 주민투표에 부치거나 적어도 공정한 여론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공청회와 여론조작을 감행하며 시청의 국실장들의 모임인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추진 방침을 결정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경륜도박장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이 도박 수요의 과잉 계상 및 비용의 과소 계상을 통해 타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정확성도 반증한바 있다. 전국 곳곳에 경륜장 및 유사 도박장이 개설되면 총 이용자는 늘지만 대전 경륜장의 이용객은 감소하고, 지역민의 이용비중은 높아지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타당성 조사에 근거한 경륜장 건설 추진은 지역민을 도박중독자로 내몰고 대전시청만 부자가 되지는 알뜰한 계산 속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개혁이라고 주장해온 염홍철 대전시장은 '도박장에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시제정을 충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륜장 건립 재원도 결국은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홍선기 전임시장이 대전시를 빚더미로 만들었다며, 대전시의 건전 재정을 위해 빚을 줄여나가겠다고 염홍철 시장이 도박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빚을 낸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설혹 민간자본을 통해 건립한다 해도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는 가능치 않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경정장, 경륜장, 카지노 등 불법처럼 증가하는 대형 도박장의 신설은 도박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투자비 회수 실패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전시가 빚을 내는 방식으로 도박장 개설에 나서서는 안된다.

우리는 금번 대전시장의 경륜장 건설 방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의 승인 등 경륜장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재원 조달, 도시계획 변경 등 전반의 과정에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이의 건립을 결사 저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경륜장 건립 저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착수할 것이며, 전국적인 시민단체의 연대도 추진하여 신규 도박장인가의 중단, 기존 도박장의 종합 정비 계획 마련에 중앙정부가 나서도록 범국민적 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다.

대전시가 경륜도박장을 개설하려는 것은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도박을 해서 가정 경제를 살찌우자고 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패륜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가 주민 투표나 공정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경륜장추진 방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2003. 4. 14

대전기독교청년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 대전,충남,충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창립

대전충남, 충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 대전ymca에서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약칭 대전경륜장 공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전시가 최근 대전경륜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과 과포화상태에 이른 도박산업의 문제를 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경륜장 건립저지를 위해 오는 6월 대전시청 농성돌입을 비롯해 거리캠페인, 전국대책위 구성 등의 강도 높은 활동을 선언했다.

또한 이들은 대전경륜장 문제에 대한 10문 10답을 통해, 우리나라 도박산업이 총 레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이는 일본의 두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대전시가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경륜장을 유치하기 이전에 도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적정공급계획부터 세울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전시가 그동안 경륜장을 가족과 함께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라고 주장하지만, 경륜장의 경우, 1인당 하루 평균배팅 비용이 55만 9천원에 이르고, 가족과 동행하는 고객은 5.9%밖에 안되고, 15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고객의 절반이 넘는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전시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2006년 경륜장 개장이후 5년간 매년 1,500억원의 지방세수를 거둬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에 유일한 창원경륜장의 경우도 서울경륜장 겨울휴장기간동안 1년매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으며, 2006년 개장시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광명경륜장이 개장하고, 부산에 경륜장과 경마장이, 경북청도에 우권장, 광주에 경륜장이 들어서게되면, 예상대로 매출이 오르게 된다면, 그만큼 지역주민의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전 10만명 등 수십만명의 도박중독자가 양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으며, 대전경륜장 추진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대전경륜장 공대위에는 대전지역 22개 시민단체와 충남지역 22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충북지역의 경우 장외경마장 공대위가 꾸러지면 공대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적인 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창립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단체별로 거리캠페인과 현수막걸리 운동, 각계가 참여하는 릴레이선언, 사이버 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유치신청을 문광부에 하게되는 6월까지 시의회 간담회와 정책워크숍 개최, 시민토론회, 문광부장관 면담 등의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대전경륜장전립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지방자치시대 10년의 역사가 부끄러울만큼 지나친 중앙집권적 조세체제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부재로 말미암아 대전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지방의 크고작은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에서까지 지방세수 확보란 미명아래 경륜장과 경마장 등 각종 도박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을 내걸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여론과 경륜장 개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여론을 외면한채 지난 14일 오후 대전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한마디로, 돈되는 일이라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온 도박산업이라도 유치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싶은 자치단체장의 욕수를 드러낸 사례이자,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상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확보해보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미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전국에는 경륜장을 비롯해 경마장, 경정경, 카지노 등 51개에 이르는 각종 도박시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산경륜장·경마장, 청도우권장, 광주경륜장, 각종 발매소 등 2~3년내에 7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박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적정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전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정부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외국의 3~4배 많은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따른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로 추산하고 있어 도박산업 총매출 9조8천억원을 훨씬넘는 배보다 배꼽이 큰 과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 레저 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산업의 비율도 일본의 26.5%보다 두배나 많은 5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전국확산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부화뇌동은 건전한 레저산업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이다.

실제로, 기존 창원경륜장이 서울경륜장 휴장이 3개월동안 1년 총매출의 50%를 차지할만큼 서울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대전경륜장이 개장하는 2006년에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광명경륜장이 개장하고, 부산(경마, 경륜, 경정)과 광주(경륜), 경북청도(우권) 등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대형도박장이 들어서게되면, 기존 중소도시의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시장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경제성마저도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케 될 가능성마저 예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전경륜장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2010년 한해동안만도 최소 300만명의 고객이 입장해야만 하는 업종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대전,충남북 지역민들의 새로운도박 수요창출로 10만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대전경륜장 등 도박산업 및 도박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적공급계획에 의한 건전 레저산업 육성을 누차에 걸쳐서 정부와 대전시에 요구한바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유치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여러차례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충남북 도민들의 경우, 대전경륜장 고객가운데 10%를 차지할 경우, 개장이후 5년간 각각 1,040억 ~ 1,3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순수손실이 유발되어, 대전경륜장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도박에 잃고 도박중독자로 전락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전충남북 어디에도 무분별한 경륜장 유치는 반대한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경륜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레저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용역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경륜장 1인당 하루 평균 베탱비용이 55만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유형별 조사에서도 가족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5.9%밖에 안되고, 월 입장횟수 12회 가운데 10회 이상이 55.2%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하지도 않고 경륜장에 살다시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시설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유치를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시민적 합의를 통해 도박산업의 문제가 파국적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대전시와 정부는 도박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이미 과잉공급된 도박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전레저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문화관광부는 도박시설의 추가공급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당한 권면을 외면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전시와 이를 허가한 문화관광부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3. 4. 24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 ■ 서구청의 관변단체 지원 예산 부활에 즈음한 13개 시민단체 공동 논평

서구청이 지난 해 의회 예산 편성에서 삭감된 관변단체 지원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정액보조단체라는 이름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다시 계상되기도 했다.

우리는 서구청의 이러한 추경안이 주민 복리의 증진이 아니라 이익단체화된 관변단체에 대한 눈치보기식 혈세 낭비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못해 안달인 까닭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관변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오히려 참다운 주민참여를 가로막아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구청은 알아야한다.

우리는 국민운동단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조직을 운영해온 단체들에게도 의회의 예산 삭감에 항의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운동이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관이 주도하는 국민운동에 시민들이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대 상황이 바뀐 만큼 형식과 내용이 바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서구의회에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의 삭감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을 요청한다. 적정한 사유 없이 삭감된 예산이 부활된다면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이며 주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스스로의 예산 절감 노력을 더욱 기울임으로서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면하고자 한다.

2002. 4. 25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전YMCA / 대전여민회 / 대전여성환경포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고수협의회 / 대전충남생명의숲 /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홍사단 /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 ■ 최저임금 위반 업주에게 레드카드를!

###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고소·고발 창구(256-0092)개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사회인권분과는 5월 1일 제11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고소·고발 창구를 개설"한다. 이는 생존의 경계선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제정(1986. 12. 31)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업장들의 최저임금위반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시와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 신고접수 및 상담을 받고 위반사업장을 노동부에 시정조치 요구하는 한편, 미시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사회인권분과 장동환 분과장(변호사)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나마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소고발창구를 개설하게 되었다"며 "작은권리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고 감시와 신고활동을 직접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액은 시급 2,275원, 월 51만 4,150원(하루 8시간, 월 226시간기준)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8.3%인상된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대비 36%에 불과한 금액이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2002. 1~2002. 5)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의 실태조사 결과 음식점, 편의점, pc방, 미용실, 보육교사, 노래방, 이동통신대리점, 의류점, 비디오방 등 비정규노동자 밀집업종 98곳 등 총 378개 사업장 중 시급 2,100원 미만 사업장이 121개로 조사사업장의 32%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으로 밝혀졌다.

이에 창구개설과 맞물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는 대전지역 최저임금 실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여성, 고령, 청소년노동자 등 취약계층 및 용역·파견노동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표전화는 256-0092(공공권리)이며, 상담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로 확인되면 위반사업장을 노동부에 시정조치 요구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 위반사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바란다.

2003. 4. 30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송동호

## ■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뭐가 구린가? 대전시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대전시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은 그동안 대전시의 정보공개 관행과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않은 수 없으며, 열린행정에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물상식적 행태라는 점에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대전경륜장 건설 추진을 확정짓는 계기가 되었던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나,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 하였으나, 그동안 판공비를 비롯해 각종 행정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왔던 대전시의 행정정보공개 관행과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엄홍철 대전시장이 그동안 누차 강조해왔던 유리알같은 투명행정이라는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뿐만아니라, 지난 1999년 대전시가 사업추진중이었던 서구청사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했다가 의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결국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이번 비공개 결정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정보공개법의 기본취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현재 대전경륜장 추진경위에 대해 대전시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왔다고 주장해왔으나, 그러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점의혹없이 완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행정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의의신청 -> 행정심

판 -> 행정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별도로 비공개 통지권자인 엄홍철 대전시장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도 따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3. 5. 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최교진

## ■ 대전경륜장 관련 엄홍철 대전시장 공개 질의서

엄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경륜장 건립을 저지하기위해 대전충남북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발적 연대모임입니다. 10년의 지방자치라 하지만, 지나친 중앙집권적 조세체계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부재로 말미암아 대전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지방의 크고작은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에서까지 지방세수 확보란 미명아래 경륜장과 경마장 등 각종 도박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엄시장님께서서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을 내걸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여론과 경륜장 개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여론을 외면한채 대전경륜장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대전시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 이면에는 2010년 한해 최소 300만명이상이 도박장을 이용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비교육적인 시설일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누구도 대전경륜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문제제기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각 구별로 새마을협의회 등의 관련단체들이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고 구의회와 구청이 앞장서서 유치운동을 벌이는 등의 과열양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공무원까지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비실명 비난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과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관재행정을 떠오르게 합니다.

엄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우리는 대전경륜장에 대한 시장님의 본뜻을 알고싶기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는 대전경륜장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사안이 중요한만큼, 경륜장 건설 추진여부를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나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했다며, 시민단체의 제안을 묵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시장님께서서는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첨부자료>

2001년 11월 대전시가 처음으로 대전경륜장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전경륜장 건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건립 찬성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를 벌이는 '과감한 꼼수'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2월 대전경륜장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인터넷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50명이 넘는 의견이 공무원이 남겼다고요.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3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질타하신적이 있으시지요. 아울러, 인터넷 여론조사였다면 당연히 의견을 한번으로 제약해야 되는데, 열 번을 남겨도 되는 인터넷 의견 결과를 여론조사한 것처럼 60%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여론을 호도함은 물론, 공기관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양심마저 저버린 결과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시민단체와 대전시의 주장가운데 첨예하게 접점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는, 경제성 여부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장 5년간 평균 1,500억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박장은 50개소에 이르고 앞으로 2-3년내에 8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가운데 장외발매소를 제외한 대형 도박장은 창원경륜장이 유일하지만, 2006년 대전경륜장이 개장할 즈음 서울의 경륜,경마,경정장을 비롯해, 창원경륜장, 부산에 경마, 경륜장, 청도에 우권장, 광주전남에 경륜장, 대구권 경마장(2009년) 등 각 광역권역별로 1개소 이상씩의 대형도박장이 개장하게 되어, 지역간, 업종간 치열한 경쟁으로 대전시의 용역보고서처럼 2010년 외지인 70%를 포함해 200만명(대전 3곳 장외발매소 100만명 포함시 도박인구 1년 300만명) 고객유치는 힘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능하다면, 어떤근거에 의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첨부자료>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는 경륜장을 비롯해 경마장, 경정정, 카지노 등 50개에 이르는 각종 도박시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산경륜장·경마장, 청도우권장을 비롯해 각종 장외발매소 등 2~3년내에 7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박장은 수도권에 몰려있었으나, 2~3년전부터는 지방도시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도 이미 대전유성 경정장을 비롯해 청주장의경마장이 확정될 예정에 있으며, 매년 5개소 이상의 도박장이 지방중소도시에까지 개장될 예정이라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되는 일이라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온 도박산업이라도 유치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싶은 자치단체장의 꿈을 드러낸 사례이자,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상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확보해보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2006년 대전경륜장 개장이후 5년간 평균 1,500억원의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국 각 광역권역별로 대형 도박장이 1개소 이상 개장하고, 전주시와 청주시의 마권장외발매소를 다른 충청권에도 각종 도박시설이 개장을 하게된다면, 결국 대전시민들의 이용빈도는 대전시의 예측치 30%를 훨씬초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호주머니를 털어 지방세수를 확보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첨부자료>

지난 창원경륜장 답사때, 창원경륜공단 관계자에따르면, 최근 창원경륜장을 이용하는 고객가운데 80%가 경남도민(이 가운데 창원시민 80%)이고, 20%가 외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창원시민이용 비율이 30%정도에 불과하다는 대전시청 공무원의 말은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박장은 수도권에 몰려있었으나, 2~3년전부터는 지방도시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도 이미 대전유성 경정장을 비롯해 청주장의경마장이 확정될 예정에 있으며, 청주와 전주시에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올해 입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5개소 이상의 도박장이 지방중소도시에까지 개장될 예정이라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창원경륜장의 경우도, 서울경륜장이 휴장기에 들어가는 겨울 3개월 동안의 매출이 1년매출의 절반에 가까울만큼 수도권을 비롯해 외지인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권역별 도박장을 비롯해 장외발매소가 중소도시까지에까지 개장하게 된다면, 지역간 업종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대전경륜장 외지인 이용빈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용역보고서는 도박산업 지형변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채 현재 상황에 비추어 외지인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넷째, 대전경륜장 반대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완고하게 경륜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레저시설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경륜장 1인당 하루 평균 베탱비용이 55만9천원으로 나타나 카지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유형별 조사에서도 가족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5.9%밖에 안되고, 월 입장횟수 12회 가운데 10회 이상이 55.2%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하지도 않고 경륜장에 살다시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시설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대전경륜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레저시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2002년도 총 레저 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산업의 비율이 51.4%로 일본의 26.5%보다 두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박산업 및 도박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적정공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전국확산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도박장려 정책은 건전한 레저산업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하는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용역한 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외국의 3~4배 많은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따른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로 추산하고 있어 도박산업 총매출 9조8천억원을 훨씬넘는 배보다 배꼽이 큰 불경제성을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전시 20세이상 성인인구에 대비하면 10만여명이 도박중독자인 것으로 분류가능하는데, 염시장님의 경륜장건설 강행은 도박중독자를 양산을 부채질 하는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첨부자료>

덧붙이시면, 2010년 한해동안만도 최소 300만명이 대전경륜장을 비롯해, 3곳의 장외발매소를 출입하게 됩니다. 대전충남북 경제인구를 모두 합쳐보았자 220만명이 되지않으니까, 대전시민을 비롯해, 충남북 도민 모두가 한번씩은 도박장을 이용하고도 모자랄 숫자입니다. 염시장의 대전경륜장 건설강행은 업종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결

국 대전충남북 지역민들의 새로운 도박수요창출로, 결국 10만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곱째, 대전경륜장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경륜장 이용객 가운데 충남북 도민들이 10%를 차지할 경우, 개장이 후 5년간 각각 1,040억 ~ 1,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순수손실이 유발되어 대전경륜장으로 인해, 충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돈을 도박에 잃고 도박중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시가 그동안 경륜장건설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대전자금의 역외유출"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 대전시의 입장이 "대전자금의 역외유출은 안되고, 충남북지역민의 막대한 자금의 역외유출은 괜찮다"는 것인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다시한번 청원컨대 대전경륜장 추진여부는 반드시 시민적 찬반여론수렴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대전경륜장 건설의 당위성을 논의했던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조차 공개치 못하는 작금의 대전시 행정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한 인본행정이 아니며, 행정편의를 위한 관치행정의 표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본행정은 스스로 떳떳해야 합니다. 부디 첨단과학기술도시의 위상을 역행하는 시장이라는 오명은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있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상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3. 5. 14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 대전시민 10명중 7명 ‘경륜장 반대’, 관람스포츠 아닌 도박시설, 사행심조장 등 이유

대전시가 추진하는 경륜장 건설에 대해 대전시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륜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경륜을 관람스포츠가 아닌 도박시설로 보고 있으며 사행심조장으로 가정경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륜장건립저지충청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륜장공대위)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 대전시내 20세 이상 남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69.6%가 경륜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찬성의견은 30.0%, 무응답은 0.4%에 불과했다. 계층별로는 여성(78.3%), 특히 가정주부(79.9%)의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나 경륜장이 사행심을 조장해 가정경제에 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륜장 건설 반대 이유로 ‘경륜은 관람스포츠가 아닌 도박시설이기 때문’(41.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가정경제에 해를 끼치기 때문’(32.2%) ‘유형업소의 입주 난립으로 가정불화의 원인’(14.2%)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생활불편’(8.3%) ‘지역자금 역외유출’(2.8%) ‘대전 이미지 훼손’(0.6%) ‘무응답’(0.3%)의 순으로 응답했다.

‘도박시설이기 때문’은 60세 이상(50.0%), 유성구(47.2%)에서, ‘사행심 조장으로 인한 가정경제에 피해’는 50대(46.3%), 자영업(46.8%), 대덕구(4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경륜장 건설 찬성 이유로는 ‘재정확충에 기여’(43.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건전한 레저스포츠’(21.2%) ‘종합체육공간으로의 활용가치’(21.2%)가 많이 응답되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가 가장 높게 응답된 가운데 30대(48.5%), 화이트칼라(50.0%), 대학 재학이상(51.4%)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륜장 건설 추진 사실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60.3%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39.7%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해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500명의 표본을 뽑았으며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5월 13일 하루 동안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각 문항에 대해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문항별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분석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륜장공대위 이충재 집행위원장은 “객관성을 갖춘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대전시민의 의견은 명백해졌다”며 “대전시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생략한 것은 커다란 실책이며 사업의 시행에 있어 결과에 대한 성찰과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경륜사업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여론조사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던 대전시가 사업초기에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한 뒤 “당시 비정상적으로 실시했던 대전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로 대전시민의 여론을 바로 잡은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륜장공대위는 15일 오후 1시30분 대전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민의 뜻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대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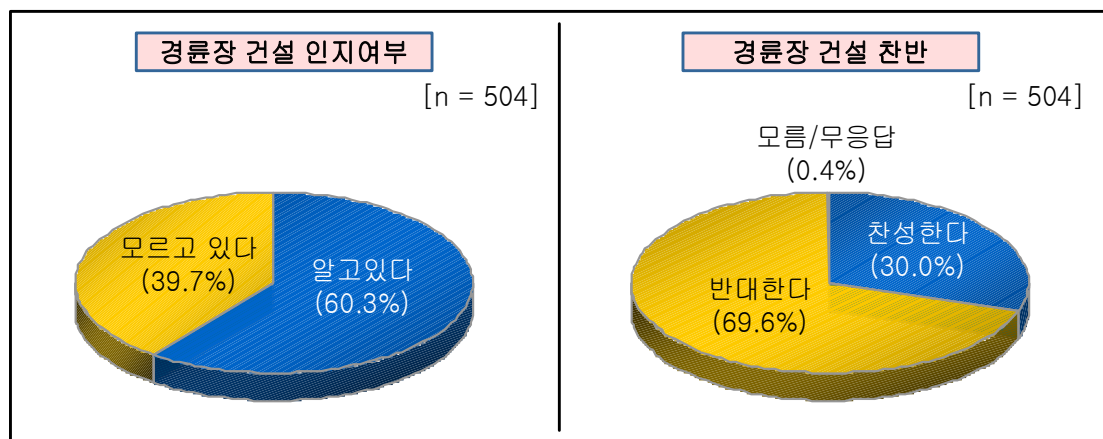
는 경륜장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 대전경륜장 관련 대전시민 설문조사 개요

1. 여론조사 기관
  - 미디어리서치
2. 조사일시
  - 2003년 5월 13일(화)
3. 조사설계
  - 모집단 / 대전시민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수 / 500명
  - 표본추출방법 /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
  - 표본오차 /  $\pm 4.4\%$  포인트(95% 신뢰수준 下)
  - 조사방법 / 전화여론조사(Telephone Interview)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4. 조사내용
  - 대전경륜장 건설 추진 사실 인지여부
  - 대전경륜장 건설 찬반
    - ▷ 대전경륜장 건설 찬성이유
    - ▷ 대전경륜장 건설 반대이유
  - 인구사회학적 변인
    - ▷ 성, 연령, 직업, 학력, 거주지역, 소득

#### ■ 설문조사 결과(요약)



- 대전 경륜장 건설 추진 사실에 대해 20세이상 대전시민의 60.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계층별 인지도는 남자(70.9%), 30대(70.2%), 40대(68.8%), 자영업(73.0%), 화이트칼라(72.7%), 유성구(71.2%)에서 더욱 높았음.
- 경륜장 건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명중에 3명 정도(30.0%)가 찬성하고, 7명 정도(69.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대의견이 더 높은 가운데,  
계층별로는 여자(78.3%), 가정주부(79.9%), 가구소득 100-200만원(77.2%) 층에서 반대의견이 특히 높게 나타났음.
- 경륜장 건설에 찬성하는 경우(n=151), 찬성이유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43.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건전한 레저스포츠이기 때문'(21.2%), '종합 체육공간으로의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 (21.2%)이 많이 응

답되었음.

- 반대하는 경우(n=351)에는 반대이유로 '경륜은 관람스포츠가 아니라 도박시설이기 때문'(41.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가정경제에 해를 끼치기 때문'(32.2%)을 많이 응답했음.

#### ■ 대전경륜장 여론조사 결과에 즈음한 우리의 의견

우리는 대전경륜장 건립결정에 앞서 대전시민들에게 찬반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바 있다. 아울러, 주민투표의 법적,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전경륜장에 대한 대전시민 여론조사를 의뢰할 것을 수정 제의 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우리의 이런 합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대전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내부의사결정을 통해 대전경륜장 건설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우리는 대전경륜장 건설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비롯해 사회적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의 설득력 있는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전경륜장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재차 촉구한바 있었다. 더욱이, 대전시는 두 차례의 왜곡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경륜장에 대한 대전시민의 여론을 호도 하는 등, 대전경륜장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16일 의회의 동의 의견을 듣기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전시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대전경륜장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시민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대전경륜장 시민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

이번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한 대전시민 여론조사 결과 10명중에 7명은 경륜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객관성을 갖춘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한 대전시민의 의견은 명백해졌다. 특히, 대전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경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 시민이 경륜사업을 찬성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 했던 점을 상기해보자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했던 대전시 행정의 과오를 명백히 확인한 결과와 다름없다.

특히, 대전시가 경륜장 건설을 다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 대전시의 경륜장 추진은 명분이 없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는 우리의 여론수렴 절차 요구에 대해 대전경륜장 사업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여론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경륜사업 초기에 왜곡된 인터넷 여론조사를 했던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시 비정상적으로 실시했던 대전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로 대전시민의 여론을 바로 잡은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은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시민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지방자치시대에 살고있는 주민이라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전경륜장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대표기관의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유권자의 의사 수렴 없는 의정 활동이나 시정은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관련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마당에 대전시의회는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를 견제하는 참다운 시민대표기관으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전시가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경륜장 건설을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의견 수렴 없는 형식적 간담회를 통해 대전경륜장 건립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미 전국적인 경륜장 건립저지 여론이 치솟고 있다는 점을 대전시의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을 권면 하는 바다. 아울러, 대전시도 대전경륜장 건설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대전경륜장에 대한 경제성분석, 사행성분석 등 해야 한다.

2003. 5. 15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 대전시의회의 무소신을 규탄한다 !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민들의 피해가 크고, 경제성마저 의문이 되고 있는 대전경륜장 관련 지난 16일 대전시의회의 비공개 간담회 결과는 대전시의회의 무소신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리서치라는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대전경륜장 여론조사결과 반대여론이 70%로 나타난것에서 처럼 시민이 반대하고 있고, 경제적 손실 및 사행성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간 경쟁 및 도박업종간 경쟁으로 경제성 마저 의문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검토없이 집행부의 경륜장건설 추진에 손을 들어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대전경륜장 건설추진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회의로 일관한 것은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시대 투명하고 열린 의정활동 흐름과도 역행하는 행태라 하지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가 돈(?)된다는 서울경륜장을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수렴해 결의안 채택으로 경기도 광명으로 옮기도록 한 것을 상기해볼 때 경제가치만을 강조하는 대전시의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전경륜장 건설에 동의해주었던 시의원들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기금전용 절차와 공유재산변경계획 등의 의회의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전시의회의 향후 대전경륜장 관련 의정활동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03. 5. 17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라! - 진장관의 전자통신연구소 방문에 즈음한 논평

우리는 어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대전을 방문한데 이어 오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전자통신연구소 방문이 참여정부의 현장 행정, 지방 중시 행정의 일환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진대제 장관의 경우 참여정부의 정신에 어울리 않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공직자 윤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직무상 달성해야 할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1만 원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진 장관의 주식가치는 약 팔억원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해충돌의 가능성 그 자체는 부패행위가 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결국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부패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단말기 업체의 이해가 달려있는 '보조금이 허용되는 기종'과 '보조금 한도액'은 정통부 장관의 고시(告示)로 위임하였다. 증권가의 삼성전자 보고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삼성전자의 주가(株價)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아왔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보조금 일부 허용' 방침이 언론에 알려진 1월 중순 단말기제조업체들의 주가가 급상승하였다.

현재 정통부가 추진 중인 휴대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삼성전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진대제 장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결정은 정당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바로 전형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의 전망 매각을 통해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참조)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란? / 이해충돌이란 특정한 개인(사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이해가 그가(대리인으로서의 공무원) 대리하고 있는 집단(예를 들어 일반국민)의 적절한 이해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과 개인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03. 5. 2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최교진

#### ■ 대전시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대전시 행정동우회에 대한 특권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대전시가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고 시의회 행정자

치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우리는 이같은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특권층을 조성하여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의 제정 취지가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행정경험을 살려 사회봉사활동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행정동우회 스스로가 회비를 걷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전시 행정동우회가 이익단체의 성격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단체로써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동등한 지위에 서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심의절차를 거쳐 보조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로써 제식구 챙기기식의 낡은 관행에 급급한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시민의 생활을 챙기는 일도 잘하지 못하면서 제식구만 챙겨서야 되겠는가? 아울러 시의회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의 철두철미한 견제와 감시 속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나아가 기존의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를 폐기할 것을 권고한다.

지방의회의 주민대리기관으로서의 권위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세워진다. 지역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퇴직공무원에게 선심을 베푸는 식의 인정주의나 선심성 행정의 형태를 벗지 않고서는 의회의 지위와 권능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03. 5. 2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최교진

#### ■ NEIS입장 반박,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사퇴하라!

-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교육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기, C/S, A/S, 및 NEIS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번복했다.

우리는 이같은 교육부의 말바꾸기와 입장 번복이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 대다수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 관료들과 일부 교육단체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잦은 말바꾸기와 소신 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NEIS 문제는 정치적 당쟁의 대상도 아니며 일부 교단의 힘겨루기 대상도 아닌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이다. 교육부장관이 지난 26일 NEIS의 일부항목을 제외하기로 최종 발표한 것은 일부 교원단체의 편들어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엇보다 NEIS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된다. 이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과연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에게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교육부 담당 관료들과 교육감들은 사전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또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장관의 발표에 드러내놓고 반발함으로써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국정을 문란 시키는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다시 일선 학교의 재량에 따라 NEIS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NEIS를 둘러싼 사회혼란과 갈등을 다시 학교 현장으로 되돌려 교단 갈등만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우리는 교육부가 반인권적 결정을 철회하고 지난 5월 26일 국민 앞에서 약속한대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NEIS에서 학사·교무, 보건 영역을 제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개별 단위학교에서 NEIS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저장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3. 6.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최교진



## ■ 유사법제 가결과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일 지역시민단체 공동 성명

침략전쟁 준비 합법화한 유사법제 폐기하라 !

일본제국주의가 패전 50년만에 다시 고개를 쳐 들었다. 일본 참의원이 90%라는 압도적 찬성다수로 유사시 한반도를 비롯 주변국에 대한 전쟁준비를 합법화하는 이른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가결한 것이다. 일본 자민당은 북한 선제공격론, 군대보유금지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폐기하는 개헌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이 묵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수위를 넘어서서 제국주의적 역사관과 군사대국화로 무장하고 한민족을 비롯 주변국에 대한 재침략의 총부리예 방아쇠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 국민들이 아직도 전쟁 피해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국의 이익과 자국 국민들에게만 잘 보이기 위한 선심성 정치를 위해 역사왜곡과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있는 것은 범죄 예비행위에 다름 아니다.

침략전쟁을 도발해 한민족을 비롯 주변국과 일본민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안겨준 일본전황과 전쟁전범들이 패전 이후 어떻게 목숨을 연명했는가. 이른바 '평화헌법'의우산을 뒤집어 쓰고 전쟁범죄자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국제여론을 모면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래지 않아 평화헌법을 내세우며 지난 날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군사비를 늘리는 등 군국주의 부활을 꾀해 왔다. 책임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망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삭제 - 독도영유권 문제 등을 기술하였던 역사교과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보는 미래가 아닌 과거로,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길로 향해 왔음을 증명한다.

머리와 손과 발은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고 재침략 준비를 꾀하면서 입으로만 국제친선과 세계평화를 들먹여온 셈이다. 인류 공동의 희망과 이상은 세계를 평화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 인류적 이상을 한국내 대전충남지역과 일본 쿠마모토 지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거듭 일본이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 일본이 범한 범죄를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이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 폐기와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되풀이 되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자라 나는 2세들과 국민들에게 그대로 가르칠 것을 권고하는 바다. 침략의 역사를 바로 알고 진정으로 반성할 때만이 일본국민 모두가 왜 유사법제가 폐기되고 평화헌법이 지켜져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고 평화주의 국가 만들기에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한·일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명실상부한 한일 동반자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합의는 전말이 전도된 알맹이 없는 모호한 수사 이상이 아니라고 본다. 21세기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한·일 정부가 최우선해야 하는 일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박인지 되물으며 과거 청산과 평화헌법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양국이 참된 동반자 관계로 가는 지름길을 거듭 강조하는 바다.

2003. 6. 9

<덧붙임>

한·일 양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97년 일 쿠마모토현 의회의 위안부 기술 삭제 문제에 공동대처 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민간 역사 교류, 문화 교류, 북한동포돕기, 미일 신가이드라인 입법 반대, 후쇼샤 교과서 불채택운동 등 양국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다.

韓國/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日本/ 평화헌법을 살리는 쿠마모토현민의 회

## ■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 최저임금 실태조사의 취지와 배경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목표로 1986년에 도입되었으나 17년이 지난 지금 시행초기 영향률이 10.7%에서 현재 영향률이 2%대에 머물러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원인에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임금억제수단으로 악용하여 법적 최저임금을 낮춰왔으며 이는 현재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방치 및 방조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늘리고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한 최저임금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전

지역의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나. 실태조사 결과분석

##### 1> 최저임금 위반

○ 조사업체 154개 중 68개 업체인 44%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전지방노동청이 2002년 10월~11월 진행한 집중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최저임금 위반 현황(사업장 대비 13.3%)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청의 점검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반면 이번 조사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및 전화설문 조사한 것으로 신뢰도나 정확성에서 차이가 날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청소년(19세 이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응답자 38명 중 55.3%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20대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31.9%가 최저임금에 못미쳐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고령노동자들도 최저임금에 노출되어 경비용역에 소속된 6-70대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 노동에 월60만원을 받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9%,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주지'를 받은 경우는 9%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의 부족과 사용자들의 '주지의무' 불이행이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4대보험 가입

○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률도 매우 낮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3> 결론

○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사용자들에게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사용자들에 대한 계도와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도 매우 크다. 특히 악덕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또한 현재 최저임금이 매우 낮아 최저임금 저임금 해소, 소득분배 개선 등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바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이다.

2003. 6. 13

대전지역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연대회의

#### ■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 창립선언문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발전만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온 우리 사회 안에 어느덧 배금주의와 한탕주의는 사회전반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성실한 노동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자신의 인격을 내어 파는 도박은 지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끝에 이르러 한 인격이 파멸되고 화목한 가정이 파탄되며 마침내 자살의 행렬로 이어지는 비참을 목격합니다.

오늘,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는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화를 청산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들의 신규 건립을 반대하며,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국의 300여 시민, 종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결성되는 연대모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 산업은 과잉을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내기 오락은 여전히 법률로는 불법 도박으로 여겨지면서도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로또 복권등 도박 산업은 정부의 묵인과 조장아래 날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전국에 51개의 도박장이 성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은 당장의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새로운 도박장 유치운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도박 문화의 만연과 도박장의 무분별한 확산이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 전반의 가치관 혼란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은 이제라도 도박장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 폐해를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도박장 유치 및 건립 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도박장 건립 계획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법률의 개악을 막고 나아가 이미 설치된 도박장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며 도박 산업 전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을 지닌 기구가 설치 및 관련 법률들의 전면적인 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는 도박 문화로 황폐화되는 우리 사회 안에서 여전히 성실한 노동을 믿으며 건강한 문화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출범에 즈음하여 드리는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부도덕한 욕심으로 추진되는 경륜, 경마, 경정, 경견장, 카지노 및 화상 도박장등 일체의 도박 시설은 더 이상 설치되어서는 안됩니다.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도박 사업 및 복권사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도박산업 관리 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기존에 설치된 모든 도박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 기관은 현재 빚어지고 있는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야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폐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에 필요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여야합니다.
4.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진흥법은 모든 관광 호텔을 도박장화 하려는 개악이므로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5. 정부는 현재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도박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003. 6. 20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참가자 일동

## ■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도박 산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도박장 건립의 확산을 막고 나아가 도박 산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 연대모임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도박’입니다. 기존의 경마와 경륜, 경정등 도박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채 개선되지도 못한 채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개장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성실히 일하고 땀흘려 노력하는 건강한 삶 대신 요행수의 유혹으로 치달아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고 가정이 파탄되며 가치관의 혼란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로또등 파행적인 복권까지 등장하여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를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까지 지칭하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도박 시설이 이미 전국적으로 51개소가 성업중이며 또 다시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방세수 확보란 미명아래 앞다퉂 새로운 도박장 유치운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도박 시설의 확산과 그 폐해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그러한 도박 시설의 확산을 방조하고 촉진하는 우권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문광부에서는 오히려 도박을 부추키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그 어떤 지역이라도 새로운 도박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며 나아가 이미 설치된 도박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이러한 그릇된 도박 문화 확산의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수를 확보하려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있고 나아가 그 근원적인 책임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성숙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현 정부에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부가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몇 가지 현안과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부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정부의 도박 산업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행 법률상 모든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정, 경마, 경륜등 유사 도박 시설은 공공연

하게 도박 행위를 조장 방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정신 카지노의 경우 <특별법>으로 도박을 공식적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에서 언급한 시설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스포츠’, ‘나’, ‘오락’, ‘관광’으로 볼 수 없는 심각한 도박입니다. 이러한 도박 행위의 인정, 도박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간의 상충으로 국민들은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도박행위가 성실한 노동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과연 도박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도박 시설로 인한 피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9.3%에 약 300 만명을 도박 중독자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예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도박 중독자로 인한 피해 범위는 1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로 추산하고 있어, 오히려 같은기간 도박 산업으로 발생하는 총매출 9조8천억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며칠전 정신 카지노에서의 예를 보듯 분신자살, 동반 자살등이 줄을 잇고 있으며 개인 인격의 황폐화와 가정의 파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도박 산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도 도박 산업을 관리 감독한 아무런 기구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피해를 막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분명한 권한을 가진 상설기구(예: 도박 산업 관리 감독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다 강화된 도박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도박으로 인한 피해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3. 새로운 도박시설의 확산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은 개정되어서는 않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넘쳐나는 많은 도박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들은 또다시 무책임하게 도박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등은 서양에서는 사회문제화되어 사양산업이된 경전장을 유치하려 준비하고 있고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 역시 유사 도박 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도박장이 설치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아울러 문광부에서 추진중인 관광진흥법은 개정은 몇 몇의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무분별한 도박을 확산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고 오히려 도박의 확산을 막아야할 문광부가 이러한 전국의 호텔을 도박장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진흥법의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은 호텔 내 게임장을 관광전자게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4. 건강한 문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따뜻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님, 현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바로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지방 자치단체들의 비도덕적인 수익추구와 정부의 무관심, 무대책으로 인해 전국에 산재한 도박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살과 가정 파탄등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배금주의와 한탕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희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 참가 단체들은 이러한 우리 현실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연대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문화 예술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장관님이 부디 건강한 문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따뜻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장관님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참가자 일동

## ■ 염홍철 대전시장, 1년을 돌아보며 - 새로운 형식에 낡은 내용

자민련의 아성을 7년만에 깨 당선자로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대전발전을 열망하는 시민의 승리’ 라며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놓고 시민들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친구 같은 시장,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본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 했다. 그러면서 염홍철 시장은 ‘시민들의 대전 발전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대전이 국가발전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기대도 크다’ 며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 긴밀히 협력해 대전 발전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 고 밝혔다.(한겨레신문 2002.6.14)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표방한 염홍철 시장은 ‘미래를 여는 시민 세계로 열린 대전’ 을 열어가기 위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유리알처럼 투명한 열린 도시, 지방자치의 모범 분권화 도시,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삶의 질

최고의 도시,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전자도시로 만들어가겠다' 고 시장의 청사진을 내세웠다(대전시 홈페이지 시장인사말).

당선1주년을 맞는 염홍철 시장의 혁신을 통한 대전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본다.

#### 탈권위주의 개방형 업무방식

염시장의 취임이후 보여준 시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탈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취임 초 시장 전용 승강기의 폐지, 관사의 반납과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 직원 인사 불만 직접 수렴, 시장과 구청장과 나란히 앉아 보고 받은 일, 교육감과의 교육발전협의회 정례 개최, 토론방식의 회의, 금요민원실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의 정례화와 같은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염시장은 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개혁' 을 표방하고 탈권위주의와 개방적 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토 활성화되었다. 시장자문위원의 확대 구성과 공약이행을 위한 시장토론,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구간의 지하화 변경을 위한 토론, 집단민원에 대한 토론형 해결 방안의 모색을 위한 금요대화, 대전시지존 살리기 운동의 추진, 경륜장 건설 추진 여부 등의 현안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시민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런 탈권위주의 행보는 자민련 시장 7년 동안에 굳어버린 관행과 사고를 변화시킬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폐쇄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방적 의사결정이야말로 시민 참여를 넓히고 새로운 시장 개혁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 먹을 것 없는 요란한 잔치

문제는 '행정 방식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 질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취임초기에는 관료집단에서 시장의 변화에 부응치 못하는 혼선과 미숙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사를 반납한다면에서도 다시 시 재정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식의 접근이 대표적인 과도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허용 가능한 범위내의 시행착오는 관대하게 평가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시 행정의 방향성 상실, 철학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과 대화가 중시되고 개방적인 행정절차를 강조하는 염시장의 업무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의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시민적 토론을 중시한다지만 토론의 결과는 기득권 집단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정은 진보적인데 결론은 보수적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 집단은 지루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한 불만을, 시민들은 기대의 배반이라는 2중의 문제제기가 나오게 된다.

#### '정보공개 거부' 간부회의록이 공개되면 행정 못한다?

시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행정의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투명행정의 퇴보다. 지난 홍선기시장 체제에서 단 한번도 비공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이 대전시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것은 상징적 이면서 의미심장하다. 경륜장건설 방침을 결정한 시장조정회의록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자민련이라는 보수적 정당 소속의 정통관료 출신인 홍시장 체제에서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였던 업무추진비 내역(관공비)과 서구청에 대한 감사결과 조차도 공개했던 것에서 엄청난 후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륜장 건설방침을 결정한 간부회의록을 공개하면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것은 투명행정, 개방행정이 자신의 지지도를 넓히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알 처럼 투명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염시장의 약속이 여지없이 무너진 셈이다. 기자실은 시장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시장의 동반자로서 유지되어야한다는 대전시가 정작 시민이 요청한 정보는 공개를 기피함으로써 언론과는 유착 하되 시민에게는 알리지 않겠다는 태도 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시금고 수의계약설명 없는 공약 포기!

시금고에 대한 수의계약 또한 시민의 기대를 버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시절 시금고 공개입찰 조례의 제정을 약속하였지만 이를 위한 노력과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을 강행했다. 대전시는 이후 의원 발의로 이루어진 시금고입찰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도 수의계약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다고 관련 의원은 증언하고 있다. 시금고는 안정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좋다는 주장인데,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부인하는 태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공약을 버리고 시민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실만을 주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 봉명지구 러브호텔 논란, 고속철도 지하화 논란 - 대표적인 보신행정!

유성구청이 유성 봉명지구 숙박업소 신축 허가를 유보함으로서 발생한 공방은 보신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봉명지구의 숙박업소 허가에 대해 대전시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도시계획의 공공성의 어중간에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혹 불허가 처분을 유도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한 염려와 허가를 중용함으로써 벌어질 러브호텔 건축 조장의 책임 모두를 회피하려는 대전시의 노력은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행정심판을 유보하는 무소신 행정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청과 시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문제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고속철도 지하화 논란에 대해서 대전시가 보여준 태도도 또한 이와 같다. 도심 양분 현상을 막아야한다는 동구 지역민의 염원을 배경으로 건교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더 얻자는 실리와 지상화를 주장했을 경우에 받을 정치적 부담의 양자에서 대전시와 동구는 방황하고 있다.

연이은 대형매장의 개설. 말 따로 행동 따로!

대형 유통시설의 인허가 중지 약속도 대표적인 배반 행정이다. 염시장은 의회에 출석해 ‘대형할인점은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 이점을 빼놓고는 교통문제와 지역자본 역외유출, 재래시장 위축 등의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전시는 허가를 동결하고 대형할인점 용도의 건축허가에 대한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취약한 생산기반과 외지 대형업체의 상권장악으로 지역경제의 자금이 고갈되고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시장이 취임한 이래로 까르프 문화점을 비롯해 여러개의 대형 할인매장이 개점했고, 앞으로도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둔산2호점, 유천점, 까르프 유성2호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롯데마트는 유성노은2지구와 송촌지구에 두곳의 매장을, 이마트는 대덕테크노밸리점을 준비중에 있다.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요란했지만 현재 상태의 악화도 막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인구대비 최다의 대형매장을 갖게된 대전시에는 대형매장간 출혈경쟁이 예고되고 있을 뿐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전쟁은 보이질 않는다.

연구단지 죽이는 경제특구 추진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지정 추진(유사경제특구 포함)도 빼놓을 수 없는 배반 행정에 속한다. 연구단지를 경제특구로 만들어 외자를 유치하고 연구개발의 동북아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경제특구 추진 방침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절정이다. 기술집적 도시로 연구단지의 이직 현황을 대전시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98년 618명(이직률 10.9%), 99년 436명(7.7%), 2000년 495명(8.3%)이 이직했다. 연구환경의 불안정이 극심한 상태인 셈이다. 연구단지의 경제특구화는 이러한 연구환경의 불안정을 더욱 키우게됨은 불문가지다. 외국자본의 유치가 아닌 연구환경의 안정화와 과학기술의 산업화, 역내 산업연관성의 제고가 대덕연구단지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망둥이가 뛰니 꿀뚜기도 뛰는 식으로 경제특구의 유행만 쫓고 있는 것이다. 주한 외국자본의 대표가 경제특구는 소용이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독선행정의 결정판, 경륜장 건설 추진

경륜장 건설 방침은 독선행정의 결정판이다. 약간의 세수를 위해 도박 산업이라도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유치하려는 접근은 자식에게 없는 살림을 보태기 위해 도박장에 다니라고 권하는 논리다. 경륜장 유치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큰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정한 시민여론 조사에서도 70%가 반대하는 일을 대전시가 감행한 것이다. 대전시는 이런 독선 행정의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시보는 주식시장과 경륜이 똑 같은 도박이라며 경륜장 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염시장이 장고 끝에 놓은 대표 악수인 경륜장 유치 결정은 비용과 편익을 시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관청과 일부집단의 이익에만 놓고 계산하고는 밀어 부치는 개발독재의 태도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대전시는 경륜장 건설에 대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직 중앙정부의 인허가도 얻지 못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도박장반대운동과의 일대 결전이 남아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기운실, 여성단체연합, 경실련, 전국YMCA연맹 등과 같은 단체들이 경륜장의 허가 자체를 반대하는데 나섬으로써 대전시는 불명예스러운 전국적 쟁점의 한 가운데 서게 되었다.

연이어지는 배반과 미숙의 행정

이외에도 배반과 미숙의 행정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취임초기 시청앞 무료주차장 증설 추진의 좌절, 첫인사로 등용한 국장의 비리 연류 구속,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공약의 무산, 촛불시위 중지 호소로 인한 물의, 생태하천 복원 공약을 버리고 시행되는 대전천 하도정비사업, LA의 깜짝 방문을 통한 제임스 카멘론 감독 유치 실패,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동물원의 잦은 사고와 지하철 공사중 발생한 호남선철도 탈선사고와 같은 일들이 그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나, 비정상과의 손쉬운 타협(?)

민선 3기 1년간의 대전시정의 절치는 개방적이지도 결론은 보수적인, 그래서 변화의 비전이 없는 행정으로 귀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자민련일색의 단체장과 자민련 일당의 의회시대에서 시장은 한나라, 구청장은 자민련, 지방의 회도 여러 정당이 진출한 다원화 시대에도 체감 변화지수가 낮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 첫째는 임시시장의 철학 부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임시장은 전공무원에게 보낸 전자편지를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 개혁이라며 급격한 인사쇄신이나 정치보복은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선보인 지난해 인사는 변화의 기대와 동떨어진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였다. 7년간 홍선기 자민련 시장체제에서 훈련되어 온 인사들의 자리바꿈으로 끝난 인사로는 새 시장 취임에 따른 시정 전체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진용을 기대할 수 없었다. 현행 법상 인사권의 제약, 지방자치 제도의 제약을 변명으로 내세웠지만 전임시장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오류를 간과할 수 없다. 소각로 비리로 인한 거액의 소송이나 엑스포과학공원 위탁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에 각각 수백억씩이 걸려 있다. 체육회 거액 횡령 사건, 부실ITS사업 추진 등 전임시장의 체제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리와 비효율 행정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인사에 대한 적절한 응징도 필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인사를 단행하여 책임행정을 위한 새로운 진용 꾸리기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사의 결과는 시장의 변화의지를 쫓지 못하는 일부 고위 관료들에 의해 미숙한 행정과 연이은 시민 배반 행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잘못된 유산의 미진한 청산의 결과

천변고속화도로 일부구간 지하화의 경우에는 재정난을 염려하는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론을 들어 지하화를 결정했던 임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집단에 포위되기 시작한다. 경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가 방침을 바꾼 일이 대표적인 사례라할 수 있다. 시장이 주재하는 자문회의에서 공무원이 만든 회의자료는 편향되어 있으니 무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자던 소신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시티즌 운영권 억지 인수는 토착기업재력가와 연합한 일부언론에 떠밀리는 시정 표류의 시발점이었다. 계룡건설의 대전시티즌의 운영권 포기에 대해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단물만 빼먹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투자를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도 제대로 못했다. 대전시장이 프로축구단 최소운영비 40억원을 조달하는 것은 편법 재정 지원 아니면 간접 조세라는 기부금 건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안면서도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프로구단 최소 운영비 40억원이면 5천만원씩 들여서 80개 학교에 잔디를 깔아줄 돈이다. 시장이 사기업인 프로축구단에는 돈을 거둬주면서 생활 체육 환경의 개선에는 눈도 못 돌리는 일을 감행한 셈이다.

여기에는 개발론으로 똥뜯 뭉친 행정엘리트와 토착재력가들 그리고 일부언론의 성장연합의 여론몰이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쟁점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여론으로 자리잡게 되고 여기에 대전시가 끌려 다니는 것이 본격화된 것이다.

임시장은 지난 1년간 홍선기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사회운영체제를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로 변경하는데 성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발론자의 세상이라면 변화를 염원한 시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감당해야 할 비정상과의 싸움에서 너무도 쉽게 타협하는 모습이 바로 시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행정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너무 바쁜 시장, 현안에 대한 원칙과 방법제시 미흡

두 번째는 현안 사업에 대한 원칙과 현실 이해의 부족이다. 임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도심활성화,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3대 현안으로 꼽고 이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뛰겠다고 했다. 구도심활성화는 동남부권신도시 개발 공약을 골간으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을 발표했다. 대중교통문제의 해결은 지하철 1호선 공사의 조기 완공, 버스 개선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 지역경제의 경우 근본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대전의 예대율(예금/대출금)은 65.2%로 알려져 있다. 부산 80.1%, 대구 84%, 광주 78.2%, 경기 98.4%, 인천 102.5%에 비해 턱없이 낮다. 대전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에서 번 돈으로 다른 지역이 잘살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경제구조의 한계를 넘어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래시장을 죽이는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인허가다. 대전의 한 대형할인점 관계자는 한 달 매출액 가운데 인건비와 지역상품 구매비를 제외한 80% 정도를 서울 본사에 송금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취약한 생산기반과 외지 대형업체의 유통상권 장악 등으로 지방에서는 경제의 혈액인 자금이 고갈되고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의 혁신을 위한 비전이 없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 환경용량을 고려치 않은 또 다른 부동산 개발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며, 기존의 연구기반까지 파괴할 경제특구추진(유사 경제특구 논의 포함)만이 있을 뿐이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점차 심해져 가는 교통난에 대해 버스노선개편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및 경전철 도입 방침의 나열은 교통철학의 부재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노선의 감축과 무료환승제를 골

자로 하는 노선개편은 민원에 밀려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있다. 교통시설공급에서 교통 수요 관리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준비되지 못한 채 가시적 사업에 급급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주된 경전철 사업 용역도 마찬가지다. 지하철과 다를 바 없는 비용과 건설과정과 건설 이후에 지하철 보다 더한 교통혼잡을 일으킬 경전철 추진이 현재까지도 대전시 방침인 것이다.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의 원칙에서부터 방법의 기초까지 시장이 직접 챙겨야한다. 이러저러한 일들 중 하나가 아니라 중심 사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혁의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발로 중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일정으로 꼭 찬 가운데 이러한 노력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시장은 너무나 바쁜 것이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때

민선3기 1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어떤 면에서 아직 평가가 이를지 모른다. 그러나 3기 민선자치의 기틀을 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년의 대전시정정이 탈권위주의화 되고 개방형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시민을 배반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꼴로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때다.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내일이면 늦어질 후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염시장의 취임에 부쳐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시장. 내가 무엇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민의 마음을 모으는 시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형식적 시민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힘에 의해 성장연합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 참된 분권운동의 선도자로 참여민주주의자로서 개발성장연합의 틀, 한나라당의 틀이 아닌 시민의 틀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다.

## ■ 법조비리 파헤친 기자에 대한 실형선고 철회하라, 사법부는 언론자유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대전지법은 6월 20일자로 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를 특종 보도했던 MBC의 강덕원, 서상일, 김지훈 기자에 대해 징역 4월에서부터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하고 당시 법조팀장이던 전직 기자를 법정구속했다.

대전 MBC가 보도한 이종기 리스트 특종보도와 관련해 재판부는 “자료의 입수경위와 보도 결정 경위, 충분한 취재여부, 자료의 기재 내용, 보도시 사용된 어휘들의 일반적인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선고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수사결과 보도 내용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상업성과 선정성에 치우쳐 아무런 근거 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종기 변호사는 지난 94년부터 97년에 걸쳐 검찰과 경찰, 법원 직원 등 백여명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었다. 또 이종기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1999년 4월로 벌써 4년이 넘게 지난 일이고 검찰은 이에 대해 재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종기 변호사가 다시 항고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무혐의 판결을 뒤집고 불구속기소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보도로 법조 내의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보도가 사회적 역할을 톡톡히 했음을 인정했다.

즉 이 보도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종기 변호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과 일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 일부 판검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 등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도 재판부는 기사에 사용된 일부 어휘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수사결과 밝혀진 뇌물에 대해 ‘검은 돈’, ‘뒷거래’ 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보도의 본질은 무시한 채 자료의 입수경위, 특정 어휘 사용 등을 문제삼아 실형을 선고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비판적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다. 특히 언론인의 자존심까지 구기게 하는 사회봉사 명령 선고는 법조인의 특권의식의 발로이며 법리적 판단 외에 감정적 판단까지 들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전지법은 용기있는 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철회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3. 6. 2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1만인 선언**

지방분권과 지역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등 5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약칭 수도권연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와 연대하여 오는 7월 2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의 1만인 선언을 개최하고 정부의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1만인 선언에서는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대표(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측 참석자 - 최교진 감사, 김제선 집행위원장, 박상우 사무국장 등),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신도시 건설은 지방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참여정부가 중시하는 지방분권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 정책실 책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중이호랑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어 참석한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건교부가 내세우는 주택부족·신도시건설 논리의 허상을 폭로한다.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발이익을 노린 대규모 공영개발에 불과한 신도시 건설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부족한 주택량은 정부의 토지·주택정책 개혁과 기개발토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지방분권국민운동,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의 즉각적 철회와 수도권 집중억제, 국토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의지를 담은 1만인 선언을 발표한다.

이번 1만인 선언은 지난 6월 10일 각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던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후속과정으로서 1만인 선언자 명단이 적힌 대형 보드가 설치되며 참석자 전원이 "수도권 집중 억제! 국가균형발전!" 문구를 새긴 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보인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의 1만인 선언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경실련·문화연대·도시연대·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경실련·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활동가, 지방자치실현을 추구하는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의제21운동을 실천하는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도시·환경·자연생태·행정 관련 교수와 전문가, 신도시 건설 백지화에 찬성하는 일반시민이 참여한다.

2003. 7. 1

지방분권국민운동

## **■ 참여정부는 반분권적, 반분산적 정책인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밝힘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침을 발표하였다.

2. 우리는 이같은 참여정부의 발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한껏 기대해왔던 대다수 지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의 실현을 위해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이를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은 그 책임과 본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권고한다.

3. 이미 그동안 수도권의 규제는 충분히 완화되어 왔다. 공장총량제도 개별입지는 이미 허용되어 있으며 계획입지만이 형식적으로 규제되고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니면 투자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선 지방, 후 수도권규제 완화의 원칙을 포기한다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염불이 되고 말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을 선호한다면 이를 지방으로 분산 유도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것이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한 두개의 기업을 위해 대통령령을 고쳐서라도 특혜를 베풀다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은 고사(枯死)되고 수도권 과밀로 고통을 겪는 시대는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 오늘날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책임은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의 발전을 위로부터 가로막는 반분권적, 반분산적 정책인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흥공장과 평택공장의 증설 허용방침의 백지화를 온 지역민

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결단으로 운영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2003. 7. 15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설치 촉구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창립은 대한민국이 인권존중의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권"은 엄청난 "왜곡"과 "변질"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간 양심적 일부세력에 의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던 "인권향상"의 목소리는 작년 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 판단됩니다.

"침해받는 인권"과 "뒤쳐지는 인권"은 고도 성장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발언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이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회구성자간의 차별 문제, 소수자인권의 문제 등에서 심각성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활동함으로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나름대로의 성과물을 거두고 있고 이제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을 바라며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권고"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권고 결정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설립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실효성 자체에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국가기관의 상호 역학관계에 의한 조정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문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부여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는 조속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논의 시 지방사무소 관련 조항이 있었음에도 최종 결정단계에서 지방사무소의 관련조항이 빠지게 되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형식과 내용은 반쪽이 그치고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중앙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떠나 국민의 생활공간에 함께 할 때 비로소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서울중심의 사고와 활동은 그간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던 서울이라는 초일극 도시중심의 사고에 기인한 권위주의적 운영방식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화 분권화 시대의 중심은 결국 국민 개개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 침해나 인권 침해문제의 현장인 지역에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해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 설치?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동반되는 사안이 많은 관계로 인하여 지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적 제약을 두고 일어나는 인권문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 사무소 설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창립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단계에서 내용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국민 속에 깊숙이 자리잡는 대중적 기구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2003. 8. 12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를 바라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 ■ 대전시 금고, 16억원가량의 이자손실을 발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지난 27일 대전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대전시금고 이자율이 낮아 16억원가량의 이자손실액이 발생한 사실을 접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다.

○ 그간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취급하는 시금고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금고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3월에는 시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복수금고제도 도입을 통한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

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금고관리의 효율성 제고,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사전협력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하나은행과 수익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금리 문제에 대한 타시도의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입수, 다른 시도에 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면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전시가 행정편의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한 결과, 시금고인 하나은행에게 수년동안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채 3여년동안 16억원가량이나 되는 이자손실이 발생한 것을 포함, 수년간의 예치기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수십억원의 이자손실액이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접하면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특히 우리가 이러한 금고예금 금리에 대한 우려 속에서 대전시에 질의했던 당시에도 대전시의 의견은 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어느 시점에서만의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이나, 금리외에도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안일함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 결국 대전시의 부실한 예산관리로 인해 발생한 자금의 현실을 볼때 주민의 혈세를 맡기는 시금고 선정과 예산 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대전시의 기금운용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대전시가 통합기금관리조례 제정 등을 주장하면서도 그 기본인 시금고 마저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향후 기금관리운용을 책임질 행정관료들에 대하여 시민적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약속해온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즉각적인 도입, 나아가 주민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적 구조를 혁파하고 주민참여 영역을 확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기금관리운용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권면하는 바이다. 더불어 행정관료들이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한채 단순히 금고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를 거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역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2003. 9. 29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김선진

#### ■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3년 26번째 “밀빠진독상” 에 충남도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선정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번째 ‘밀빠진 독상’ 수상자로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방만하게 운영해 출자한 66억9천만원 등 총자본금(191억원)의 두 배가 넘는 44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충남도를 선정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이들은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지난 1999년 충남도와 천안시 등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지만 방만한 운영으로 자본금 잠식에 부채까지 안고 있고 현재는 채권가압류 위기에 몰려 설립 4년 만에 매각안이 논의되고 있다" 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또 "관 주도의 병폐인 무계획, 무책임경영으로 문제가 많았던 데다 자금관리에서도 이사회 동의 없이 수십억원을 대출 받고 자금을 용도외에 지출해 부실운영을 키웠다" 고 밝혔다.

이어 "초기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전문성이 부족한 관주도의 경영으로 운영에서의 문제가 많았던 데다가 허술한 경영관리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대표이사가 80억원을 유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경영이 더욱더 부실했다" 고 덧붙였다.

특히, 충남도는 출자한 66억원에 대한 감자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민간매각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농축산물을 제값에 구입해 농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크게 훼손 당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9월 7일 오전 11시 30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빠진독상’ 을 선정,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밀빠진독상’은 지난 2000년 8월 제정돼 하남시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익산시 익산보석박물관 등 25개 대상사업에 대해 예산낭비를 지적해 3000억원의 예산낭비를 저지해 내는 성과를 올리는 등으로 예산감시시민운동의 대표적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2003. 10. 7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밀빠진독상 선정위원회)

## ■ 경기지역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지난 15일 경기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13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국무회의 처리를 유보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들은 이 법안이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국가 정책을 지역이기주의의 입장에서 문제 삼는 그들의 자세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더구나 법안의 내용을 왜곡하여 공격하는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한국사회의 불균형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역차별론을 내세우며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지역 정치인들은 법안의 전문적인 용어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왜곡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부추기며 지역민들을 선동하려 한다.

이 법안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고 할 때, '지방'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경기지역을 포함시킨다면 국가적 균형회복이라는 이 법의 취지는 곧바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 대학의 지방이전이나 지역혁신체계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법은 수도권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타지역의 낙후지역과 동등하게 배려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한 데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런데 손학규 지사를 필두로 하는 경기지역 정치인들이 반성온커녕 합리적인 법제정마저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도 인구과밀로 지역민들의 삶이 피폐해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일부 기득권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며 낙후지역의 발전 정책을 방해하려 한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국가적 과제의 실현을 방해하는 정치인들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2003. 10. 17

지방분권국민운동

## ■ 이라크 파병 동의안의 부결을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 정부의 추가 이라크 파병 결정에 접한 논평

1. 오늘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 발표하였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를 갖지 아니한채 일방적 밀실결정을 감행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유엔결의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으며, 이런 속에서 아랍의 화약고가 되어버린 이라크에 점령국의 일원으로 전투부대를 파견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도 구하지 아니했다.

2. 우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설사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파병은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라크의 평화는 점령군이 미군이 철수하고 이라크를 이라크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터키·스페인 등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과 저항을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도 이라크에서 대규모 테러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국적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점령군 미군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 떠맡는 일일 뿐이다. 이라크를 돕기위한다면 전투병 파병을 배제한 다른 차원의 대안적 지원책들, 예컨대 민간구조활동, 경제지원 등을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3. 우리는 이라크 추가파병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테러의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병 장비의 인명살상으로 인한 반전운동 등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파병을 통해서 얻어질 국익은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4. 우리는 국민의 힘을 모아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참조〉 다국적 군과 평화유지군의 차이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다국적군 구성안은 '평화유지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엔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Force)의 주요임무는 분쟁지역의 중간에 들어가, 질서를 유지하고, 협정위반 등 분쟁 현장을 감시하는 현상유지가 주요 임무이고, 자위권을 제외하고는 강제군사조치를 할 수 없다. 파견 시에는 접수국인 이라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미국이 추진중인 다국적군은 이라크 내 미국의 점령군으로서의 지위는 포기하지 않은 채 이라크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성되는 점령군의 다국적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군과는 달리 다국적군의 군비는 유엔이 아닌 참전국의 부담으로 충당되게 된다.

2003. 10. 1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 ■ 개혁입법 촉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맨투맨 밀착감시행동 돌입-

### ■ 개혁입법 촉구 결의문

국회의원은 결단하라 !!! 정치권이 연일 말 뒤집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국민투표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던 여야 정당과 언론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만나 어제 한 말을 뒤집고 파병을 줄속 결정했다. 파병을 하겠다는 대통령이나, 지긋지긋한 당리당략에만 얽매여 말씨름에만 급급하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 과연 국민을 의식하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조차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살리기 3대 개혁입법을 대하는 정치권의 움직임 또한 우려와 걱정만을 안겨주는 마찬가지다. 노무현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입법안이 통과됐지만 대부분의 여야 정치권의 눈에 도무지 무너져가는 지방이, 분권과 균형발전이 보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또한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국민들까지 나서서 부당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과 기업의 자진 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며, 나아가 SK 비자금을 비롯, 재벌 기업의 비자금 수사에 비협조인 모습마저 내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는 현재를 온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하여 개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재의 후진적 사회구조를 되풀이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비상한 시국이라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과 지방개혁을 실현하고 평화구축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입법안에 대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단호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결단 1. 정치부패 척결 및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라!

결단 1. 지방분권 · 지역균형발전 ·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입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결단 1. 지역언론개혁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제정하라!

결단 1.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호주제 폐지법안을 즉각 개정하라!

결단 1. 도박산업을 육성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결단 1. 명분없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전면 거부하라!

우리는 이같은 개혁입법안이 한국사회의 근본적 혁신을 꾀하는 기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16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헌정사에 길이 빛나고 기억되는 개혁입법의 장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위해 우선 각 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활동가들이 지역 국회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씩을 밀착 담당하여 법 개정 수용을 관철시킬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소신을 숨기고 굽히며 엉거주춤 하는 지역 시민의 대표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이고 선언이다. 국민의 대표답게 당론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개인의 소신과 판단을 밝히려는 주문이며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강제해 낼 것이다.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입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의 주요근거로 삼을 것임도 분명히 밝히는 바다.

이제 더 이상 말뿐인 개혁은 필요없다. 작금에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 모두가 실천으로 개혁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우리는 거듭 정치권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개혁열망에 귀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출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바이다.

2003. 10. 2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 대전시의 지방화 대전선언에 즈음하여 대전시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정부가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통과를 추진 중에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로 시·도 및 시·군·구에 이른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취지 설명 및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 혁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 주체들간의 상호 협력과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는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구습을 버리고,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수평적인 공동 협의의 체제, 즉 이른바 민주적 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방법과,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그리고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각 지역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전의 지역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전의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향후 운영 방식의 확정만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대전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들러리 기구 혹은 지역내 토호 세력이나 기득권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전시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이 대전시 소수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일방적 구성이 아니라, 대전시의 혁신 주체들이 고루 포함되어 명실상부한 대전지역 혁신 주체들이 고루 포괄되는 대표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대전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드시 일정한 비율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대전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협의회 위원들이 형식적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참여와 토론, 여론 수렴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는 완전하게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이를 통해 향후 대전의 지역 발전 발전은 소수에게 지역의 자원과 부가 독점되는 방향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혜택을 함께 누리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경제 정의와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전시가 지역혁신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기를 권면한다. 앞으로 지역혁신 문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경우 지역에 있어서는 중차대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조급하게 구성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대전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3. 10. 24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 한나라당 방탄특검 규탄 성명서

27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전면적인 특검제 실시 주장에 대해 우리는 참잡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석고대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고개 숙여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이 아름답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았던 이유를 한나라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먼저 환골탈태하고 솔선수범하는 감동의 정치를 어리석게도 기대하였다. 항상 눈밖에 나는 천덕꾸러기 신세인 정치권의 행태에 실망하고 허탈해하면서도 혹시나 기대를 하였던 것은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애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특검제 주장은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여론호도용 물타기 전술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번 특검 주장은 특검을 방탄특검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공감대가 여론과 정치권에 형성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이지 정당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정략적 수단 이 아니다. 특검 주장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철저히 무시하는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반성과 자숙은커녕 대표가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더니 급기야 특검을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추태까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탄특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비자금 진상을 낱알이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제1당의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여론의 비판과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환골탈 태하는 내부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말뿐인 사죄는 현란한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며 국민들은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정치적 수사에 염증과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제 화려한 말잔치는 끝내라! 진실된 반성과 자숙을 통해 성숙된 제1당의 면모를 보여주며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요원한 희망에 불과한 것인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국민기만 행위에 불과했다. 울분을 넘어 실소가 나오는 대한민국 정치의 슬프고도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한나라당은 자각해야 한다. 국민들은 환골탈 태하고 솔선수범하는 제1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특검을 정당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국면이 '정쟁'의 시기가 아니 라 '정치개혁'의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쟁을 할 시간이 있으면 국민들의 고단하고 허탈한 목소리에 겸허히 귀기 울여라! 곳곳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낮은 자리의 삶에 시선을 맞추어라! 언제까지 우리는 울분을 삼키며 정치 를 마주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불법비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낡고 부패한 정치를 끝장내고 정치의 근본적 혁신 을 이뤄내겠다는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제1당 의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용기있게 나서야 한다. 만약 정치개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쟁만을 일삼는 시대착오 적인 정치행태만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 구를 무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단호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민들의 자살과 노동자들의 분신이 잇따르고 있다. '자살 공화국' '분신 공화국'이라는 슬픈 운명을 언제까지 짊어 져야 하는가! 정치권은 이러한 비극적 현대사를 써나가며 아무런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측은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다양한 부문에서의 민주주의 와 개혁은 진척되었으나 유독 정치만은 후퇴와 지체만을 반복하고 있다. 비극과 측은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라! 이 결연한 길에 한나라당은 적극 나서고 동참해야 한다. 그 길의 시작에 방탄특검 중단과 불법비자금 진상에 대한 진실 한 고백이 있다. 더 이상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정쟁의 볼모로 삼지말라! 그래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2003. 10. 29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 ■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대전지역 273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 1. 취지

#### ◎ '정쟁'이 아닌 '정치개혁'의 국면

- '재신임'과 '대선자금' 논란의 본질은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인한 검은돈의 정치권 유입에 있다. 낡고 부패한 정치를 근절하기 위한 정치의 근본적인 혁신이 절박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채 '방탄특검 주장'이나 '폭로성 공방'만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원성과 불신을 사고 있다. 대선자금 논란은 '정쟁'이나 '정치적 해결'이 아닌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혁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 정치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시민참여

- 온오프라인을 통한 광범위한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한다. '빨간장미'는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대 전시민들의 마음'을 상징한다. 대전시민들을 직접 만나 부패정치 일소와 정치개혁에 대한 절박한 요구와 기대를 공감 하는 '빨간장미 물결운동'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빨간장미 배너를 시민단체의 회원과 시민에게 전파하는 '빨간장미 바이러스 전파운동'을 진행한다.

#### ◎ (가칭)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의원에게 정치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임을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견지한 외부인사와 국회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 ◎ 유권자의 심판

- 대선자금 논란을 정치개혁을 위한 반성과 자숙, 일대혁신의 계기가 아닌 정쟁이나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당이나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하고, 2004년 유권자심판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는다. 이는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우리지역 의원 밀착감시 행동 선언에서 출발한 유권자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 2. 활동계획

##### ◎ 시국선언 후 각 정당에게 빨간장미 및 항의서한 전달

- 부패정치 일소와 정치개혁의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빨간장미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이에 역행할 경우 강도높은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을 경고

##### ◎ 수요일엔 빨간장미 거리 캠페인

11월 매주 수요일 오후 5-7시 으능정이 거리, 정치개혁을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 ◎ 빨간장미 바이러스 전파 운동

온라인에서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배너를 만들어 각 단체 회원과 시민들에게 확산시키는 운동

##### ◎ 11월 7일(금) 전국 맨투맨 공동행동의 날, 국회 앞 기자회견 및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 ◎ 단체별 현수막 달기 운동

##### ◎ 단식 및 항의농성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대전지역 273인 시국선언문>

불법 비자금 수수에 따른 대통령 측근의 구속과 한나라당의 SK불법비자금 100억 수수와 방탄특검 주장, 이회창 한나라당 전총재의 형식적 사과, 민주당과 우리당의 대선자금 저질 폭로 공방은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폭로와 구속, 형식적인 정치적 해결을 통해 유아무야로 넘어가는 것을 반복했던 정치권은 이번에도 그런 정치적 악순환의 관행을 답습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런 구시대적 정치행태의 반복을 더 이상 국민은 묵과할 수 없다.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국민이 나서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가 자초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의 주범인 정치권에게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 1. 정치권은 대선자금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라

정치권의 대선자금이 형식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불법 비자금 수수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대선자금 논란은 '정치공방'의 사안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사안임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불법비자금을 수수한 정치권의 폭로식 정치공방은 몰염치한 자해행위에 불과하다. 대선자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없다면 정치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혁신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 그 출발이 대선자금 진상공개와 국민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먼저 고해성사하고 솔선수범하고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국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대선자금 문제가 정치권에서의 정략적인 해결을 통해 흐지부지 된다면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설 자리가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 2. 정치관계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과감히 나서라

불법비자금 조성은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인한 검은돈의 정치권 유입에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이 허위로 보고되고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선관위의 권한이 전무한 상황에서 음성자금의 정치권 유입은 당연한 귀결이다. 정치권은 지역구도의 혁파,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당의 민주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과 유권자의 참여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흥정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준엄한 요구임을 자각해야 한다. 2002년 월드컵과 대선, 촛불시위에서 알 수 있듯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와 자발적인 참여는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유독 정치권만이 변화된 시대정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정치개혁은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낡고 부패한 정치풍토를 근절하고 새롭게 태어나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용기가 절박한 시기이다. 총체적 위기에 몰린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3. 의원과 외부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정치개혁 대상인 정치권에게 정치개혁을 맡기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요, 어불성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임에도 보수적인 인사가 대부분이고 이것도 모자라 선거구 획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치개혁 논의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여러차례 제안한 바 있는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대표 취임 직후 여야 합의를 전제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약속한 바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논의없이 정치공방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차제에 정치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이 기구에서 합의된 정치개혁안을 국회가 별도 논의 없이 입법화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4.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빨간장미 물결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빨간장미는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대전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시국선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 정치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관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수요일엔 빨간장미 거리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정치개혁을 상징하는 빨간장미 배너를 만들어 회원과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확산하는 '빨간장미 바이러스 전파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2003년 11월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대전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빨간장미 물결을 만나게 될 것이다.

5. 정치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은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시국선언은 멀게는 2000년 낙천낙선 운동과 가깝게는 지난 10월 22일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우리지역 의원 밀착감시행동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다양한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개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치권만은 후퇴와 지체라는 악순환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총체적 부실의 주범인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의원직에 연연하며 기득권에 집착할 것인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정치부패를 근절하고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 길에 용기있게 나설 것인지, 정치권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만약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망국의 길로 나라를 이끈다면 남은 것은 국민들의 심판뿐이다.

오늘 우리들은 허탈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자살 공화국' '분신 공화국' '이민 공화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고 있다. 이 부끄럽고 슬픈 대한민국 자화상의 주범은 정치권임을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낡고 부패한 정치와는 단절하고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절박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정치권을 조용히 떠날 것을 권고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치인이 정치권이 남아 있는 한 우리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실천은 계속 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리는 바이다.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대전지역 시국선언 273인 참가자

■ 대전시 경륜장 건립 “강행” 인가 “고집” 인가? 대전경륜장 건립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다수 시민들의 반대여론(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69% 반대)을 무시한채, 경륜장 건립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전시는 지난 10월초 행정자치부의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실사에서 “재검토 하라”는 권고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행정부의 지자체 주요사업 타당성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륜장 건립은 반대여론이 많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을 고려, 설립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권고로 이해된다. 특히, 대전경륜장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부조차도 대전경륜장 반대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대 주장에 대한 대전시의 서류보완을 얼마전에 지시한 것을 상기 한다면,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건립 추진을 전면 재검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행정부와 문광부의 권고에 대해 월권행위 운운하며, 이행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찬성여론을 위한 서명운동 움직임마저 포착되는 것은 시민여론의 무시를 넘어 왜곡수준에 이르렀음을 규

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광부와 행자부의 권고를 받아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건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이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한 경륜장 사업 타당성 여부, 매출액 및 지방세수 추정조작 및 왜곡 여부, 사행성 여부 등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를 요청할 것임도 분명히 밝힌다.

2003. 11. 1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 11월 18일 「지방분권의 날」 선포, 전국에서 1만명 참가  
-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촉구 국민대회

지방분권국민운동은 11월18일(火)을 ‘지방분권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대표, 시민단체, 지방의원,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주민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오전 각 시도별로 출정식을 갖고 서울 여의도로 집결하는 참가자들은 2시간여의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붕괴되고 공동화되어가는 지방을 회생시키고 지방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온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 법 제정에 반대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가로막으려는 일부 지역과 정치세력에 엄중한 ‘지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일의 국민대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느냐 아니냐,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름 짓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 대회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반드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지방에 결정권과 세원, 인재, 일자리가 마련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줄 것을 국회, 정당,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3,000만 지방주민의 절박하고도 정당한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갈망하는 수도권 주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정파적 이해와 지역이기에 사로잡혀 시대조류인 세계화, 지방화를 거스르는 일부 정치인과 세력을 강력히 응징하고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내리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무와 생업까지 미루고 개최하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동참을 바라며 국민대회에 앞서 각계각층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8일 국민대회에 모두 동참, ‘지방의 힘’과 열망을 보여주세요 !

지방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주민과 기관단체에 요청합니다. 지방의 명운이 달려있는 국민대회에 참여해 강력한 ‘지방의 힘’을 보여주고 ‘지방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주민의 역량결집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지방의 미래는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을 일으켜 세웁시다.

국회와 정당은 3대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원과 정당에 호소합니다. 지방분권은 세계사적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당위입니다. 정파적 이해를 초월, 3대 특별법제정에 흔쾌히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방3대 특별법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언론은 ‘지방의 실상’ ‘지방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

중앙과 지방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는 집단이나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행사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한 평화집회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충정과 지방 살리기를 외면하거나 왜곡보도하는 신문과 방송은 지방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민의 뿌리인 ‘고향’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에게 호소합니다.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은 수도권발전을 가로막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수도권주민의 고향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공룡화된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 대기 수질오염으로 갈수록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4천8백만 국민의 고향인 지방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기울음소리가 그친 농어촌, 취직할 곳이 없어 고통 받는 지방대생들, 텅텅 비어가는 공업단지, 고사위기의 지역언론, 2대8의 세수구조, 이름뿐인 지방자치로 지방 역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기득권논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당위인데도 자신들이 주도할 지방분권법은 요구하고 정작 국민들을 위한 균형발전법은 반대하는 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주민들께서는 모든 국민이 모두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역사적 과업에 지지를 보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수도권이 균형발전법안 제정에 반대할 경우, 우리는 13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에 계획되는 삼성 등 대규모공장과 신도시건설을 비롯 모든 국책사업의 저지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을 엄중 경고 합니다.

우리는 지방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의 충정과 열정이 폄하되고 왜곡된 채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끝내 무산돼 국정과 지방행정이 극도의 혼란과 분열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그 책임은 16대 국회의원과 각 정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며 지방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더불어 이를 분명 심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2003.11.17

지방분권국민운동

#### ■ 사회복지사무소 도입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세미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은 11월 20일, 정부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 움직임과 관련, '사회복지사무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MF이후 빈곤층이 다시 급증하고 가족동반자살이 빈발하는 등의 문제에 대처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복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복지행정조직을 재편하여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심재호 교수(목원대 사회복지학과)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의 일부와 구청 사회복지과의 인력을 통합재편성하여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교수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는 2과 9팀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신빈곤문제 등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9개지역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한 곳도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시의 5개구청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손건익과장(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은 사회복지사무소는 앞으로 시,군,구청의 복지정책 집행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질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행정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각 구청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산진구 김지찬과장(사회산업국)은 부산진구는 사회복지사무소로의 전환을 위해 이미 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하여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설과장(대전시 중구청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사무소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면서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태(중구 목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씨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대전에도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오정수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았으며 손건익(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이상설(대전시 중구청 사회산업국), 김지찬(부산시 부산진구청 사회산업국), 김정태(중구 목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2003. 11. 20

대전복지포럼 회장 김종생

## ■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부결에 즈음하여 우리의 입장

오늘 우리는 국토발전에 있어서 급세기 최대의 난제인 수도권 초집중현상과 불균형국토를 우려하면서 동시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그간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수도권과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의 대칭적 구조를 혁파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일괄 제정해 줄 것을 초당적 차원에서 촉구해 왔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제(11.2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우리 충청권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한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는 것은 결국 각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아예 처음부터 법 제정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 대의민주주의적 행태이며, 나아가 지역패권 정치에 기생하며 타락해가는 정치적 놀음으로 국민을 우롱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특위 구성안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무의미한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처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이유로 4당 원내총무의 합의를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구성을 본회의에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은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방치한 책임이나 방조죄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청권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능함과 함께 생색내기에 그쳐버린 그간의 양면적인 모습에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반대에 앞장 서 왔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대체 그동안 무슨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때 충청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큰소리치던 모습을 지켜보며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탈당을 불사하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원은 찾아볼 수 없다. 아니 일부 탈당을 말하면서도 탈당을 불사하는 실천적인 의원을 찾아볼 수 없기에 더욱 비통할 뿐이다.

이제 우리 지역민들은 실천은 없고 말만 화려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 엄중히 따를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자 한다. 이번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부결에 이어 건설교통위에서 특별법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좌절된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소환운동 및 2004총선에 적극적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비장한 마음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적 합의를 외면한 협애한 당리당락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3. 11. 22.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 행법련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한 논평

24일 행법련의 일부 인사들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에 입장발표를 통해 '중부권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할 경우 적극 지지할 것'을 밝혔다는 것에 접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관철되어야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위해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것에 이른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발언은 현행 정치지형의 조건에 비추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관철을 위해서도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정파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풍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신행정 수도 건설의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성취해야할 국가적 대사임을 분명히 한다.

일부 정파가 정파적 이익과 지역적 차별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까지 이에 부화뇌동할 수는 없다. 우리는 건전한 시민단체로서의 정도를 건기를 행법권에 권면하며, 이러한 발언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관철에 장애요인을 만든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아울러 우리는 건전한 시민의식에 입각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관철을 위한 상호연대와 협력은 계속할 것임을 밝히둔다. 2003. 11. 25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용우)

#### ■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대한 논평, 대전시는 공개채용 약속을 이행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선방식을 두고 이미 내정됐다는 설이 있는가하면 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임기만료를 며칠앞두고도 아직까지 공개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으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기대하는 바이다.

이런 설왕설래는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할 공기업 인사를 무원칙적으로 결정해왔던 잘못된 관례에 기인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대전시는 더 이상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독선인사는 하지않는 것이 순리이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공기업 인사와 관련하여 누차에 걸쳐서 공개채용을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전시의 구태의연한 공기업 임원 인사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전시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임원의 공개채용을 실시한 전례가 있고,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부시장을 공개채용한 바 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도시개발공사 후임시장에 대전시의 고위공직자를 내정한 것에 이어 또다시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비민주적인 채용을 단행한다면, 시장의 공기업 인사마인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먼저, 지난번 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논란시 공개인사 의지를 밝혔듯이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확고한 공개채용 의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 사장 공개채용의 경우처럼 내부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아닌 공개공모를 거쳐 임용할 것과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공개채용할 것을 시민앞에 약속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2003. 12. 9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 ■ 지방 살리기를 위한 3대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을 남겨놓고 있지만 2,400만 지방주민의 절규에 귀 기울여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켜준 행정자치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지방 살리기'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3대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는 지방분권-분산-분업의 시대를 활짝 열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문광위에 상정돼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은 이 시대의 명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당위이다.

무너져가는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숨 막히는 수도권을 살리는 길이며, 2만불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 관철은 지방 살리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온 지방주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법제정을 실현시킨 16대 국회의 위대한 승리이며, 지방과의 상생발전에 기여이 동참한 수도권 주민의 승리이며, 온 국민의 승리로 기억될 것이다.

침예한 정파적 이해와 지역간 이해가 엇갈려 법안 심의과정에서 시련과 고통이 무수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양극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용해시켜 고향을 살리고 지방을 살려낸 위대한 국민으로써 국민대통합, 지역대통합의 새 역사,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토대위에 우리는 이번 법안에 담겨진 내용 가운데 미흡했던 '지방 살리기' 법제의 완결과 철저한 시행을 위해, 지방 스스로의 내생적 발전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간단없이 노력하고 더욱 가열 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위대한 지방의 승리', 그 감격이 이제 눈앞에 있다. 국회 본회의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위대한 선택과 결정을 기대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치권이 지방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2,400만 지방주민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3. 12. 9

지방분권국민운동

### ■ 한국, 일본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즈음한 한-일시민단체 긴급 공동성명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침략 전쟁이다. 교황청이 이라크 침공이 '평화에 대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밝힐만큼 전세계적인 반대여론에 직면했던 전쟁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외교관의 피살된 이후 거센 파병반대 여론을 등지고 지난 10일 자위대 육해공 파병을 확정지은데 이어, 한국도 오늘 3천명 규모의 정부안을 확정짓고 머지않아 파병결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 파병규모를 보면, 육상자위대 600명 이내 육상자위대 차량 200대 이내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 4대, U-4 다용도 지원기, 정부전용기를 포함해 8대 이내 해상자위대는 수송함과 호위함 각 2척 등을 포함해 명실공히 육해공 자위대가 파견되는 것이다. 일본의 이번 파병결정은 패망이후 처음으로 육상자위대를 평화유지군 형태가 아닌, 전투가 계속중인 전쟁터에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제국주의가 패전 50년만에 다시 고개를 쳐 들고 군국주의 부활을 도모하기 시작한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6월 유사시 한반도를 비롯 주변국에 대한 전쟁준비를 합법화하는 이른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가결한데 이어 일본 자민당이 북한 선제공격론, 군대보유금지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폐기하는 개헌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그들의 숨은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의 의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라크 파병방침에 대해 언급조차 없음은 물론, 3천명 규모의 혼성부대 파병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를 여러차례 밝혔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단독 군사행동을 반대한다는 입장까지도 밝힌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조 한국군의 파병을 추진할 예정이고, 일본의 해외 군사행동도 묵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저외교 자세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금 밝히지만, 우리는 명분없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일본 자위대 파병을 반대한다. 특히 일본이 이미 미국의 연쇄 테러를 계기로 '유사입법 성립'과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군국주의로의 회귀의 전환점이 될 이번 일본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결사 반대한다.

1997년 이후 일본 교과교외곡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 민간단체간 연대활동을 통해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듯이 이번 한일 양국의 미국침략전쟁 동원을 결사저지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역민과 전세계 평화 애호민과 함께 전개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편승하여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간교한 책동을 저지할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굳게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 <한일 시민단체 공동교류 경과>

대전참여자치연대와 청양포럼 등 충남도내 10개 시.군 시민단체와 구마모토현민의 회의 지역간 교류는 지난 1997년 구마모토현의회에 이 지역 보수우익세력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군 위안부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청원을 내자 이를 공동저지하면서 시작했다.

두 나라 양 지역 단체는 지난 해부터는 '만드는 모임'측의 만든 교과서 채택을 막기 위해 자체 힘으로 잘못된 기술된 교과서 내용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했고 현의회에 대한 청원, 시.정.촌 교육위원회 진정, 정보공개운동, 교과서 넷트

워크 조직, 한국의 근.현대사 현지학습-교류 등 교과서 불채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2003. 12. 17

韓國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日本 / 평화헌법을 살리는 쿠마모토현민의 회

## ■ 정치권의 고해성사와 정치개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악' '악' 소리는 경제난과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가슴에 시름과 좌절만을 안겨주고 있다. 국가경영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울분을 삼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정치 율화병의 보편적 증상이다. 하루는 대통령직 사퇴발언을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하고, 하루는 거대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며 허탈해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주소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퇴행적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안기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후퇴'와 '정치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오늘 우리들은 낡고 부패한 정치와 결별하고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요구한다.

1. 대선자금 전모를 공개하고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차떼기 수법까지 동원하며 수백억대의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하고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기는 커녕 편파수사 운운하며 검찰의 수사중단까지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거대야당의 오만함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386 최측근의 비리와 구속은 구태정치의 답습이라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절망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대선자금 논란의 본질은 정치의 지체 혹은 후퇴를 의미하는 '정쟁'이 아니라 고해성사와 환골탈태를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정치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임을 직시해야 한다.

2.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대통령 최측근의 불법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우선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제1당이라는 책임정당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자숙은 고사하고 정쟁만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국민들은 '한나라당 해체'까지 주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열린우리당도 불법대선자금 수수에 대해 먼저 고해성사하는 특단의 용기가 필요하다.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불법대선자금 수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3.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혁)의 정치개혁안을 수용하고 연내 입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서글픈 일이나 엄연한 현실이다.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의원에게 정치개혁입법을 위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적 담합을 통해 정치개혁법을 졸속개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낡고 부패한 정치와 근절하고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기에 우리는 객관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정개혁의 정치개혁안을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과감하게 수용하여 연내에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율해를 넘기면 각 당의 국민참여경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정치개혁법안의 졸속개정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다.

4. 정치권의 고해성사와 환골탈태를 촉구하는 '양심 거울'을 보낼 것이다.

불법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정치권은 적지않은 사과를 국민에게 했으나 형식적인 사과에 그친 나머지 정치불신만을 증폭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환골탈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현역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자민련에 '양심 거울'을 보낼 것이다. 모쪼록 '양심 거울'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대변하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게 정치개혁의 근본적 성찰을 촉구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5.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정당이나 의원은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한달 전에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조사서를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보낸 바 있다. 오늘 정치개혁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발언이나 의견을 중심으로 각 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운동의 일환으로 유권자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될 것이며,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정당이나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한편에선 '악' '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한편에선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우리는 연내에 정치개혁법안이 입법화되길 희망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길 염원한다. 입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정치의 일대도약에 밑거름이 되고자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현역 의원들의 용기와 결단을 기대한다.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길 촉구한다. 만약 정치개혁이 정치적 담합으로 유아무야 된다면 남은 것은 유권자의 심판관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3. 12. 16.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2003년 대전지역 10대 뉴스

‘행정수도이전 등 지방분권 3대특별법 제정 논란’ 1위로 꼽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는 지난 12월 초부터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지역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홈페이지, 이메일설문, 면접)를 바탕으로 19일 ‘대전지역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 등의 지방분권 3대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대전지역 가장 큰 뉴스로 선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용두동 철거민 노숙투쟁 및 극적타결 소식이 두 번째 뉴스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10대 뉴스에는 “대전시 대전경륜장 건립추진 찬반논란”과 “이라크파병 찬반논란”, 그리고 “시교육청 대전외고 이전 찬반논란”과 “고속철도 지상, 반지하, 지하화 논란”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계룡육교 철거중 붕괴로 새마을호 탈선”, “수송현금차량 연이은 도난사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및 BRT시스템 도입 찬반논란”, “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교통카드 도입 논란” 등이 주요 10대 뉴스로 뽑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2003년 대전지역 10대 뉴스”>

### 1.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관련 충청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 충청 지역민과 자치단체, 의회,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 정치인 및 일부 중앙언론의 부정적인 여론조성으로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2004년 총선에 최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 2. 용두동 철거민 노숙투쟁 및 극적타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과정에서 살고 있던 집을 철거당하자 대전시와 중구청 등지를 오가며 계속해온 용두동 철거민들의 노숙투쟁이 400여일 만에 해결되었다. 철거민들이 주택공사에 요구해 왔던 특별분양에 참여하고, 가수용단지 시 임대사업을 통해 마련기로 함에따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주거권 확보를 위한 용두동 주민들의 3년여의 투쟁은 재개발사업의 올바른 방향과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의 사회적 여론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투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 3. 대전경륜장 건립추진 찬반논란

염홍철 대전시장이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던 대전경륜장 건립추진을 올초 공식화 하면서, 대전시와 시민단체간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대전시는 레저시설 확충 및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 반면, 시민단체는 대전경륜장 건립추진 과정이 잘못됐으며, 여론조사 실시와 전국적인 도박장반대 단체를 구성하는 등 각종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현재 소관 부처인 문광부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찬반여론을 이유로 대전경륜장 허가 여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 4. 이라크파병 찬반논란

미국은 이라크전 종전 이후 재건 과정에서 이라크 내부의 거센 저항으로 홍역을 치르자 지난 9월 초순 한국에 경보병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병을 둘러싼 보수와 혁신 세력의 찬반논쟁이 촉발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파병요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과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파병반대 운동을 전개했으며, 파병을 찬성하는 보수단체들은 국제 질서유지, 중동평화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며 파병 지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오무전기 직원 2명이 지난 달 30일 이라크 저항세력의 총격으로 현지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속도를 내던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정부는 4당 대표회담 이후 3천명 규모의 혼합부대 파병을 확정하면서, 파병찬반 논란에 불을 붙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5. 시교육청 대전외고 이전 찬반 논란

대전 유성구 전민동 대전외고 이전을 둘러싸고 3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외고이전을 구체화하면서 해당지역 학부모들은 물론,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가세한 외고이전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전민동 지역에 인문계고 신설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외고이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반면에 외고 학생 및 학부모들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는 편의주의 행정이라며 연일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전시의회의 의결로 대전외고 이전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6. 고속철도 지상, 지하화 논란

1990년 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하화 노선으로 결정 됐던 대전 도심통과 방안이 1993년 사업비 절감 문제로 지상화된 뒤 1995년 지역주민 반발로 다시 지하화 됐다. 올해들어 노선통과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상, 지하 논란속에 동구의회가 반(半)지하화를 요구하는 등 도심 통과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상화 건설을 수용하되, 지하화 건설비용 대비 절감비용을 역세권 개발 등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의 최종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 7. 계룡육교 철거중 붕괴로 새마을호 탈선

지난 5월 30일 계룡육교 철거작업 도중 붕괴로 새마을호 열차가 탈선해 50여명이 다치는 등 14시간동안 호남.전라선 열차 운행이 전면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구조물을 철거하면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3명의 관련 책임자를 구속처리하는데 그쳐, 책임소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 8. 수송현금차량 연이은 도난사고

올해들어 현금수송차량 도난사건 등 금융기관 상대 강,절도사건이 대전.충남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대전시 중구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내에서 현금 7억500만원을 실은 현금 수송차량이 통째로 도난당한 사건은 지난 1월 22일 중구 은행동 현금수송차량 도난(4억7천만원) 사건이 발생한지 지 8개월만에 다시 일어난 것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 등 잇따른 수송현금차량에 대한 탈취사건 등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수사력 부재라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 9. BRT(급행버스)시스템 도입 찬반논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하철 1호선 이후 대체 신교통시스템으로 급행버스급행시스템(Bus Rapid Transit.BRT)을 대전시에 제안하면서, 지하철과 경전철 그리고 BRT시스템 도입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도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도입 등의 신 교통수단 용역에 BRT부분을 추가한 데 이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BRT포럼을 구성하여 내년 4월까지 신교통 수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BRT시스템은 전세계 50여개 도시에서 이미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 및 경전철 건설비용의 최고 1/20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수송능력에 있어서는 경전철에 못지 않는 등, 기존 지하철의 막대한 건설비용 및 유지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수도권 그리고 대구, 울산 등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 10.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교통카드 도입논란

시내버스 업계 및 대전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교통카드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되었다. 기존의 굴곡 장거리 시내버스 노선으로 인해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획기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선개편과 교통카드가 추진되었지만, 준비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대전시의 노선개편 및 교통카드 도입이 시내버스 개혁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03. 12. 19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김선전

## ■ 국회 예산계수소의 지방살리기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국회예결특위 예산계수소위에서 지방살리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민을 죽이는 예산의 삭감이 자행된 것이다.

지역산업진흥과 공공기관이전, 지방대육성 등 핵심사업 예산이 줄줄이 깎였다. 지방살리기 3대입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실행력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에 우리는 중앙정치세력이 지방의 저항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는 술수를 부리는 것으로 단정, 엄중항의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사업 300억원중 290억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369억원중 100억원,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1,145억원중 300억원, 4개 시도 지역산업 2단계 1,000억원중 900억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500억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과 4개 시도지역산업 2단계사업은 해당 상임위에서 50억원을 증액한 사업인데도 삭감되었다. 이밖에 신산학시스템, 지방대, 지방과학관련예산이 대폭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 계수소위의 수도권 위원이 2명, 비례대표2명이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지방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특정정당의 음모가 있었던 것인지, 지방출신 의원들이 지방을 외면한 것인지 진실이 밝혀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방살리기 예산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국회의원을 지방죽이기 9적으로 규정,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4당의 지도부에도 묻고자 한다. 지방살리기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게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인가? 4당 지도부는 지방살리기 예산의 잘못된 삭감을 바로 잡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참고] 지방죽이기에 나선 예산계수소위 위원 명단 / 한나라당 이한구(비례, 간사) 박종근(대구) 허태열(부산),이성현(서울), 민주당 박병윤(경기,간사) 윤철상(비례), 열린우리당 이강래(전북,간사), 박병석(대전), 자민련 정진석(충남),

2003. 12. 23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 민주당은 '지방죽이기 당' 이 되려고 하는가?

민주당이 어제(12월 23일) 의원총회에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중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처리를 무산시킨데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어제(23일)로 예정됐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민주당이 무산시켜 29일로 연기됐다. 당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까지 동의해 민주당만 합의하면 두 개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2. 우리는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접하고 과연 민주당이 지방 살리기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3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며 지방분권국민운동 차원에서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상경했던 이들의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변하고 있다.

3.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협약을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하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를 모른 채 한다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우여곡절 끝에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됐고, 전원위원회 소집 및 수정안 제출 움직임도 지방민의 강력한 반발 등이 작용해 폐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뒤늦게 탄죽을 건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는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먼저 어제 의총결과가 최근 조순형 대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경기도지역이 상대적 불이익이 있는데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발언했던 연장선이라는 데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까지 3대 특별법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일부

왜곡된 수도권에 민심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를 내년 수도권 총선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그 이면에 지방은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어떻게 하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지킬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은 엄청난 오산이라는 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먼저 거듭 밝히지만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수도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이며 나라 전체가 사는 '상생발전특별법'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의한 바다. 또한 이번 3대 특별법과 관련, '수도권 구애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갈망하는 지방민을 무시한 것은 민주당이 전국정당인지 의심케 하는 것이며, 특히 수도권의 눈치는 보면서 자신들의 텃밭이라는 호남 지방은 무시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는 이번 의총을 비롯한 일련의 결과가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대한 정치적 계산과 함께 소극적인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지방 살리기 특별법에 지속적으로 탄축을 건다면 지방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3. 12. 23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 ■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 우리는 지방사의 대전환점이 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해 분권과 분산의 시대를 기필코 이뤄내려는 2,400만 지방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재천명하고자 한다.

많은 우려곡절 끝에 지방을 살리기 위한 3대 특별법 모두가 국회 상임위 통과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되었다. 우리 2,400만 지방민들은 다시한번 지방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대의적 결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3대 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지방민들의 한줄기 희망을 꺾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에 회부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처리가 무산되는 등 아직까지도 정략적 대상화 내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3대 특별법의 통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다시한번 우리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정략적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고사 직전의 지방을 살리는 첫 출발임을 국회와 정치권이 똑바로 인식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오는 12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결코 지방민을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본회의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위대한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더불어 3대 특별법 가운데 가장 논란이 심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킴으로써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는 지방분권·분산·분업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2,400만 지방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내실을 거두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임을 깊이 인식해 주기를 다시한번 권면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국민적 합의임을 상기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2,400만 지방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수도권 패권주의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해온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2,400만 지방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함께 2004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 2,400만 지방민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권고하며, 각 정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당론 채택 등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2,400만 지방민들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에 있어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쟁

으로 인해 지난번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본회의 부결과 같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오는 12월 29일을 '지방민 분노의 날'로 선포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방민의 견장을 수 없는 저항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치권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여당과 야당에 의해 또는 지역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이러한 희망의 싹을 피우기 위해 우리 2,400만 지방민들은 일어선 것이며, 이러한 지방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려 있다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는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별법을 일괄 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등 새해의 희망을 여는 데 전초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게 거듭 촉구한다.

2003. 12. 26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및 참가자 일동

#### ■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하여

○ 오늘 29일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는 2,400만 지역민의 염원을 수용한 16대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12월 29일은 지방민의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기억되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장정의 첫 출발로써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크게 환영하며,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흥분과 감동을 감출 수 없다.

○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결코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또한 충청권의 3개 자치단체는 이 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합리적으로 선정되는 경우, 이미 충청지역 3개 시도지사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입지 선정에 승복하는 대승적 자세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참여정부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과 친환경적 개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후보지의 정주민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시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지방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역인사가 다수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각계각층 인사들과 500만 충청인에게 감사드리며, 2,400만 지역민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03. 12. 29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 복지포럼 2003년 사업보고, 평가

보고자 : 총회준비위원회

### 1. 조직개요

회장 / 김종생

부회장 / 권중돈, 김형돈

집행위원장 / 이문희

장애인분과장 / 정진일

의료분과장 / (공석)

복지행정분과장 / 정기룡

집행위원 / 김명수, 김성한, 김순신, 김정현, 김제선, 류진석, 박진희, 배은영, 신현정, 심완섭, 심재호

원용철, 오영란, 정문기, 조용만

### 2. 공공기관 참여현황

- 병무행정 국민참여위원 신현정
- 대전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종생
- 성애노인요양원 감사 김주현 운영이사 윤종삼
-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송인준
- 중구자활후견기관 자문위원 김제선

### 3. 활동일지

- 1/9 복지포럼 회장단 모임
- 1/24 복지포럼 총준위
- 2/13 대전복지포럼 정기총회(7시, 봉사회관)
- 2/2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3년 정기총회 및 회원대회
- 3/7 복지포럼 정책협의회(12시, 내동)
- 3/24 복지포럼 집행위 워크샵-참여정부 복지정책
- 3/26 중구자활후견기관 자문위원회(김제선)
- 3/27 중구자활후견기관 개소식 참여
- 4/16 복지포럼 사업모임
- 3/17 모두사랑이사회 후원회(엑스포아트홀)
- 4/28 복지포럼 집행위원회
- 4/29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참석(김종생, 김제선)

5/19 외국인노동자센터 창립총회  
 5/26 복지포럼 집행위원회  
 5/30 모두사랑 이사회  
 6/2 복지포럼 사회복지학교 안내포스터 제작  
 6/17 복지포럼 겸 집행위원 단합대회(월평복지관)  
 6/24 사회복지학교 개강(7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6/26 사회복지학교 2강좌  
 7/1 사회복지학교 3강좌  
 7/3 사회복지학교 4강좌  
 7/8 사회복지학교 5강좌  
 7/10 사회복지학교 종강식  
 8/28 목원대 심재호 교수(복지포럼 정책위원) 내방, 사무처 격려  
 9/5 복지포럼 집행위원회(7시, 사무실)  
 9/17 국민연금 제도개선 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3시, 기독교봉사회관)  
 10/8 대전시 올바른 예산편성토론회 참여(정책위 주관)  
 10/10 복지포럼 수련회 준비회의  
     복지활동가대회 2차 준비모임(3시, 천안)  
 10/18-19 복지포럼 임원수련회(금산전천)  
 11/7 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 3차 준비모임(청주)  
 11/14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금홍섭)  
 11/20 사회복지사무소 도입 어떻게 할것인가 학술세미나(충남대, 복지포럼)  
 12/12 복지포럼 집행위원회

#### 4. 2003년 활동평가

- ① 활동내역 / 총 38회
- 집행위원회 / 5회
  - 행사준비 등 각종회의 / 6회
  - 교육프로그램 / 6회
  - 토론회 / 3회
  - 워크샵 및 세미나 / 3회
  - 연대활동 / 6회
  - 기타 / 9회

② 총 평

2003년 복지포럼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갖추나간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불규칙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11차례에 걸쳐 집행위원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모임이 개최되었으며, 토론회를 비롯해, 사회복지학교와 워크숍 등의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고, 마련된 한해였다.

특히, 1999년 이후 중단되었던 제2회 사회복지학교의 경우 60여명이 넘는 수강생의 등록으로 계획했던 여섯차례의 강좌가 알차게 진행됐으며, 전국의 사회복지운동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준비모임 두차례와 한차례의 워크숍 개최는 전국적인 사회복지운동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주요한 사업기조로 채택되었던 “지속적인 국가개혁 및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복지이슈 및 지역복지의제 개발”과 “복지현안에 대한 종합적 복지분야 개혁운동 모색”, “공보육 확충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의 지속적인 대안제시 모색”, “민간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재편 및 운동의 주체발굴”, “사회적 약자 등과의 연대강화”,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 대책” 등의 목표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전체적으로 활동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활동은 구호에 그치고, 행사위주의 활동이 중심을 형성했다는 점, 그리고 지역복지계의 종합적 권력감시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개혁이라는 복지포럼의 중심적 과제에 비추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이슈개발이 미흡하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복지운동 방법의 발굴이 여전히 미흡했던 한해로 평가된다.

특히, 복지포럼 활동이 집행위원 등의 주요임역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복지포럼을 매개로 회원가입을 했던 회원들의 참여공간이 더욱더 협소해진 것으로 평가되며, 실무역량의 부재와 젊은 피 수혈의 부재, 그리고 기존 임원중심의 활동의 지속화 되면서, 전체적인 조직역량의 노쇠화와 더불어 축소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조직관리 방안모색 및 조직역량 배가를 위한 자원활용의 효율화 및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복지운동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안개발 및 연대활동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안으로는 새로운 회원이나 임원을 조직해 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모색과 더불어,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하여 참여하는 임원 및 회원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밖으로는 연대와 실천을 통해 지역복지계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안집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3년 활동보고, 평가

보고자 : 총회준비위원회

### 1. 각종 위원회 참여

- 대전국세청 자산재평가위원 / 최승룡
-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이현주
- 성애노인요양원 감사 / 김주현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송동호
-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 김주현
- 대전시교육청 학교시설 준공검사단 위원 / 유병구
- 중구, 동구, 서구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위원 / 유병구
- 충청남도 건설 기술심의 위원 / 유병구, 정성진
- 모범관리아파트 평가위원 / 유병구
- 학교시설 관련 위원회 위원 / 유병구
- 중구 지방건축위원 / 유병구

### 2. 주요 보도자료 및 논평·질의

- ◀ 최저임금 위반 업주에게 레드카드를!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고소·고발 창구(256-0092)개설(4/30)
- ◀ 최저임금 실태조사 발표 및 최저임금 70만원 촉구!,  
하루 16시간노동에 월60만원!, 학교 일숙직노동자 노동 실태 고발 기자회견(6/11)
- ◀ 국유지에 조성된 흥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 점(사)용료 연체관련질의(8/25)

### 3. 주요 활동내용

- 집행위원회 / 9회 개최
- 대전시 보육조례제정 소위원회(6차 회의진행)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1차 내부웍샵(3/18)  
최저임금법률해석 / 장동환 사회인권분과장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역할” / 유성미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2차 내부웍샵(4/15)  
(발제) 1.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방안 / 유성미  
2. 외국인 고용허가제 찬반논리 / 김봉구  
(토론)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우리의 역할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3차 내부웍샵(7/15)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보육, 이제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 유성미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4차 내부웍샵(9/16)  
청소년인권 관련 제도의 현황과 청소년인권 조례의 제정방향에 대한 검토 / 유성미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의 활동소개 / 김미옥 집행위원장

#### <진행중인 사업>

- ◀ 공익소송 / (주)충남도시가스 부당한 공사분담금 반환소송의 건
- ◀ 고소고발창구 개설
- ◀ 대전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아동보육조례 제정의 건
- ◀ 대전광역시 청소년인권조례 제정의 건
- ◀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하천점(사)용료 61억 연체 대응의 건

#### 4. 활동총평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003년 한해동안 9차례의 정례모임 개최, 4차에 걸친 내부웍샵을 가졌다. 또한 사회인권분과를 신설하고 외국인노동자문제, 비정규직 문제, 청소년 알바문제 등 차별 반대 차별금지에 의미를 둔 사업을 진행코자하였으며,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고소·고발 창구”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대전지역 최저임금 실태파악에만 그쳤고,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속·감시업종사자, 청소년 노동 등 법개정운동으로 확대하여 대응하지 못했다.

공익소송으로 도시가스 시공에 따른 부당한 공사분담금을 납부한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들어 가려 하였으나 발빠르게 진행하지 못한 채 사법기관이 개입하게 되었다. 또한 대전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 청소년인권조례,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 하천점(사)용료 연체관련 대응의 건 등 대부분의 사업이 아직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2003년 신임집행위원으로 김봉구, 김두현이 참석하게 되어 17인의 집행위원이 활동하였으나, 5인의 집행위원은 회의 참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조직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집행위원의 재정립과 확대는 물론 정기적인 모임 참석의 방안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 정책위원회 2003년 활동보고, 평가

### 1. 활동일지

- 1 / 27 정책위원회(12시, 사무실)
- 2 / 2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3년 정기총회 및 회원대회 참석
- 2 / 28 정책위원회 정기총회(12시, 둔산)
- 3 / 28 정책위원회
- 4 / 11 경륜장 득실분석 기자회견(11시, 시청) 참석
- 5 / 2 정책위원회 '도시안전 정책토론회(시청3층 세미나실)' 주최
- 6 / 9 행정수도 워크숍(3시, 대전대) 참석
- 6 / 25 정책위원회
- 7 / 20 BRT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론회(시청, 버스사랑시민모임) 참석
- 7 / 28 대전광역시 주최 2004년 예산편성토론회 참석
- 9 / 5 정책위원회 집행위원회(12시, 예술마당)
- 9 / 15 지방화대전선언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이은구 정책위원장, 시청)
- 9 / 17 대전KBS 라디오 인터뷰(이은구 정책위원장)
- 10 / 8 대전시 올바른 예산편성토론회(2시, 한남대, 정책위 주관)
- 11 / 7 정책위원회(12시, 예술마당)
- 12 / 1 대전경륜장반대 지식인 선언 추진

### 2. 토론회 개최(5회)

- ① 정책위원회 '도시안전 정책토론회(시청3층 세미나실)' 주최
  - 일시 / 5월 2일 오후 2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 참석인원 / 50명
- ② 대전시 올바른 예산편성토론회 주최
  - 일시 / 10월 8일 오후 2시
  - 장소 /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 참석인원 / 80명

### 3. 기타 사업

- ① 기관지 '참여와 자치' 기획참여
- ② 각종 현안 자문
- ③ 각종 평가위원 위촉

#### 4. 2003년 사업평가

##### ① 활동평가

###### - 조직 평가

집행위원 확대로 안정적인 조직구성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안정적 회의개최는 하지못함.  
정책위원의 전문성 확장을 통한 지역사회 개혁틀 제시 부족.  
전체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역할과 위상의 한계

###### - 사업 평가

참여자치시민연대 각 분야별 참여 및 자문역할 수행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자문을 통한 전문성 부여와 활동방향 제시  
정부, 기업, 민생지원 등 권력감시의 부재와 공공부문 일부사업에 편중  
광고협찬으로 자급자족 사업구현  
실무력 한계 및 참여자치연대와의 조직적 결합력 미흡

###### - 토론회 평가

적시성 있는 대안제시를 못함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예상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토론회의 한계  
토론회의 경우, 전문정책 생산을 기능하였으나 시민교육의 기회로는 활용하지 못했음.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로 지역현안에 대한 공론마당 연출 미흡

##### ② 활동과제

- 지방분권혁신체 구성의 주체적 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
- NGO/대학간의 협력방안 모색
- 총선대비 지역사회 과제개발 및 공약분석
- 유권자운동 일환의 후보자초청 토론회 개최
- 조직의 안정적 운영
- 각 분야별 전문가 추가 영입을 통한 조직확대로 역할과 위상 재정립
- 현안에 대한 책임지는 정책분석을 통한 감시운동 틀 구축
- 지역사회 발전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 개별위원의 역할강화
-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집단으로의 발전방향 제시
- 참여자치연대 전분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유도

## □ 낙천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

### 1. 낙천낙선운동 질의응답

#### Q1. 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요?

- 낙선운동은 유권자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예를 들어 부패 경력, 반개혁, 의정활동 등)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이들의 공천탈락과 낙선을 위해 펼치는 운동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0년 16대 총선 과정에서 전국 100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 운동을 펼쳐 86명의 대상자 중 59명을 낙선시킨 바 있습니다.

#### Q2.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낙천운동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평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고, 낙선운동은 본선과정 즉, 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부적격 인사는 공천 단계에서부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Q3. 시민단체 낙선운동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낙선운동은 합법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의 예외’ > 규정에 의해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은 공익적인 의미의 유권자 운동을 정파적인 의미의 후보자 당선운동과 동일시하고 있어 그 방식을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은 활발한데 비해 유권자 운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Q4. 2000년 총선시민연대 대표자들이 낙선운동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 총선연대 지도부는 낙선 운동자체가 불법이라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낙선운동의 방식에 대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온라인 상의 낙선운동과 관련한 웹사이트 운영, 단체가 회원대상 회지를 통해 낙선대상자 공표, 전화를 통한 1:1 낙선운동, 자필편지 낙선운동 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 배포, 집회, 확성기 사용, 가두행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진행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재판은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며, 울산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법원에서는 선고유예라는

매우 관용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Q5. 특정 정치세력을 궁지에 몰아세우려는 음모라고 하던데...**

- 음모론이야말로 유권자 운동을 모독하고 음해하려는 정략적인 주장입니다. 낙선운동은 의원 개개인의 지난 의정활동과 도덕성,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함량 미달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운동입니다.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낙선 대상자 발표에 있어 단순히 정당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위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정당별로 안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본분에 어긋난 것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Q6. 선택은 유권자의 몫인데..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 오히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공익적 양심을 걸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회는 회의장 공개, 속기록 공개, 각종 표결결과 공개에 있어 소극적이라 국민감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전력은 선거유인 물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정치인들의 의정활동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지지 혹은 반대를 호소하는 것은 모든 정치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입니다.

**Q7. 2004년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004년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선정대상자의 주요기준 6가지>**

- 1) 부패, 비리 행위 / 뇌물, 알선수재 등의 개인비리와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 불법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연루사실 조사
- 2) 선거법위반행위 /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혹은 부심판된 사건의 재판현황 조사  
17대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의 경고, 고발된 현황 조사
- 3)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조사
- 4)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파괴
- 5) 의정활동의 성실성,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 출석률, 법안발의건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자료 조사
- 날치기, 방탄국회, 근거 없는 폭로 등 반의회적 행위와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반유권자적 행위 등을 조사

#### 6) 도덕성 및 자질

- 욕설, 몸싸움, 성희롱, 차별발언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
- 재산, 병역, 경력 등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비도덕적 행태를 보인 경우를 조사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제소된 사항
- 기타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

그외 부문별 총선연대(총선환경연대, 총선평화연대등)에서는 각 부문의 의견에 따라 주요정책결정에 대한 태도를 선정기준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 Q8. 2004. 참여연대 낙천낙선운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정당이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갖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부패에 연루되고 의정 무능력자로 평가받는 정치인들은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불출마, 정계은퇴 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시민제보, 온라인 정치인청문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작업,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선정하여 경선 단계와 본선단계에 맞춰 발표할 것입니다.
-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조직해 부패무능하고,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을 실제로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Q9. 국회에서의 주요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 공간은 늘 국민의 뜻이나 시민사회의 뜻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정치사회의 파행과 부패, 무능과 반민주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요? 또한 간접민주주의의 견제장치인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 등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령 정치가 정상화되어 있고, 견제장치가 완비되어 있다해도 입법이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회를 향해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공익적 로비가 전개되고, 각각의 사회세력에 따른 고도의 압박행위도 있는 것이고...(민주주의는 원래 비용도 꽤 들고, 매우 씨끌벅적한 것이다.)

때로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것이 개인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찬반의사를 밝히거나 나아가 낙선운동이나 지지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개발을 찬성하는 의원이 매우 개혁적이다 하더라도 환경운동진영은 그 의원에 대해서 반대여사를 표시하거나 낙선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에 따른 낙선-지지운동, 이것은 미국과 같은 정치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선거참여행위입니다.

한편, 낙선운동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낙선이 꼭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유권자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운동진영에게 낙선운동은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만금개발'같은 경우는 그 운동진영이 명운을 걸고 갯벌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와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반대로 지지를 하거나 당선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찬성-반대를 유보할 수 있는 것도 유권자, 시민사회단체들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선거시기에 이르러 그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보가 시민사회에 공론화되고, 유권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지고, 낙선운동이나 지지운동, 또는 유보적 입장들이 서로 각축을 이루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판단하여, 투표행위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각 후보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권자 참정운동의 원리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선거과정일 것입니다.

전번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일부의원들은 '국익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낙선운동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각자 판단이 다른 속에서 '국익도 국제법과 보편적 정의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평화와 인권을 확고히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는 판단에 의거 낙선, 낙선운동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패사범만 낙선운동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요? 제 양심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한 국회의원에게 반대를 표시하고 개인이든, 단체든 낙선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는 사회가 참다운 '참여민주사회' 아닐까요. 다만, 2004년 총선연대 낙선낙선운동시에는 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한 태도보다는 부패사범등 6가지 기준에 의해 주로 해당자를 선정하고 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한 태도는 부문별 총선연대에서 명단 선정시 강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 Q10. 시민단체면 시민들의 뜻을 순수하게 대변이나 해야지 웬 낙선운동인가요?

그리고 하나의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의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지향하고 주장하는 바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해관계와 계급-계층이 다르고 다양한 이견이 수십-수백가지씩 존재하는 시민들을 다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핸드폰요금인하운동과 같은 운동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당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사회단체

의 창립정신과 신념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나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론 가능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대한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로 입장을 결정하고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할 정치개혁, 재벌개혁의 과제 역시 많습니다. 또한 각 단체들이 스스로의 열띤 주장과는 별개로 항상 귀를 열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시민들 또는 수구언론들이 무턱대고 '시민단체면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지 왜 다른 주장을 펼치느냐고'하는 것은 정말 억지에 가까운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시민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시민들은 절대로 동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매우 다원화된 존재이며, 의견의 스펙트럼 역시 매우 넓고 다양한데, 하나의 시민사회단체가 뭉뚱그려 '전체적인 의미의 시민'을 대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일부 시민들도 뭉뚱그려 '시민단체면 시민의 뜻을 따라야지 왜 다른 소리를 하나며 하나의 시민단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점이 있다면 자신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자신들의 주장과 지향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세력에 지지, 지원을 보내는 능동적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총선시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시민들을 비난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여러 입장과 행동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 Q11. 총선시민연대가 국가보조금을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선시민연대는 단 한푼도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민련등 일부 정치세력이 계속 유폐하고 있고 일부에서도 퍼지는 모양입니다만, 이는 2000년 총선연대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들이었지만, 근거없는 공격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확인하면 될 텐데요,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서 자민련등 일부 정치세력만이 국고보조금건을 유폐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0년 총선연대시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맹렬히 공격했지만, 근거가 없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꼭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절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회원들과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적들은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설령 아주 일부 시민단체가 국가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았다면, 그것은 조직운영보조비가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공동프로젝트 사업비용(이경우는 그 사업에만 쓰입니다)일 것입니다. 이 경우도 총선연대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개별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의 상당액은 예전에 독재정권이 양성한 관변단체들에 지금도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들을 이용하던 시절처럼 지금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럴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나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 Q12 2000년 총선연대는 어땠나요? 궁금합니다.

- 2000년 총선연대 운동은 UN이 선정한 올해의 시민운동이었습니다.

### 1) 경과 및 재판결과

- 2002. 1.12 - 총선시민연대 발족, 412개단체로 발족, 최종 1054개 단체 참가
- 2000. 1.25 - 1차 낙천리스트 발표
- 2000. 2.02 - 2차 낙천리스트 발표
- 2000. 4.03 - 최종낙천리스트 발표
- 2000. 4.13 - 선거일, 낙선대상자 87명중 59명 낙선
- 2000. 4.21 - 총선연대 수입위원회 구성
- 2001. 4.13 - 총선연대 백서 발간
- 2003. 현재 총선연대 중앙지도부 7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계류중(1심벌금 500만원, 2심벌금 50만원)이와 별도로 이사철, 함종한, 김중위 전의원의 제기한 소송에 따라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 2) 활동 개요(2000. 1. 12~4. 30)

- 공천반대운동 결과 - 1·2차 공천반대자 중 43.1% 낙천
  - ▶ 공천반대자 총 102명
  - ▶ 각 당 공천자 총 58명 : 각 당 공천자 54명/각 당 비례대표후보 중 당선 가능권 4명
- 낙선운동 결과
  - ▶ 전국 낙선율 - 68.6%(59명)/ 22개 집중지역 낙선율-68.2%(15명)
    - 수도권 : 20명 중 19명(95%) 낙선/ 중부권 : 23명중 18명(78.3%) 낙선
    - 호남권 : 8명 중 6명(75.0%) 낙선/ 영남권 : 35명 중 16명(45.7%) 낙선
- 후원금현황
  - ▶ 총후원인 수 : 5,667명(4월 12일 현재)
  - ▶ 총모금액 : 350,191,652원
- 사이버 총선연대([www.ngokorea.org](http://www.ngokorea.org))
  - ▶ 총접속건수: 856,090건(4월 12일 현재)
  - ▶ 1일평균 : 10,569건/ 시민참여 게시판 : 45,674건
- 주요활동

- 총선연대 발족(1.12)
- 1·2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1.24/2.02)
- 1·2차 전국 동시다발 집회(1.30/2.19)
- 선거법 개정운동(1-2월)
- 공천철회운동 및 소송원고인단 모집(2-3월)
- 3·1절 유권자 독립선언의 날
- 명동성당 정치개혁국민광장(3.2-6)
- 유권자 약속 227만표 모으기 전국 버스투어(3.20-26)
- 레드2000 페스티벌 "가자 놀자 짝자 바꾸자"(4.8)
- 낙선명단 발표 및 낙선운동 결의대회(4.3)
- 권역별 지역별 낙선운동(4월)
- 총선연대 조직 현황 - 총 1104개 단체 참여
  - ▶ 광역 10개 단위/ 기초 53개 단위
    - 부산, 경기, 대전충남, 대구, 울산, 광주전남, 충북, 전북, 제주, 경남
  - ▶ 종교계 3개/ 부문 1개 단위
    - 카톨릭, 기독교(참가단체는 아님), 불교, 보건의료

## 2 낙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용 기준

### 1) 공천 반대 선정 기준 (요약)

- 부패·비리행위 / 불법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알선수재 등 공직범죄,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 연루사실
- 선거법 위반행위
  -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혹은 부심판된 사건
  - 17대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의 경고, 고발 사건
-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 출석률, 법안발의건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있어 불성실
  - 날치기, 방탄국회, 근거 없는 폭로 등 반의회적 행위와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등으로 정

- 치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반유권자적 행위
-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이 권력을 쫓는 철새정치 행위

-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시민사회가 중심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개혁을 주도한 행위

- 도덕성 및 자질

- 욕설, 몸싸움, 성희롱, 차별발언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
- 병역, 납세 등의 의무이행에 불성실하거나 재산, 경력에 있어 비도덕적 행태.

이상 6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였습니다.

낙천대상자 선정은 2004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단과 상임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선정하되, 형평성, 적정성, 국민감정 등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거치고, 유권자위원회가 심의하고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2) 공천반대 기준의 적용

- 총론 및 기준 적용

- 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반의회·반유권자 행위 중 경선불복종 및 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우선기준으로 적용하였고, 다른 기준은 병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이는 2000총선연대의 기준적용 사례, 여론조사 결과, 참여단체 의견, 유권자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공천반대자 선정에 있어 직책의 고하, 정당간 안배 등과 같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였습니다.

- 부패행위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정치인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주장이 엇갈려 불가피하게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낙천 혹은 낙선 대상으로 선정, 퇴출 운동을 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합니다. 기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낙천낙선 대상으로 선정기로 하였습니다.

- 아래 선정된 공천부적격자 및 선정근거 외에도 그 동안 자료조사를 통해 밝혀진 각종 정치인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다른 경로를 통해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부패, 비리 연루행위는 낙천대상자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차떼기, 책떼기 등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따른 부패정치인 퇴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총선시민연대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패연루 정치인에 대한 낙천, 낙선 요구가 압도적입니다.

-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부패, 비리 연루행위는 상급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있어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뇌물, 알선수재 등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에서 밝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반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이 불법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수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천반대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중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한 경우는 낙천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두고 있으나 본인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자금 수수사실은 시인하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에는 정치자금으로 준용해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공천반대자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기타 공직 진출 이전에 행한 개인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비록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떡값, 전별금 수수 등 일반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관행화 된 부패·비리 행위를 저지른 정치인 역시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해 낙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반의회, 반유권자 행위와 관련해 경선불복 행위 및**

**반복적인 철새정치 행태를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경선불복 등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 정치인의 행동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 정치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높은 비판 여론을 고려하여 경선불복 행위자는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권력을 쫓아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는 대세 추종적 정치행태와 정치인들의 원칙 없는 이합집산과 같은 정치행보가 유권자의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명백한 반유권자적 행위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철새정치 행태를 한 인사는 우선적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헌정파괴, 반인권 전력은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군사쿠데타 등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시킨 구시대 정치인,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반인권적 행적을 지닌 인사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습니다.

- 2000총선시민연대에 이어 5·16군사쿠데타 주역,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국가보위 비상입법회의의 관계자들은 모두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으며, 이 밖에도 각종 공안사건, 시국사건에서 고문, 은폐·조작, 가혹행위 등에 직접 가담하거나 책임이 있는 자들 역시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당선무효형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대상기간은 15, 16대 총선 중에 이뤄진 위반행위로 제한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및 선거법상 연대책임이 있는 자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는 사면, 복권 등과 관계없이 모두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그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은 다른 선정기준과 관련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단 선거법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만 향후 선거운동 기간 중에 돈 선거 행위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는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불성실과 지역감정선동·색깔론 등 반의회적 행위는**

**다른 부적격 사유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반대 선정기준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부패행위에 이어 의정활동에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정치인에 대한 퇴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행정감시는 뒷전으로 미뤄 둔 채 의원의 특권만을 누리거나 근거 없는 폭로, 지역감정 선동, 색깔공세 등으로 반사적 정치이익만을 쫓고 있는데 대한 유권자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 이런 여론을 반영해 의정활동 성실성의 기본척도가 되는 본회의 출석이나 대표법안 발의수에 있어서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예컨대 출석률이 저조하면서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다른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반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의 빈도나 수위는 많이 줄었지만 각종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언행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정도가 심한 사례를 선별, 다른 사유와 병합하여 공천부적격자 선정근거로 삼았으며, 색깔론 발언으로 수구냉전적 이념공세를 벌이거나,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 없는 폭로와 같은 반의회적 행위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다른 사유와 함께 고려하여 공천부적격자 선정근거로 삼았습니다.

**도덕성 및 자질과 관련해 성희롱, 비하발언, 욕설 등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

**도로 심각한 경우에 다른 부적격사유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반대 선정기준의 하나로 적용하였습니다.**

- 국회의원이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의 성실성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시민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결격사유를 적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정보로만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16대 의정활동과 관련해 보유재산과 직무간에 발생한 이해충돌은 다른 부적격 사유와 함께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검토하였습니다.

- 한편 의정활동 중 욕설(폭언, 막말), 몸싸움, 성희롱, 차별(비하)발언 등으로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거나 자질부족을 드러낸 의원은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다른 부적격 사유와 종합해 낙천대상자 선정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를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를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 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의 경우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표결기록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 참여하는 단체들간의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법안·정책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태도를 다른 부적격 사유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